2013년도
우수연구보고서 및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년도 우수연구보고서 및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2014·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www.nrcs.re.kr

2013년도
우수연구보고서 및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4.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년도
우수연구보고서 및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2014.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목 차

I 2013년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우수과제 / 1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2. 국토연구원 10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4. 산업연구원 17
5. 에너지경제연구원 19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7. 통일연구원 25
8. 한국개발연구원 28
9. 한국교육개발원 31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
11. 한국교통연구원 39
12. 한국노동연구원 41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14. 한국법제연구원 47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3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5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9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2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5
21. 한국행정연구원 68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5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0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2
25. 육아정책연구소 87

목 차

Ⅱ 2013년도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우수과제 / 91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95
2. 국토연구원 ····· 9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0
4. 산업연구원 ····· 103
5. 에너지경제연구원 ····· 106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0
7. 통일연구원 ····· 113
8. 한국개발연구원 ····· 116
9. 한국교육개발원 ····· 119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24
11. 한국교통연구원 ····· 128
12. 한국노동연구원 ····· 132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37
14. 한국법제연구원 ····· 14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4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47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51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5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8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61
21. 한국행정연구원 ····· 164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68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70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73
25. 육아정책연구소 ····· 178

목 차

Ⅲ 연구기관 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 183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정도 ····· 186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188
1-3-2. 협동연구 추진정도 ····· 189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192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194
2-1-1. 리더십 ····· 201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205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207
2-2-2. 노사관계 선진화 ····· 209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210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212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13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215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217

I 2013년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우수과제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국토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통일연구원
8. 한국개발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한국교통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 한국행정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5. 육아정책연구소

Ⅰ 2013년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우수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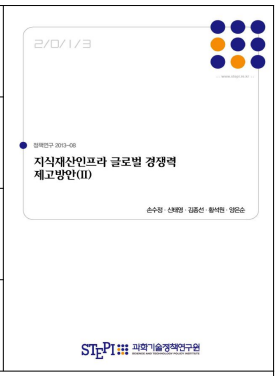
□ 우수연구과제 선정기준

- 연구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우수연구과제(연구보고서 우수성) 후보로 확정
- 연구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우수보고서 사례를 연구기관 평가단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

□ 우수연구과제 현황 : 25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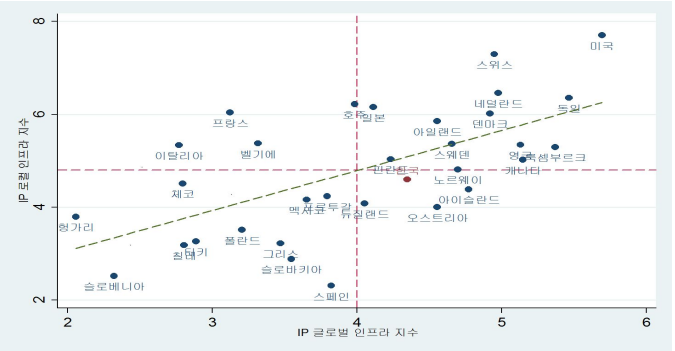
연구기관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과학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Ⅱ)	손수정
국토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배순석
대외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배찬권
산업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김정홍
에너지	수송연료 가격과 자동차 연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지연
정보	ICT 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 산업별 최적 연구개발(R&D) 규모에 관한 연구	김용재
통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KDI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조 만
교육	빈곤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류방란
평가원	기초학력 이하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인지진단 프로파일 분석	김희경
교통	항공사 노선 시장 분석을 통한 항공자유화에 대한 정책 방안 연구 : 한국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송기한, 김연명
노동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이규용
농촌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 분석	이병훈
법제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박영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보건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신화연
여성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홍승아
조세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연구	박 진
직능원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 분석	최동선
청소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김영지
해양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이정삼
행정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이종한
형사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강석구
환경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박정규
건축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심경미
대학원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평가대상 연구보고서가 없음.	
육아	KICCE 육아 물가지수 기초 연구	최윤경

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II)	
연구 책임자	손수정	
연구 참여자	신태영, 김종선, 황석원, 양은순	
필요성 (목적)	□ 지식재산(IP) 환경과 가치의 급속한 변화 속에 지식재산 전략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히 연계 ○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짐 - 특허소송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 ○ 지식재산의 가치 및 파급효과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R&D 및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확산 가능함 - 따라서 지식재산 경쟁력은 그 범주를 국내 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함 □ 지식재산 관련 투입(input) 및 산출(output)에 비해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 성과(outcome) 취약 ○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과 관련된 R&D 투입은 2012년 기준 GDP 대비 4.03%로 2위, 3극 특허(Triadic Patent)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 젊은 기업의 특허활동도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함(OECD, 2013) - 반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58억 6,800만 달러 적자로 비교대상 OECD 31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OECD, 2013) □ 지식재산의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인프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 ○ 정부의 1960년대 이후 S&T 인프라 구축 노력, 1980년대 이후 R&D 인프라 구축 노력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되었음 ○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정부의 정책 방향 설계를 위해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연구방법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을 위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세부지표(30개) 설계 ○ 국가가 구축하는 지식재산 인프라는 1) 국제사회에서의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Global IP Infra)와 2) 자국내 지식재산 로컬인프라(Local IP Infra)로 구분함 -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반영함 - 지식재산 로컬인프라는 전문인력(Player), 플랫폼(Platform), 연결통로(Pipeline), 문화(Culture),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Governance)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23개 지표로 설계함 ○ 중지표와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진단함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을 위해 설계된 총 30개의 세부지표를 조사하는 방법은 지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접근법을 적용 ① 통계DB 기반 조사 : OECD, World Bank 등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보 가능한 지표 ② 국가별 특허청을 통한 조사 : 특허청 담당자가 응답해줄 수 있는 지표 ③ 국가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 : 국가별 지식재산 전문가들에게 자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을 수행 ○ 조사대상은 OECD 32개국이며, ②와 ③조사를 위해 국가별 지식재산 전문가 및 특허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설문사례로 지표분석리포트 제공)
주요 내용	□ OECD 32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종합 수준 비교 분석 ○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종합지수는 비교대상 32개국 중에서 17위 수준임 - 지식재산 인프라 종합지수는 미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칠레,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이 낮은 수준을 보임 ○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은 OECD 상위 5개국 평균의 74.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식재산 창출 환경(R&D 투입 및 특허창출 수준)에 비해 인프라가 많이 취약함 - 한국과 비슷한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을 갖는 국가는 프랑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으로 평가됨 □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와 로컬인프라 수준 비교 ○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기술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인프라의 대내환경, 즉 로컬인프라에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임 - 반면 한국은 글로벌인프라에 비해, 로컬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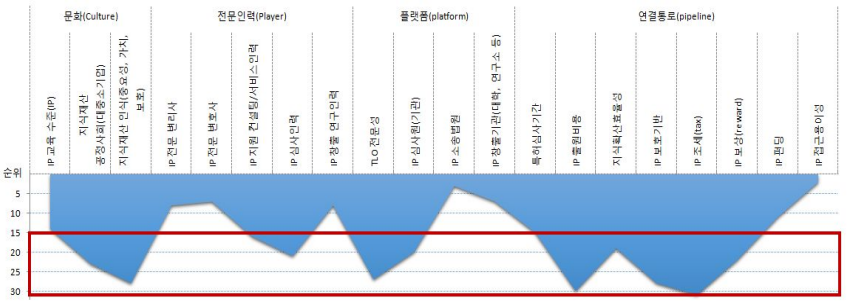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와 로컬인프라 수준



○ 한국의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 수준 중 특히 지식재산 보호수준, 침해행위 단속 및 처벌 수준 등으로 평가한 법규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경쟁력은 거버넌스를 제외한 문화인식, 전문인력, 플랫폼, 연결통로 인프라 경쟁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세부 지표별 경쟁력 순위



□ 지식재산 인프라의 파급효과

○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의 경우, 지식재산 인프라는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줌

- 지식재산 인프라가 한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혁신과 관련된 지식재산이 경제구조에 있어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인프라의 단계별 진화: 진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혁신역량 관점에서도 역량이 미흡한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짐

- 지식재산 인프라를 이해하고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속함

○ (성장단계)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해당함

-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추진함

- 특히 진입단계 국가와 성숙단계 국가와의 연계 및 협력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논의 및 이슈를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성숙단계)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들이 속함

- 자국 내 인프라 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임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지식재산 인프라의 진화 단계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설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함

- IP인식, 문화기반 조성 및 국가 IP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성장단계) 지식재산 관련 공정사회 토대 마련이 시급함

- 연구주체간 IP관리가이드 설계, IP법제 및 평가인력 양성, IP보상체계 설계 지원이 필요함

○ (성숙단계) 자국 내 인프라 보완 및 글로벌 공동이슈에 대한 대응 노력이 요구됨

- 글로벌 IP commons 구축, IP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 지원 과제

○ 지식자원의 확산을 위한 자원공유허브 구축 지원이 필요함

- 지식재산을 유입하고 이를 적정 활용모델로 가공하여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유입 후 금융자산, 공유지식자산, ODA 자산 등으로 가공함

○ 지식재산 관련 불공정 및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환경의 개선과 이러한 노력 및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을 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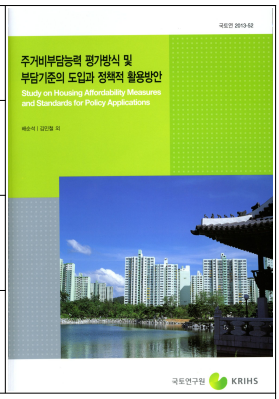
□ 한국의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지원 과제

○ 국내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인식 고취,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전문화, 연결통로 효율화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표 1〉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목표	문화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전문화	연결통로 효율화
세부 과제	① 대-중소기업간 IP 자산관리 시스템 설계/ ②산학연 협력 공동 R&D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 설계	③ 중소·중견기업 IP 멘토링 제도화 ④ IP 심사인력 양성	⑤ TLO 역량 강화	⑥ Innovation Box 도입 ⑦ 적정 IP 보상 제도화
추진 배경	인식 부족으로 IP 불공정/부당행위 만연, 국내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	전문인력 부재로 적정 IP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로 인한 손실 발생	3기 TLO모델 진입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한계로 기술이전 플랫폼기능 미흡	IP 활용에 따른 보상 제도 미흡으로 인해 사업화 유인 저하
기대 효과	IP 가치인식 및 IP 창출 유인 제고	IP 질적 제고, 활용 확대	TLO 역량 강화로 연구성과 확산 제고	주체간 유기적 연계 및 IP 흐름 활성화

	□ 한국과 같이 자연자원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지식자원은 자력에 의해 확보 가능한 자산이며, 지식재산의 기능 및 가치 증진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 -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 설계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국가 혁신역량, 성장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함

연구 기관명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책임자	배순석	
연구 참여자	김민철, 김진유, 하세정, 최영은	
필요성 (목적)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주택부족 문제가 크게 완화되었고, 주택시장도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으나, 저소득계층, 중산화가능계층 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도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임대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포한한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가의 경우 일단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택구입 후에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큰 부담이 되며, 주택관리비, 수선비에 주택관련 각종 조세공과금까지 더하여 소득의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게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입자들의 경우 최근 전세금이 치솟고, 월세수준도 높아 감당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큼.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소득계층별, 생애 주기별로 주거비부담능력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어느 정도까지를 가구들이 부담가능하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였음.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식과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거비부담능력을 실제로 평가하여 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함	
연구방법	□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주거비부담능력(affordability)의 개념 및 추계방법에 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바, 특히 외국 연구 및 이론들을 폭넓게 살펴보았음. □ 가구 소득·소비실태 및 주거비부담 관련 통계자료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주거실태조사 원데이터를 주축으로 활용하여 가계 소득·소비, 자산, 금융관련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원데이터 및 주택금융수요 실태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음.	

	□ 외국 사례조사 및 전문가 원고위탁 ○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별 전문가에 원고를 위탁하여 각국의 가구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부담기준 및 정책적 활용방식 등을 조사함 □ 가구 설문조사 ○ 주거, 비주거 생계비의 증가로 인한 가구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및 대응방식 등에 관한 가구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함 - 서울 및 수도권(경기 용인, 고양) 지방대도시 1곳(대구), 지방중소도시 1곳(전주)
주요 내용	□ 선진국의 주택정책 우선순위의 시대적 변천은 '주택 양적 부족 해소'→'질적 개선'→'주거비부담능력 문제 대응'으로 변화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택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을 평가하여 보면, 이제는 주거비부담능력의 완화가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임을 알 수 있음. □ 외국 연구들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비율측정방식(Ratio Measure), 잔여소득평가방식(Residual Measure), 행태적(주관적)방식(Behavioral Measure)을 대표적인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과 부담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중 잔여소득평가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율측정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위의 평가방식들을 이용하여 가구들의 주거비부담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계층별로는 1-2분위(10분위 척도)에서 주거비부담과도가구가 절대적으로 많게 나타나지만 중·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도 주거비부담과도가구의 비율이 10%정도로 나타남. 생애주기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주거비부담과도가구의 비율이 매우 큼.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가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비율과 잔여소득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두 가지의 평가방식들은 주거복지프로그램 대상가구의 선정과 지원 대상 가구의 공공지원 크기를 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비과도부담가구의 비율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정책통계 자료(지수)로 활용하기를 제안함. □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방식과는 별도로 각 지역시장에서의 평균적 주택구입능력 평가하는 지수(특정지역에서 중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의 비율)를 도입하여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비부담능력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평가지수 도입 및 활용방안

분류	평가지수 종류	지수의 내용	부담기준	활용방식
1	잔여소득 평가지수	총소득에서 기존 주거비 또는 적정주거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가구의 기타 소비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금액이상인지 또는 미달하는지를 평가함	•저소득층: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주거비 부담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함. •중저소득, 중산층: 별도의 적정 수준 모색 (소득계층별 일반적 소비액수 등 감안)	•저소득층:주거복지 지원액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설정기준 등으로 활용. 기준미달가구비율을 정책지표로 활용 •중저, 중산층: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2	소득대비 주거비비율 지수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경우 부담기준은 30% •한국적 기준 모색	•정책지표로 활용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

〈표 2〉 평균적 주택구입능력 평가지수 도입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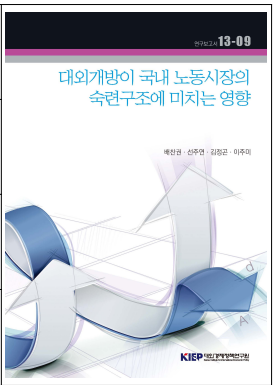
평가지수 종류	지수의 내용	지수의 장점	활용방식
중간소득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	지역시장에서 전체 주택 중 중간소득의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	PIR에 비해 주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음	•공공: 시장상황 및 지역 주택재고에 대한 주민들의 구입부담능력 평가자료로 활용 •민간: 주택건설계획 및 분양가격 책쟁자료로 활용

□ 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비 과도 부담가구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국민들의 주거비부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에서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하지만, 중·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택가격, 전세가격을 낮추고 주거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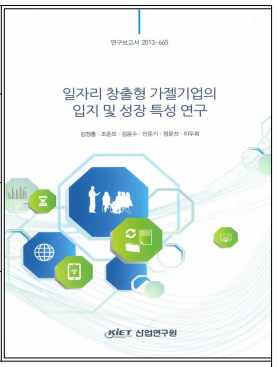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로 보면 신혼부부(최초구입자)와 고령가구들이 주거비부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자가거주 가구 및 고령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함.

연구 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	배찬권	
연구 참여자	선주연, 김정곤, 이주미	
필요성 (목적)	□ 외환위기 이래 숙련·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1996년 전체 취업자 대비 대졸자 비중은 14%였으나 2012년에는 28%까지 높아진 반면 고졸 이하의 비중은 1996년 80%에서 2012년에는 59%로 21%나 감소함. ○ 직종별로는 비생산직의 고용 비중이 1996년 28%에서 2012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남. ○ 고졸 평균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초대졸과 대졸 임금은 1998년 각각 106과 147에서 2010년에는 각각 115와 167로 대졸 임금의 상대적 상승이 뚜렷함(OECD, 2012). □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나 직종에 따른 고용과 임금 격차의 확대는 가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달하여 숙련·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에서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킴. ○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술발전과 무역의 확대는 노동의 숙련도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쳐 노동계층간 갈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숙련·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 격차의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지 살펴봄. ○ 특히 무역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과 기술발전과의 연관성, 그리고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FTA와 같은 대외개방의 확대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방법	□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93~2010)를 사용하여 고용과 임금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학력별, 직종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봄. ○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숙련노동을 정의한 후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와 그 요인을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봄. ○ 숙련노동의 수요 변화를 시기별로 산업내변화 (within-industry changes)와 산업간 변화(between-industry changes)로 분해하여 변화의 요인을 파악함. □ 국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숙련·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격차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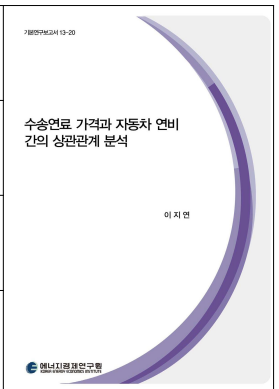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바, 선행연구의 기술발전 가설과 국제무역 가설을 토대로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 -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와 통계청, 한국은행,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 ○ 무역을 통한 해외기술의 전파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수입재에 체화되어 국내로 전파되는 해외기술지식의 양을 산업 수준에서 변수화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함.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품목과 교역상대국에 큰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비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교역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중첩지수 (Trade Overlap Index)와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함. □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숙련·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EU 세계화조정기금(EGF)과 미국 TAA의 사례를 조사함.
주요 내용	□ 고용과 임금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여건이 악화됨. ○ 대졸·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1993~2010 기간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IT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함. □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 고도화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 이 같은 관계는 세부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정밀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짐. ○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가죽·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짐. ○ 대표적 수출산업인 IT제조업은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 교역 비중의 축소됨에도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짐. □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변화에 의해 주도됨. ○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IT가 주도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해석됨. ○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기술발전이 숙련노동에 유리한 노동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 같은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에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짐. ○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짐. □ 교역의 확대는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의 비중으로 정의한 교역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요 수출품목이 기술집약적 품목으로 전환되었고 수출상대국이 선진국 일변도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된 교역구조의 극적인 변화를 반영함 □ 산업내무역의 증가는 국내 노동시장에 숙련편향적 변화를 유발하며, 해외아웃소싱의 효과는 교역상대국별로 다르게 나타남. ○ 무역중첩지수로 측정한 산업내무역의 증가는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시켜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임. ○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함. - 이는 신흥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국내 전통적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취한 결과로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독일 중간재와 숙련노동 간에 보완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는 주로 저급기술 산업에서 국내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임. □ 유럽과 미국은 각각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라는 무역피해지원제도의 운영을 통해 일찍이 무역자유화의 부작용에 대처해왔음. ○ 미국과 유럽의 무역피해지원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시행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지원 내용에서도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임. ○ EGF와 미국 TAA는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을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고 있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향후 노동의 숙련도에 따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역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과 산업내무역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는 숙련노동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의 확대와 함께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어 숙련·비숙련 노동간 격차의 확대는 가속화할 전망임.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대외개방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살펴볼 때,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대외개방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확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 지원 중심으로 전환 - 무역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비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므로 근로자 지원 대책은 무역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경쟁력이 낮은 기업 역시 개방의 충격을 크게 입을 수 있으므로 기업 지원은 필요하나, 보다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 -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유럽 EGF와 미국 TAA는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지원수단의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됨. - 무역피해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무역피해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 EU는 EGF의 지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운영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은 TAA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농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점차 확대해 왔음. - 장기적으로 농업과 농민 지원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연구 기관명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연구 책임자	김정홍	
연구 참여자	조준모, 김윤수, 안준기, 정윤선, 이두희	
필요성 (목적)	□ 국정 최우선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연구 필요 ○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고용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함 □ 가젤기업에 의한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가젤기업을 각 지역에서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둠 ○ 이러한 가젤기업의 유치, 육성을 통해 지방에서 고용률 및 성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연구방법	□ 통계분석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전체 약 7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가젤기업을 약 7천개 정도 선별해 분석함 □ 설문조사 ○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 등 총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과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평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실증분석 ○ 고용노동부 데이터로 기존 이론에서 제기된 가젤기업 관련 가설을 검정하고, 입지결정 및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주요 내용	□ 가젤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요인 제시 ○ 가젤기업을 정의한 다음, 해당 기업과 지역에 존재하는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의 개선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제시함 □ 통계적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지역별 가젤기업 특성 제시 ○ 고용보험DB를 분석한 결과, 가젤기업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191명 규모에서 371명	

	규모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양질의 산업에 속해 있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판명됨 □ 설문조사에 의한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 간 두드러진 행태 차이 비교 ○ 입지여건이나 성장여건이 양호한 요인에 대해서는 양 기업간 평가 차이가 적었으나, 열악한 요인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결국 열악한 요인이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젤기업은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등 무형자산 내지 장기적 성과를 중시한 반면, 비가젤기업은 유형자산 내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함 □ Henrekson가설 및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에 대해 회귀분석 ○ 가설검정 결과, 가젤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Henrekson의 제3가설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채택되었음 ○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기업, 산업, 지역, 정책 등 4대 부문에 속한 세부 변수가 가젤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고루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를 위한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회의시(2014년 2월 3일, 2월 7일)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젤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상기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음 ○ 상기 건의가 반영되어 박대통령께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가젤기업 육성을 위해 1조 1,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문화일보 2월 25일자 3면 등 주요 일간지)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8대 정책 대안 제시 ○ (가칭) '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의 수립, 투자-고용-입지를 연계한 법인세 환급세 도입, (가칭) '지역산업 인력수급위원회' 설립 등 8개의 세부 정책방안을 제안함 - 그 중 (가칭) '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은 상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음 - 또한 (가칭) '지역산업 인력수급위원회' 설립은 2011년 김정홍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상기 보고서에서 텍사스주의 사례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제시함으로써 2014년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연구 기관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수송연료 가격과 자동차 연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책임자	이지연	
연구 참여자	원두환	
필요성 (목적)	□ 우리나라 수송용 연료소비 절감의 필요성 ○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시장에 발생하는 충격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 이산화탄소 등의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 등이 수송연료연소를 통해 발생 □ 수송용 연료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 ○ (연비규제) 자동차 소비자 즉 휘발유 소비자들이 선택 가능한 차량이 연료 저소비형으로 변화하도록 유도 ○ (세제) 연료가격의 상승을 통해 연료수요의 감소를 유도 ○ 연료소비 절감에 어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 고유가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연비규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연료소비 감소 가능 □ 관련 정책의 효율성 판단뿐만 아니라, 수송연료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도 자동차 연비 수요와 휘발유 가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본 연구는 수송연료 가격변동이 연료 효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비규제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수송연료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연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표 □ 이에 (1) 연료가격과 판매차량의 연비와의 상관관계 (2) 상관관계의 특성 (3) 연비가 좋은 차량 구매 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연구방법	□ 신차의 평균연비가 연료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 ○ 종속변수를 신차 판매량으로 정의하고 설명변수에는 수송용 연료가격이 포함되어 수송용 연료가격이 신차 판매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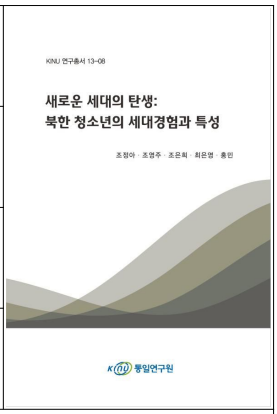
	○ 분석 모형은 동일지역의 분위별 차량판매량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패널모형의 특성을 가짐. ○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유형별로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 경형트럭, 승합차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 □ 연비 분위를 기준으로 관측치를 분류하여 각각의 연비분위에 해당하는 차량 판매량을 관측치로 취하여 분석을 진행 ○ 연비의 분위를 나누고 분위별 판매량을 관측치로 취할 경우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연비분포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음. □ 추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연비분위별로 차량판매량의 연료가격 탄성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연료가격이 변할 때 개별 소비자의 연료비용 변동을 분석
주요 내용	□ 연비수준별로 연료가격 변화에 대한 차량판매량 반응 분석 ○ 연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량 하락과 상승의 분기점이 되는 연비는 10km/ℓ~11km/ℓ 수준으로 도출 ○ (승용차) 소비자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승용차 연비가 11.36km/ℓ 보다 낮은 경우 구매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상인 경우 구매할 확률이 높아짐. ○ (SUV) 다목적차량의 경우 이 보다 약간 낮은 11.08km/ℓ를 기준으로 연비수준이 이하인 차량은 판매가 감소할 확률이, 이상인 차량 판매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짐. □ 연료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연비구간별 판매량의 변화율을 도출 ○ (승용차) 연비가 7km/ℓ인 차량의 판매량은 연료가격이 1% 상승할 경우 6% 가량 감소, 반면 연비가 12km/ℓ 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며 연비가 높아질수록 증가율도 상승 ○ (SUV) 연비가 7km/ℓ인 차량의 경우 판매율이 7.20% 감소하고 15km/ℓ의 경우 3.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 변화가 승용차에 비해 전 연비구간에서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료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주행연료비용의 변화 분석 ○ 연료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자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연비가 좋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의 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비용의 변화 도출 ○ (평균차량) 연료가격평균 1,584원/ℓ를 현재 연료 가격으로 가정하였을 때는 연료 가격이 1% 증가 시 월간 연료비용은 170,440원에서 167,941원으로 약 2,500원 하락 ○ (휘발유차량) 현재 연료가격이 1,900원/ℓ라고 가정할 경우 150,139원에서 147,390으로 약 2,749원 가량 하락 ○ (경유차량) 현재 연료가격이 1,700원/ℓ라고 가정할 경우 187,771원에서 183,944으로 약 3,827원 가량 하락 ○ (LPG차량) 현재 연료가격이 1,100원/ℓ라고 가정할 경우 114,746원에서 113,638으로 약 1,108원 가량 하락

	○ 종합하면, 연료가격의 1% 상승에 대하여 소비자가 연비가 좋은 차량을 소비함을 통해 대처할 경우 연료소비가 줄어듦은 물론 높아진 연료가격 하에서도 평균 연료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본 연구는 연비제도의 정책적 효율성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 ○ 연비제도는 세제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인 까닭에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 보다 유연한 정책 실행이 바람직 할 수도 있음. ○ 수송연료 가격과 연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 판단의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연료소비의 절감 및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료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연비기준의 지속적인 조정과 강화가 필요 ○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 연료가격은 연비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의 신차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연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남. ○ 단,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기준연비는 11km/ℓ 수준으로 평균연비제도의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연비 12.4km/ℓ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연료비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연비 높은 차를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비등급의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연비 자동차의 판매증가에도 불구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인한 리바운드효과(운행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가능성 존재 ○ 경유의 높은 연료 효율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유럽에서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 자동차가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유럽의 연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유자동차의 판매증가 ○ 경유 자동차의 판매증가에도 불구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인한 리바운드효과(운행증가)와 대형 자동차 선호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존재(Schipper and Fulton, 2008) ○ 2014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업체는 승용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바 실제 운행증가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여부에 대해 관찰이 필요

연구 기관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ICT 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 산업별 최적 연구개발(R&D) 규모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	김용재	
연구 참여자	김규남, 정현준	
필요성 (목적)	□ 성장정체에 직면한 ICT 부문의 시장환경의 개선 필요 - 국내 ICT 부문은 새로운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 미흡, 벤처 생태계의 상대적 부진,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있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ICT 부문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있음 - ICT를 주력산업화 하여 고도화 하고 분야별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시장환경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 분야별 혁신적 ICT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필요 - ICT 부문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ICT 세부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큰 범주에서는 각각의 ICT 세부산업별 중점 연구개발의 추진 우선순위, 작은 범주에서는 각 기업 및 벤처의 투자규모 산정 및 투자전략을 정비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활성화 방안 시급 □ ICT 부문의 창의적 혁신을 통한 발전방안 수립 - 부가가치 생산의 주체가 기존의 망사업자 중심에서 ICT생태계로 변화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중요성이 증가. 따라서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방안 및 ICT R&D의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 □ ICT생태계의 각 부문별 환경분석 및 최적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모델제시 - ICT 부문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성장정체에 직면한 ICT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차별화로 시장 개선안 제시 □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ICT 부문의 중장기 기술 혁신 전략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 - 신정부 출범 후 ICT 부문의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ICT가 과학기술 및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연구방법	□ 문헌조사 - ICT 각 분야별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분석, 시장전망자료 분석, 관련분야의 인력 수급전망자료 분석 - OECD Internet Economy data,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IT Service, IT Manufacturing, Sofeware분야 등 과거 10여년간 분야별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분석 - Gartner, IDC등 ICT 각 분야별 시장전망자료 분석 □ 모형 수립 및 분석 - 극단치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소개, ICT R&D 분야로의 적용 방법론 및 제약조건,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을 기술 - 각 세부산업 별 축적된 성장률 데이터를 이용한 형상매개변수(shape parameter) 측정을 통한 연구개발의 특성 정의(Paradigm shifting innovation, Incremental Innovation 등) - 모형 분석을 통해 각 산업군별 산출된 최적 연구개발 지수를 이용해 세부산업별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헌조사 및 모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들을 도출
주요 내용	□ ICT 시장환경의 변화 및 전망 - ICT 시장 환경의 변화 요인과 특징을 살피고 미래전망을 기술 - ICT 하드웨어의 성장에 비해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시장의 성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ICT 산업의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非ICT 산업을 상회 - 모바일 시장이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이 등장하였으며,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가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스마트 생태계로 재편되었으며, 플랫폼과 콘텐츠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 - 스마트 생태계의 등장으로 기술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중요성과 시장지배력에 기인한 기업 간의 경쟁이 기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전역으로 확산 □ ICT 세부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및 세부 산업별 성장률 현황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투자 주체별, 연구수행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 - ICT 제조업의 R&D 투자규모가 ICT 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ICT 서비스업의 R&D 투자는 그 규모가 ICT 제조업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각 세부 산업군 별 최적의 연구개발에 대한 수리적 모형 제시 - Extreme Value Distributions (Frechet, Weibull, Gumbel)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특성 정의를 통해 각 세부산업군 별 최적의 R&D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제시

	- ICT 산업의 세부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ICT 제조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등 ICT 세부 산업별 R&D 최적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CPND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상대적 R&D의 중요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존 국내외 R&D 지수 관련 방법론에 대한 분석 및 최적 R&D, R&D Expenditure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ICT 생태계의 분야별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모형 적용 결과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 ICT 생태계의 세부산업별 성장률의 비교 및 요인분석 - 정부 R&D 투자 현황과 산정된 R&D 최적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부 R&D 투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 등 ICT 서비스업 분야의 R&D 예산 확충 - 미국, EU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가적인 진흥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제조업에 기반한 ICT 하드웨어의 10분의 1에 불과하나 향후 시장전망이나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분야임 □ 다양성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에 주안점을 둔 정부 정책의 실행 - ICT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온 혁신의 근간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부터 진화가 이루어졌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적인 난이도도 중요하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한 산업으로, 다양성의 극대화가 여느 산업보다 중요함 □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콘텐츠 및 플랫폼 영역의 창업 활성화 - 우수한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문 보육 기업을 선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 시급 -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의 수립 필요 □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및 인식의 전환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수인력 부족, 가치 인식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며, 이는 소극적인 재투자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는 등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였을 때 전 ICT 세부영역 중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

연구 기관명	통일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연구 책임자	조정아	
연구 참여자	조영주, 조은희, 최은영, 홍민	
필요성 (목적)	□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심성체계가 변화하였고, 이는 북한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1990년대에 출생하여 기본적 가치관과 규율체계, 자아가 형성되는 유년기를 사회규범의 해체와 규율의 부재 속에서 보낸 청소년층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유년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자아에 각인된 생애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쉽게 변화될 수 없는 불가역성을 띠며, 이러한 생애경험과 인성특성이 동시대의 특정 연령집단에서 일반화된 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사회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북한의 ‘새 세대’는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이자 변화의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이에,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특질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집단”을 의미하는 ‘세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심층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1990년대에 출생하여 유년기와 성장기에 경제난과 시장화를 경험한 북한 ‘새 세대’의 생애경험의 특성을 파악함. □ 북한 ‘새 세대’의 생애경험이 이들의 가치관, 규율체계, 자아 및 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이와 같은 세대의 특성이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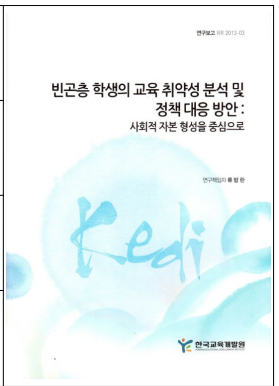
연구방법	□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과정과 이들의 세대경험 및 특질을 탐색함. □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구술사, 생애사 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함. ○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과 그러한 성장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신념, 감정, 가치체계, 사고방식 및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방식 등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자료가 중요 ○ 따라서 북한출신 청소년 50여명에 대한 생애사적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연구에 필요한 질적 자료를 수집・분석 □ 문헌자료 분석 ○ 북한의 공간문헌, 북한 사회 동향 관련 자료, 신문 및 방송 등의 일차자료를 활용 ○ 탈북자 관련 NGO 등에서 수집·보고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및 가치관, 행위양식의 변화를 유추 □ 워크숍 개최 ○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의 과정을 공유
주요 내용	□ 청소년들의 생애경험과 생애경험의 주관적 수용,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환경, 정치경제적 사건 등을 개괄함. □ 새로운 세대의 미시적 경험세계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영유아, 청소년기의 극심한 기아와 궁핍, 죽음의 공포를 이들은 어떻게 체험했고 그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체험이 이들의 신체와 의식과 언어에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검토 ○ 1990년대 경제난과 뒤이은 자생적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지리적 이동성이 증가하고 외부문화와 사물이 유입됨에 따른 청소년들의 경험의 변화를 탐구 ○ 이들 출생집단이 국가, 가족, 학교, 또래집단 속에서 맺는 관계질서의 해체와 재구성, 변화에 대해 검토 □ 청소년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세대경험들이 어떻게 누적되고 상호결합하면서 한 인간을 형성해내고, 그 집합체로서의 세대를 형성해내는가를 살펴봄. ○ 다양한 세대경험 속에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결속하는 '정서와 병목현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세대경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화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특질을 지니게 되는 '세대단위'의 맹아들을 검토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세대경험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성이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 ○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당장 북한 사회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결정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단기적으로 북한당국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문화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문화매체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임. ○ 그러나 실용주의적이면서, 비정치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함. □ 남북한 사회통합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위한 후속연구 필요성 제시 ○ 이와 같은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 특성이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지 지속적인 주목과 분석이 필요함. ○ 탈북 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로 이주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의 분화과정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북한 청소년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연구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연구 책임자	조만	
연구 참여자	김영일, 송인호, 윤희숙, 박신영, 손재영, 이상영, 이창무, 한중호, 홍기석	
필요성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등 시장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변화의 진행,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중·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을 재조명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요인 및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금융의 급성장 등 구조 및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점검 - 부동산세제, 대출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 분석 -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시장 관련 현안 분석과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 통계자료분석 및 문헌조사 - 전국 부동산 기초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이외의 관련통계 등 현재 가능한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적정규모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 발전전망 등을 계량적으로 도출 -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문헌 및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과제 도출 □ 정책연구 및 사례연구 - 지금까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외국의 부동산 시장 발전 및 그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부동산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이해수렴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광범위하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구 중간 결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의 객관성, 공정성, 엄밀성 제고	

	□ 특히 2011년 신설된 KDI의 실물자산연구팀을 주축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하여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노력
주요 내용	□ **고령화, 1인·2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 -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주택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향후 1·2인 가구의 증가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며, 노년가구의 주택선호가 중형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제2장, 제3장) -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이민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극소형주택의 대량공급은 주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체계화 및 효과적인 정책조합 구성:** - LTV규제 수준에 따라 통화정책, 부동산세제, 그리고 거시경제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증폭 또는 감소되고 (제4장, 제5장),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중 양도세가 주택투자율 하락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제6장) -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대출규제를 활용하되, 저소득·저신용층,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를 별도로 추진 - 양도세 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시도하고, 양도소득의 감면혜택 확대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시도 - 위기상황에 대한 시장개입을 상시적·비상시적, 사전적·사후적 개입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제7장)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부문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타겟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고 (소득최하위 10% 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6%에 불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들 간의 형평성·균형성 제고 (제8장, 제9장) - LH공사에 대한 집중도 완화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재고를 지자체,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으로의 이관 등을 통하여) -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등 월세시장의 정보인프라 확보, 보증제도의 활용을 통한 월세 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전세보증금 및 전세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그리고 670만호에 달하는 미등록민간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입 등 (제10장)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책대안 제시 ○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 분석**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금융의 급성장 등 구조 및 환경 변화 진행에 따른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점검**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제시

	- **부동산세재, 대출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 분석**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의 시장안정화 효과, 그리고 저소득·저신용층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의 정책시사점 논의 -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시장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제시** 기존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개선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들 간의 형평성·균형성 제고, LH공사에 대한 집중도 완화,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등 월세시장의 정보인프라 확보, 전세보증금 및 전세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제시 □ 정책기여 실적 -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대출제약 완화 (LTV 60%→70%, DTI 자율 적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13.4.1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 확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 법무부 ·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13.8.28 -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강화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 대해서 최대 10년 이후 60%까지),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13.12.4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제 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국토교통부, '13.12.30 - 상기 언급한 임대주택시장 TF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월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3개 정책방향, 9개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 사항 제시, "**임대주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3.12.31 - **주거급여법 제정**, '14.1.24

연구 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명	빈곤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류방란	
연구 참여자	정바울, 김성식, 조상식, 송행희	
필요성 (목적)	□ 빈곤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빈곤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가족 해체, 근로빈곤층 등장 등의 현상과 중층적으로 결합되고 있음. 아울러 교육과 노동시장 접근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 배제 의 특성도 드러남. 취학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배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질지 모르나, 교육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배제는 암묵적으로 작동하기도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빈곤을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 등의 물적자원 보충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빈곤의 중층적 특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빈곤층 학생이 처한 중층적 어려움이 교육적 취약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복합적인 과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빈곤층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조직·제도를 아우르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작용하는고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 함양과 성장을 모색하는 접근 방법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음 ○ 빈곤의 특성과 규모, 교육복지, 사회적자본 관련 연구물과 외국사례를 안내한 누리집 자료를 참고함. □ 사회적 자본 수준이 학습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함.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 연구” 의 2차와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수준이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학교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빈곤/가정 및 지역의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완화 가능성, 학교특성/교육복지정책이 사회적 자본수준을 향상 가능성을 회귀분석과 다층분석을 적용함. □ 학교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관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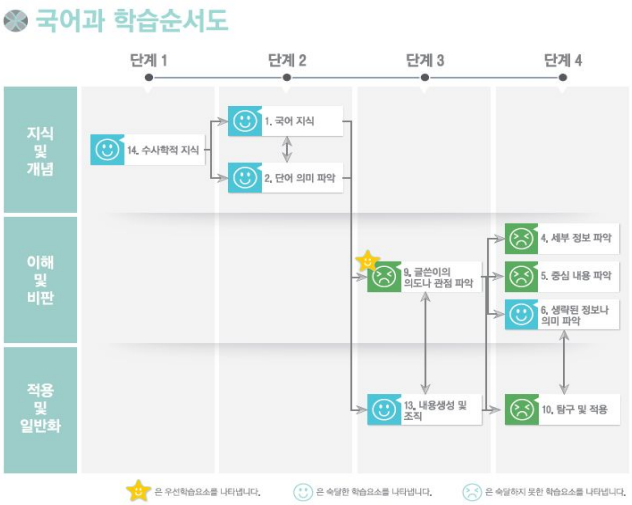
	○ 연구 기간과 인력을 고려하여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 세 곳 소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두 학급 정도 수업관찰을 진행한 후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2~3학년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 학생이나 차상위계층의 학생을 면담하고 이들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도 추가로 면담함.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함.
주요 내용	□ 선행 연구를 통해볼 때 빈곤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 가족해체와의 결합, 빈곤의 덫, 근로빈곤층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는 바, 이중 교육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사회적 배제 예방으로 볼 수 있음. 사회적 자본 개념으로 빈곤층 학생의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행 연구를 종합하며 사회적 자본을 '아동 청소년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데 기능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신뢰, 지지, 협력으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고 접근함. □ 학생들의 학교 학습과 적응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가용한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빈곤층 학생은 가정, 지역, 학교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함. ○ 사회적 자본은 학교 적응, 수업 태도, 학업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됨. ○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모교육수준, 사전 성취 수준을 통제한 경우,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음. ○ 학교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학교 적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 성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음. ○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의 불리함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음. ○ 빈곤층 학생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학교장의 리더십 등 학교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수준에서 빈곤층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 향상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 □ 학교 방문을 통해 수집한 면담 자료 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빈곤층 학생 중 가족 해체와 돌봄 결여 등으로 부모와 안정적인 지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학습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교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사의 기대도 낮은 편임. ○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들은 수업 내 활동을 통하여 무기력한 학생들을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중학교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개별적인 이해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 학교에서 교사들(특히 중학교)은 여러 업무, 근무 여건,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층 학생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빈곤층 학생들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으나 서로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빈곤층 학생을 위한 정책 사업이 곧바로 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학교내 교사 간 관계 특성,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형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촉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히 빈곤층 중학생을 위한 지역 사회내 신뢰에 기반한 관계망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도 빈곤층에게는 취약성으로 작용함. □ 빈곤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영국의 EAZ(Education Action Zone) 정책의 단명을 통해 빈곤층 학생을 위한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관민이 협력해야 하되 공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곳은 민간에 미루지 말아야 하며,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부모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변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음. ○ 미국의 할렘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HCZ(Harlem Children's Zone)는 빈곤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는 옹호자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며, 이 옹호자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며, 아동 청소년만이 아니라 부모, 지역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이 HCZ를 모델로한 정부주도의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정책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의지를 중기반으로 한 공모제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표방하는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하여 많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며 급속하게 확산된 이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교육적 관계의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학교 수준에서의 학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 교사 개인 수준에 맡겨진 학생과의 관계를 학교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관계 형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 조직 차원의 대응 필요 ○ 교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빈곤층 학생의 삶의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에 관련 내용 포함 ○ 교사 개별적인 대처에 맡겨진 학생 이해, 신뢰 관계 형성 등을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간 정보 공유와 협의 구조 마련, 자발적 교사 모임 지원, 학교장의 리더십 필요 ○ 학생간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활동 활성화 또래 집단이 긍정적 경험을 통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 등 활성화 일부 빈곤층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 운영 사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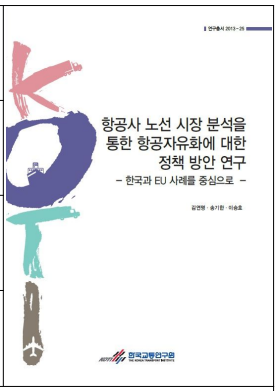
	□ 학교 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학급 규모 축소, 보조교사 혹은 협력교사의 적극적 활용, 장기적인 성장 멘토제를 통해 빈곤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촘촘한 관계망 형성 ○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와 지역사회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증진 독려, 빈곤층 학생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 구성 □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과 신뢰 구축 방안 ○ 학교가 빈곤층 학부모와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매체 활용을 통한 신뢰 형성 노력 ○ 학교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을 매개하여 학부모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 마을단위의 포괄적 교육공동체 형성 지원 ○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으로 교육적 관계자본 증진과 학부모 지원,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의, 조정, 공동사업비 마련, 민간경상비 이전 등의 관계망 구축을 통하여 학생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역사회 기관의 교육적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 ○ 여가부, 복지부와 협력하여 가족지원과 자녀 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족지원센터에 자녀를 위한 가정방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한 방임의 예방 및 복합적인 빈곤 형태를 고려한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함.

연구 기관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명	기초학력 이하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인지진단 프로파일 분석	
연구 책임자	김희경	
연구 참여자	박종임, 강태훈	
필요성 (목적)	□ 기초학력 이하 학생의 다양한 학업성취 특성 파악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고,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회에 나아가서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학교교육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강화. ○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학습부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부진 요인 및 학습 특성에 대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초학력 이하 수준의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인 '보통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맞춤형 학습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개별학생 진단 필요 ○ 국가 경쟁력을 갖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개별화된 교육', '맞춤화된 적시학습'이 강조되고 있음. ○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이끌어내어, 꿈과 끼를 살려주고 학생이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행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식이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파악하고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야 함. ○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의 현재 수준을 상세한 프로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피드백 방식은 더 이상의 학력경쟁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업적 특성, 소질, 적성 등의 측면을 이해하여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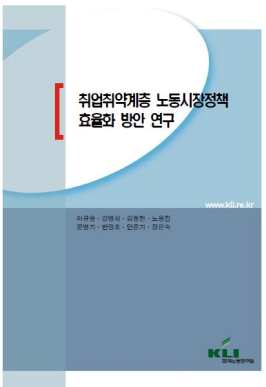
연구방법	□ 국내·외 맞춤형 학습과 학습순서도, 평가 결과 맞춤형 피드백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실시 □ 연구 방향, 분석방법,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 도출을 위해 교과 및 평가 전문가, 현장교사 등의 의견 수렴과 교육부 관계자와의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인지진단모형 적용, 인지진단 프로파일 특성에 따라 기초학력 이하 학생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다층잠재계층분석 등의 통계 분석 실시
주요 내용	□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과, 수학과 평가결과 자료에서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상세한 학습요소에서의 숙달도, 즉 학업성취 프로파일 특성을 분석 ○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정보는 각 학생이 해당 학습요소를 숙달하고 있을 확률로 산출 ○ 개별 학생마다 고2 국어과는 총 14개 학습요소, 수학과 총 10개 학습요소에 대한 숙달 수준을 산출됨 □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분석된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의 학업성취 프로파일 자료에 다층잠재계층분석을 적용, 학업특성이 비슷한 학생끼리 유사집단으로 분류 ○ 국어과 3개 집단, 수학과 2개 집단 도출 ○ 집단별로 학습요소에 따른 학습강점 기반의 집단 유형화 - 국어과: 집단1의 경우 문법, 문학, 수사학적 지식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2의 경우 텍스트 이해에 강한 것으로 나타남. 집단3의 경우 전반적 학습요소에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수학과: 집단1의 경우 계산, 원리, 이해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2의 경우 전반적 학습요소에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분류된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별 학습순서도를 개발 ○ 네 과정을 거쳐 학습순서도 개발 - 인지진단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잠재집단을 분석 → 잠재집단별로 인지진단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잠재집단의 특성을 유형화 → 잠재집단별로 학습요소 간의 관계성 및 위계를 분석하여 학습순서도 추출 → 학습순서도 초안을 검증 및 수정·보완 ○ 집단별 학습순서도 개발 시 학생들의 학습요소 숙달 패턴에서 학습요소 간의 포함관계를 검토하여 학습요소간의 위계성을 파악 □ 개별 학생의 강약점인 학습요소, 학습순서도 상에서 병목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선순위로 학습해야할 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용 평가결과표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유사한 학업성취 프로파일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이라도 학습순서도 상에서 이미 습득한 학습요소, 앞으로 습득해야 할 학습요소에 개인차가 있음. □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평가결과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설계하였음. ○ 온라인 평가결과표 시스템은 게시판을 통한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과, 동영상 강의, 유사문항 연습 등의 보정학습 콘텐츠와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최신 측정이론인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평가결과 분석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상세한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과학적 자료분석을 통해 학습순서도 개발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순서도 개발 또는 타당화 연구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공교육에서 개별 학생에게 1:1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별 학습순서도'는 학습의 주요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 집단별로 맞춤형 교수·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시간·비용·인력 면에서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음. □ 개별 학생은 학교에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집단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고, 동시에 교실 밖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강약점 및 우선학습요소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제안된 평가결과표는 점수 위주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 세부 학습요소별 강약점에 대한 정보,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순서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평가를 더 이상 점수화, 서열화, 상벌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 □ 학습부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지만 학습부진학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었음. 본 연구와 같이 기초학력이하 학생의 학습부진 요인 및 학습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학습부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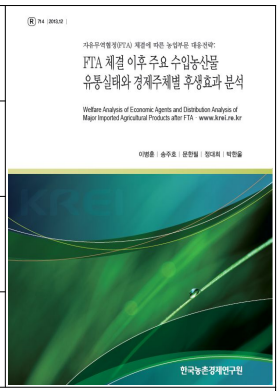
연구 기관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항공사 노선 시장 분석을 통한 항공자유화에 대한 정책 방안 연구 : 한국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송기한, 김연명	
연구 참여자	이승호	
필요성 (목적)	□ 현재 정체되어 있는 한국과 EU의 항공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 및 항공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우리나라는 회원국마다 다양한 국적사가 있는 EU라는 강자와의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한국과 EU는 2010년 FTA 조약에 서명하고, 2011년 잠정 발효되었음에도 EU와의 항공자유화와 관련된 협상은 정체되어 있음 - 이는 우리나라와 EU 항공사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미래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EU가 요구하는 수평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에 근거한 EU 국적 항공사들의 무차별적 협공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인 등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 ○ 이에 따라 국내 항공운송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항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항공운송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항공자유화 추진이 필요함 - 항공자유화협정 지연은 제3국가의 항공사들이 한국과 EU의 운송 시장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한국과 EU 국적의 항공사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 ○ 따라서 한국과 EU는 항공자유화에 대한 빠른 정책적 판단을 통한 협정 진행이 필요하며, 항공자유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와 항공사들의 경쟁력 확대 및 이용자의 운임과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항공자유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한 항공자유화 정책 방안 제시 ○ 중동지역 항공사들의 경쟁사항을 포함하여 한국과 EU 항공운송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자유화 효과 평가 모형을 개발함 ○ 조사된 기초자료와 개발된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정량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항공자유화 협정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과 EU 항공자유화 추진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한국과 EU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구축을 통한 시장 현황 분석 ○ 직항노선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 구축 및 분석 제공 ○ 한국과 EU 항공노선 시장 내 제3국 항공사 시장 진입 현황 분석 □ 항공자유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 모형 개발 ○ 게임이론에 근거한 항공자유화로 인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모형 구축	

	□ 정량적 평가 모형에 기반한 향후 한국과 EU 항공자유화 추진 방안 제시 ○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
주요 내용	□ 한국과 EU 항공운송시장 상세한 현황 분석 ○ 한국과 EU 및 본 노선에 취항하는 중동 국적의 항공사들의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 - 정책적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상세 통계 자료를 부록으로 제시함 - 한국-EU 노선에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중동 국적항공사들이 지리적 위치의 강점과 운임 경쟁력을 통한 시장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항공자유화 평가모형 개발 ○ 항공사들의 운임과 공급 결정과정을 모사한 최적화 모형을 항공자유화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구축 -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항공운송시장의 과점 특성을 반영한 항공사 공급변수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함 - 실제 모형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중동 국적 항공사들은 저가 운임 전략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전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단계별 항공자유화 추진 방안 제안 ○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항공자유화 협정 방안을 제시 - 선제적인 주요 사항 해결 단계, 상호 이익 극대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관계가 첨예하지만 유보가 가능하고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할 3단계로 제시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항공자유화 정책에 대한 방안 제시 ○ 항공자유화가 항공시장의 규제 철폐라는 측면이 핵심인 것을 파악하고 항공노선 시장의 메커니즘을 반영하여 제시된 본 연구의 항공자유화 정책 방안 반영 검토 □ 항공자유화에 대한 정량적 의사결정 방법론 제시 ○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연구 결과를 항공자유화와 관련된 정량적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 향후 한국과 EU 노선 시장 이외에도 항공자유화가 고려되는 노선 시장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적용 □ 항공자유화 관련 기초 통계 구축 ○ 항공자유화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및 구축, 분석결과는 향후 항공자유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항공분야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항공 통계 구축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연구 기관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이규용	
연구 참여자	강병식·반정호, 김동헌, 노용진, 문병기, 안준기, 장은숙	
필요성 (목적)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접일자리, 훈련, 노동시장 서비스 등)의 일자리 성과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간 연계 및 이를 위한 정책의 통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정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는 사업의 중복성 해소, 취약계층 참여 비율 확대,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반복참여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 프로그램 종료 후 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미흡,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지적 □ 본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여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실증분석, 현장사례연구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일자리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간 연계(직접일자리-노동시장서비스-훈련 등)가 이루어질 때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진단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일모아 데이터 베이스, HRD_NET 데이터 베이스,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참여자료와 훈련자료 및 노동시장 성과자료(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참여 실태 및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현장 사례 연구 ○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자, 사업운영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등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통계자료 분석을 보완 □ 해외 사례연구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외국의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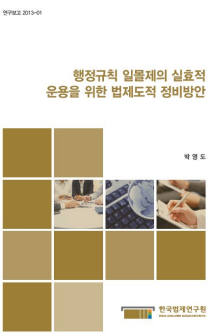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취약계층 노동시장 정책의 최근 동향과 특징 ○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최근의 개혁동향과 우리나라의 최근 제도개선 동향과 특징을 정리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 민간노동시장 이행 및 취업실태 분석 ○ 취업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종합하여 사업의 특성 및 참여실태를 정리 ○ 사업프로그램 유형별, 개인 특성별로 정부사업의 반복참여(동일프로그램 및 타 프로그램간 반복참여)와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태(취업실태, 일자리 유지율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이를 통해 반복참여 의존도가 높으며,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시간이 경과 후 일모아 DB 및 고용보험 DB에 포착되지 않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 프로그램 참여 이후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과(취업률, 취업소요기간, 취업지속기간)를 프로그램 유형(단일프로그램 참여, 연계 및 통합 프로그램 참여)별 비교분석을 수행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수행될 때 취업성과가 높았으며,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취업알선이나 훈련 등을 제공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성과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접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의 효율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례 ○ 직접일자리 사업(유형별 대표사업을 선정)과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여성취업지원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성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점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특히 정책의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원인을 진단 □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정책 해외사례 ○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독일-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영국-활성화정책과 근로프로그램, 핀란드-전달체계)를 대상으로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정책 대안 제시	□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화의 방향 제시 ○ 사업수행 중심의 공급자 방식형 일자리 정책이 아닌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제고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정책 기여)	○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참여자 선정과정에서의 사각지대와 사업종료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필요성 제시 □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정책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그 동안 논의되어 온 고용-복지연계나 전달체계의 개선의 담론적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유형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 ○ 노동시장 이행단계별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제공이라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의 협의 및 이에 기초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며 사업 평가도 단일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닌 연계서비스를 고려한 평가체계가 필요함을 제안 ○ 직접일자리 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효율화방안을 제시 - 돌봄노동유형, 경력형성형 유형, 공공서비스 제공별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 - 직접일자리 사업과 취업지원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방안을 제시 □ 지역단위 일자리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취업취약계층의 특성상 노동공급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사업의 설계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

연구 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연구 책임자	이병훈	
연구 참여자	박한울, 문한필, 정대희, 송주호	
필요성 (목적)	□ 최근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철폐가 수입원료의 구매비용 절감, 수입농산물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실례로 한·칠레 FTA발효 이후 포도주에 대한 관세는 2009년도에 철폐되었고, 또한 관세액과 연동되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등 내국세 또한 대폭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대다수의 유통전문가 및 언론매체들은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도소매 수입·유통업자가 저렴해진 수입농산물에 필요 이상으로 높은 유통마진을 붙여 과도한 초과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체결국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수출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관세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 이처럼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출국이나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집중되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고,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가 각 경제주체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여 수입 및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특혜관세 인하 혜택이 경제주체 각각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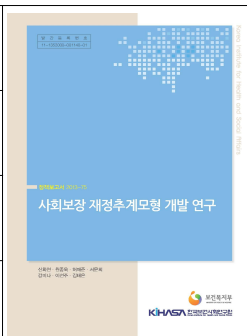
	○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입농산물의 유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입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수입농산물의 품목별, FTA 국가별, 단계별 유통구조에 대한 특징 분석을 실시함. ○ 수입통계를 수입방식, 수입시기, 수입관세, 수입국 비중 등으로 세분하여 수입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수입시장구조를 분석 ○ 다음으로 수입단계 이후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부류별·품목별 유통경로, 유통마진 등 포괄적 조사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유통경로별 비중,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유통이윤 등 유통마진에 관한 세부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 □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통계 분석,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분석 등 포괄적 분석을 통해 수입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시장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분석함. ○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농산물의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및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모형, 그리고 수입가격 반응함수를 각각 적용함. □ FTA 발효 전후로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 사회적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활용하여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관세인하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함. □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유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제시
주요 내용	□ FTA 발효에 따른 수입농산물 수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FTA 발효 국가별 품목별 주요 수입 농산물 수입현황 등 □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 수입과일 및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수입 농산물, 과일, 축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조사 분석(통계 및 설문조사) □ FTA 발효 이후 경제적 효과분석 ○ FTA 관세인하 및 시장지배력 효과 ○ FTA로 인한 수입물량 변화 요인 분석 :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모형 적용 ○ FTA로 인한 국내 수입가격 변화 요인 분석 : 수입가격 반응함수 모형 적용

	□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 FTA 관세인하 효과 : 균형대체모형(EDM) 적용 ○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후생변화 분석 ○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 비교 분석 □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과제 ○ 수출국 및 수입유통업자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문제 해결 방안 등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본 연구에서는 왜곡된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에 대한 독과점 폐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방치되었던 왜곡된 수입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독과점적 수입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범위 제고 기대 □ 그동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에서 수입농산물 부문은 제외되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농산물 부문의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 현재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국내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수입되는 수입농산물 부문은 제외된 상태임.

연구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책임자	박영도	
연구 참여자		
필요성 (목적)	□ 행정규칙 일몰제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규칙들을 현실화하고 입법 분량의 축소와 간소화(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으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관료주의 철폐(cutting red tape) 및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호주나 독일 등의 몇 개의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현재 시행 □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 □ 특히,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구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주요 부처별 일몰제 대상 행정규칙 분석 □ 실태 조사 - 각 부처 담당자 면담 및 의견 수렴 □ 전문가회의·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행정규칙 관련 법제실무·법이론 전문가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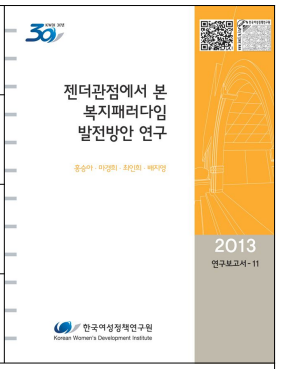
주요 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와 기본유형 -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현황 - 국제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 등 각종 일몰제의 제도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경험상 도출된 결론 □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 행정규칙 정비추진 경과 - 관련법제의 정비 -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 주요 부처별 운용실태 분석 - 행정규칙 일몰제는 법규범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법령의 간소화와 내용적인 조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법규범의 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 □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 행정규칙의 문제상황과 개선의 방향성 - 행정규칙 일몰제 추진성과 분석 - 도입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 행정규칙 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일몰시점과 일몰시간표(Timetable)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 - 검토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평가(evaluation) 내지 심사(Review)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 -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입법형식의 개선방안 - 행정규칙 일몰제와 같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체계화된 제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또는 입법기술적으로 체계화된 입법형식을 갖추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사후관리의 제도화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규칙 일몰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국의 최신동향을 검토 □ 29개 행정기관의 2,792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현황과 일몰기한 도래 이후의 점검결과를 분석 - 일몰대상 2,792건 행정규칙의 유형별, 시기별 등 분석

	- 도입단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와 유효기간설정형 일몰제의 명확한 구분과 적용 제외대상의 명확한 구분 - 검토단계에서 외부의견수렴절차의 철저화와 규제영향분석 등 사후평가의 내실화 - 기타 입법형식에서의 일괄입법의 문제점 분석과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확립을 위한 선제적 법제대응 - 규제완화 및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성과가 규제개혁 과제에 반영(13.1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례 입법평가 조례 등에 반영(13.6, 경기도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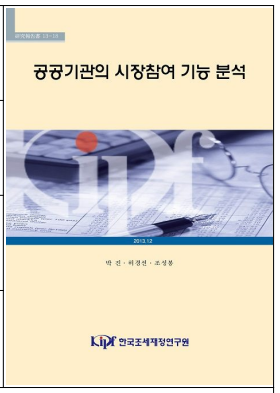
연구 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신화연	
연구 참여자	원종욱, 허재준, 서문희, 강미나, 이선주, 김태은	
필요성 (목적)	□ 미래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고려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보장성과 급여수준 등 제도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보육정책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공적연금제도 성숙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은 사회보험이 차지하고 있음. - 향후 국민연금 제도성숙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보험으로 편향된 지출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지출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 존재 및 인구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사회보장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작업 필요성 제기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제5조제4항) 및 시행령(제2조)에 의해 2013년부터 격년으로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작업 수행 및 결과 공표 계획 ○ 격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보장재정추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직속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신설 - 재정추계 모형구축 및 추계소위 운영지원 등을 위해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본원에 설치	
연구방법	□ 사회보장재정의 범주와 제도내용 및 지출현황 분석 ○ 사회보장제도별로 운영현황 및 적용실태 분석 -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등을 감안한 정책현안 파악 □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정책관계자 의견수렴 ○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별 범주에 대한 국내외 제도별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 의견 수렴 □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 재정추계모형은 각 제도별 특수성은 고려하되, 동일한 인구·거시경제변수 등은 동일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구축	

	-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화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를 고려한 정책변화 반영가능하도록 모형 개발 - 사회보장지출 전망결과 분석 및 재정평가 □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운영 ○ 올해 처음 시행된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 추계범주, 추계기간 등 재정추계 가정 설정과 모형구축 및 기본안에 대한 전망결과 분석 ○ 사회보장 장기재정 추계모형 검토 및 가정 설정 - 재정추계방법은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 □ 사회보장 주요분야별로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고 가정변수 설정 등 추계방법 검토 및 재정추계결과 분석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수준 및 지출구조 분석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수행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 직속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본안 제공 및 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작업 수행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추진방향·추계범주·추계기간·추계방법 등 세부지침 마련 □ 향후 인구고령화 및 공적연금 제도성숙 등으로 급속한 복지지출확대를 경험하게 될 우리나라 전망결과와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 장기재정추계결과, 사회보장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 22.6%로 전망되는데, 2040년에 OECD 평균수준인 22.1%(2009년 기준)을 상회하고 2060년에는 29%로 전망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험제도 도입시기가 늦어, 이미 복지개혁을 거쳐 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OECD 주요국가 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 ○ 지난 20년간(1990년~2009년)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10.62%p 높게 나타남. - 향후 2010년~2030년 기간 동안에도 3.86%p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급속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해 제도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으로 검토 필요 □ 전망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노령, 보건 등 정책영역에 공공사회복지지출 집중 ○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ALMP) 등의 정책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OECD 주요 복지국가의 경우 가족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및 실업정책 등을 통해 인적자본 양성,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령정책과 함께 생산연령 계층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미래세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업정책 등에 대한 지출확대 및 발전방향 모색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 마련 ○ 사회보장 재정전망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출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논의시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추계자료 제공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사회보장 재정추계 추진방향·추계범위·추계기간·추계방법 등 세부지침 마련시 연구결과 반영 ○ 추계소위 논의안건 및 재정추계결과 본위원회 보고 등 실질적인 재정추계 작업 수행 □ 사회보장 재정추계 범주 설정시 OECD(SOCX)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방향 모색시 시사점 제공 ○ 사회보장 지출수준에 대해 국제비교 등을 위한 재정추계 모형구축 및 이를 통해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경로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시 기초자료 제공 -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추계 범주를 설정함으로서 전망결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향후 인구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를 정부차원에서 발표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높은 전망자료 제공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설계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정추계를 통한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 제공 -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시 재정추계 결과를 근거자료 제공 ○ 사회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이중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시 기초자료 제공 - 복지욕구의 다양화 및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객관적 재정평가기준 검토

연구 기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홍승아	
연구 참여자	마경희, 최인희, 배지영, 김희진	
필요성 (목적)	□ 지난 30여년간 복지국가 재편논의의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에 양성평등 시각을 통합하는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복지논의의 지평확대였음. 그동안 진행되어온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 지구화 등의 변화는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의 증가, 평생고용시대의 종말 등 새로운 복지지형을 결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복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복지논쟁은 주로 성장과 분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집중되어 있고 젠더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미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의 발달경로와 유사하게 "이인소득자가족모델"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를 구조화하는 복지제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정책효율성은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복지 정책에서의 젠더이슈를 추출하여 성인지적 복지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새롭게 구성되는 복지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와 개선방안을 모색	
연구방법	□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젠더레짐(Gender Regimes), 성인노동자모델 등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의 젠더이슈에 관한 연구 □ 유자녀가족(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 설문조사 -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책의 젠더효과 평가 □ 유자녀가족(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 FGI 실시 - 맞벌이/홑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효과 평가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복지정책의 젠더효과 □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제도분석 실시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대상 제도별 젠더이슈 발굴 및 젠더분석	

주요 내용	□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기존 복지패러다임의 한계와 복지지형 확대 -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취업부모/ 비취업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공되어서 취업부모의 특수한 경우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여성과 남성 각각의 변화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정책 수용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현실에서 유자녀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저출산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와 정책 수용성을 파악, 분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유자녀가족의 정책인식과 평가 ○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 성별, 맞벌이여부별 복지의식 및 태도 분석 ○ 성별, 맞벌이여부별 노후준비, 노후 생활의식 및 태도 분석 ○ 성별, 맞벌이여부별 미래사회 불안의식 분석 □ 사회보험제도 분석 - 지난 40여년간 가족과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큰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국에 비해 제도수립과 성숙도가 낮은 편임. -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점진적인 해체와 평등가족의 등장, 그리고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의 가족모델이 쇠퇴하고 맞벌이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제도적 발전과 확대의 과정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전환을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할 지점에 있음. - 이에 가장 핵심적인 복지정책인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젠더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여성의 직업경력, 일가정양립, 출산 및 육아의 경험, 노인돌봄 등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향 제시 ○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성인노동자모델로 이전하며, 핵심은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포괄하면서 사회보험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돌봄권의 보장하는 성평등한 일가정양립정책 ○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보험제도내 여성 적용과 수급권 확대 □ 신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연구 기관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연구 책임자	박진	
연구 참여자	허경선, 조성봉	
필요성 (목적)	□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LH공사의 분양주택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업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업무 등 □ 공공기관은 공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하는 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일 것임 ○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보다는 기관의 기능별로 시장참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또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의 기능조정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을 구분하고,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타당성을 판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 후, 주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참여 유형별로 향후 기능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 구분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한 기존 이론과 문헌을 검토하여 시장참여의 유형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 공공기관 시장참여 기능을 전수 조사하여 시장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시장참여 현황을 문헌검토에서 도출한 기준과 비교하여 유형구분 기준과 방법 마련 ○ 공익성과 수익성을 대표기준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장참여의 목표에 따라 추가 유형 구분을 수행하여 총 8가지의 시장참여 유형 구분하고 해당하는 대표 사례 선정 □ 각각의 유형별로 시장참여의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	

□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쟁중립성과 관련된 문헌과 해외사례 조사
○ 해외사례에서 적용된 기준을 활용하여 8개 대표사례의 경쟁중립성 이행 여부 분석

□ 대표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사업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현황 및 이슈 파악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타당성 판정을 위한 기준 설정
○ 문헌검토를 통해 타당성 판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되는 공익성, 비용, 불공정경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마련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타당성 판정
○ 시장참여 타당성 판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흐름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8개의 대표사례에 대하여 시장참여 타당성 판정

□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이슈와 대안에 대한 정책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공공기관 시장참여 유형에 따른 각각의 대안을 제시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짐
○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함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은 공익성, 수익성에 따라 (1)과소공급의 해소, (2)민간시장 견제, (3)교차보조, (4)유휴자원 활용으로 이루어짐
○ 시장참여를 하지 않고도 참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고찰
○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 여부를 판정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공익성과 수익성 기준에 따라 분류한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4개 유형은 각 기능의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모두 8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며, 각각의 시장참여 유형에 따라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 표에서 정리되어 있음

〈시장참여 사례별 대안〉

성격	시장참여 유형		예시 기관(사업)	대안
높은 공익성	유형1 과소공급 해소 (비수익)	1-1유형 사회정책목표	LH (임대주택)	바우처, 최저보조금 입찰제, 경쟁 중립성
		1-2유형 산업정책목표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	직접투자 대폭 축소 민간기업지원
	유형2 시장견제 (수익)	2-1유형 비대칭 정보 해소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	민간이양, 감독기능 or 경쟁 중립성
		2-2유형 불완전경쟁 해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주유소 사업중단 or 경쟁 중립성

성격	시장참여 유형		예시 기관(사업)	대안
낮은 공익성	유형3 교차보조 (수익)	3-1유형 공적사업 재원활용	관광공사 (면세점)	경쟁 중립성
		3-2유형 기관 운영비로 활용	표준협회 (교육사업)	지정해제, 경쟁 중립성
	유형4 유휴자원 (비수익)	4-1유형 유휴시설 활용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컨벤션센터)	시설매각
		4-2유형 유휴인력 활용	대한석탄공사 (무연탄사업)	단계적 청산 청산/민영화

○ (1-1유형) 공공재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고 수익성은 낮은 유형에 해당함. 대표사례인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은 향후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바우처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한 부채 축소 방안을 강구

○ (1-2유형) 공익성도 높고 수익성은 낮은 유형으로 산업정책적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포함됨. 대표사례인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에 대한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점차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2-1유형) 공익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사업에 해당되며 비대칭정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 직접 참여함. 대표사례인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기능은 향후 민간에 이양하고 대신 민간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해야 함

○ (2-2유형) 공익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사업에 해당되며 불완전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유형임. 여기 해당되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참여를 중단하고 주유소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야 함

○ (3-1유형) 공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공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함. 이에 해당되는 대표사례인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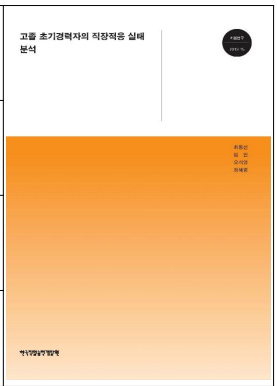
○ (3-2유형) 공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함. 이에 해당되는 한국표준협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야 함

○ (4-1유형) 공익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은 사업으로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임. 이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T컨벤션은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농수산물 분야의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나은 방안일 것임

○ (4-2유형) 공익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은 사업으로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임. 이에 해당하는 대표사례인 석탄공사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기관이 청산되거나 민영화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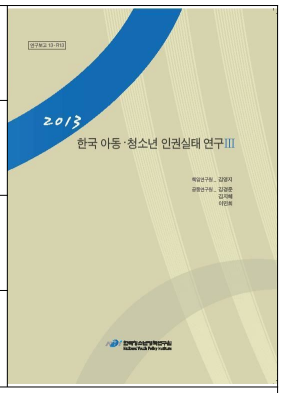
□ 8개 사례에 대한 경쟁중립성 분석 결과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경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8개 사례 중 경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기능은 자동차 검사, 알뜰주유소, 면세점, 표준협회 교육 사업으로 나타남 ○ 시장참여 기능의 중단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경쟁 중립성 확보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경우 시장참여 문제가 자동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수익성, 공익성,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시장참여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시장참여 타당성의 판정 및 경쟁중립성 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유형별 대안 제시가 가능해짐 □ 과소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1유형은 해당 사업이 대부분 적자상태이며 부채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음 ○ 1유형 시장참여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가능성이 많음 ○ 이는 부채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견제를 목적으로 한 2유형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업일 것이며, 교통공단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를 대체할 기능을 찾을 수 있다면 기관의 구조조정 우려는 피할 수 있음 ○ 2유형의 시장참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 ○ 공공기관의 새로운 기능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을 포기하는 데에서 오는 대체재원에 대한 고심이 필요할 것임 □ 3유형의 경우에도 시장참여 기능을 포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2유형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과 수입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며, 대체재원 마련이 문제가 될 것임 ○ 그러나 3유형의 경우 교차보조를 받는 공익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4유형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유형임 ○ 유휴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한 4-1유형은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음 - 시설관리인력의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임 ○ 유휴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4-2유형은 민간과의 경쟁을 거칠 필요도 없이 해당 인력의 구조조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음

연구 기관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보고서명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 분석	
연구 책임자	최동선	
연구 참여자	임언, 오석영, 정혜령	
필요성 (목적)	□ 최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의 양적 지표 개선,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기회 확대, 이를 위한 정책 강화 등이 긍정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 여전히 열악한 고졸 일자리, 이로 인한 고졸 청년층의 조기 이직현상의 유지 등 부정적인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 ○ 직장적응 또는 고용유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 취업률 증가는 부분적인 성과에 불과하고, 고졸 취업자의 직장적응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 □ 본 연구는 고졸 취업자의 초기경력 단계에서 직장적응 실태를 분석, 이들의 직장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기 조사자료 분석 ○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교육고용패널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졸자 취업진로조사'(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하여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직장적응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 □ 직장적응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사업체(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고졸 초기경력자, 인사담당자(응답자: 초기경력자 1,079명, 인사담당자 256명) □ 내러티브(narrative) 탐구를 통한 질적 분석 ○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를 당사자(고졸 초기경력자의 상급자 등 포함)의 관점에서 이해 및 양적 조사 보완(고졸 초기경력자 8명 임의 선발, 2회씩 인터뷰) □ 전문가 협의회 ○ 고졸 초기경력자 직장적응의 개념적 틀, 설문조사 및 내러티브 조사방법,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 의견수렴(학계 및 산업체 전문가, 고졸 인력양성 및 활용 분야 교사 및 상담자, 정책 관계자 등)	

주요 내용	□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 ○ 자신의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 수준 -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소기업(50인 미만)과 중기업(50~299인) 사이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이는 고졸 초기경력자들이 기업 인지도, 후생복지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임금에 대한 만족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현재 직무와 이들의 학력, 전공, 기술 및 능력수준 간에 일정 정도의 괴리가 존재 - 특히 20% 정도가 학력과잉 또는 스킬과잉이라는 결과는 적절한 직무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기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고졸 초기경력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 ○ 이직의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의 직장적응이 낮은 경향 - 고졸 일자리의 특성상 성별 분리현상이 두드러짐을 고려하면,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가 갖는 특성 때문에 여성의 직장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정할 수 있음. ○ 일반계고졸 취업자가 특성화고졸 취업자보다 직장적응 관련 변인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출신고교 유형에 따른 독특한 영향력은 회귀분석에서 제한적 - 오히려 입직 초기에 다양한 사유로 직장에의 부적응 행동이 발현되지만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근속이 유지되면서 고졸 초기경력자 나름의 직장적응 방식을 습득 ○ 기업규모는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에 부분적인 영향 - 기업규모와 조직만족도 사이의 유의한 관계, 즉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재직자들이 회사 또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임. ○ 재직회사에서 능력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한다는 인식은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수행직무가 학력, 전공, 능력 등과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직장적응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영향 - 이는 구직과정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노력, 지원체제의 중요성, 직무에 연계된 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진입 전에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재직중 교육훈련 경험, 특히 비형식적 교육훈련 경험은 직장적응에 부분적인 영향 - 비형식적 교육훈련을 통해 동료들과 유대 관계도 강화되면서 직장적응에 기여 □ 내러티브를 통해 나타난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과정 ○ '이제 적응이 되었구나' 라고 인지하는 계기는 주변동료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음. - 동료와 상사와의 대인관계를 직장적응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꼽는 가운데, '사교성' 이나 '붙임성'을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보기도 함 - 동료 혹은 상사 중에서 좋은 역할 모델의 존재도 직장적응의 한 요소로 부각됨. 이들 역할 모델들의 특징은 뛰어난 업무 수행만이 아니라 현장 지향적 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임.

	○ 고졸 초기경력자 직장적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직무 역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임. 각자가 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어느 정도 학습했을 때, 스스로 적응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이 숙련 형성의 과정에서 크게 작용함. ○ 초기경력자에게 있어서 임금, 안정성과 발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 단, 고졸 초기경력자들이 인식하는 직장의 보수, 안정성, 발전성이 대졸과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직장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후진학에 참여할 실질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응답함. 후진학에 참여하더라도 그 동기가 구체적이지는 않은 실정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고졸 초기경력자 직장적응의 개념을 해당 사업체에서의 장기근속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경력개발 관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석 □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체 단위의 고졸자에 우호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고, 고졸 초기경력자가 직장적응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도출됨. ○ 고졸 취업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능력 ○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배치 ○ 고졸 취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체계(임금, 승진체계 등) ○ 동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고졸 취업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조직 분위기 ○ 멘토 등과 같이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 남성 고졸 초기경력자의 병역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교 재학 중의 직업교육 경험 및 직무능력 형성 필요 □ 고졸 초기경력자를 위한 후진학 체계의 재정비 필요 □ 고졸 초기경력자의 중·장기적인 비전 설계 지원

연구 기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 책임자	김영지	
연구 참여자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필요성 (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음. □ 지표결과 산출을 통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 및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선행연구 검토 및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통계 및 각종 승인통계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통합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자문 및 의견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52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학술대회 등 개최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책 현안 논의,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논의 및 인권정책과제 발굴 등	
주요 내용	□ 주요 연구내용 개요 ○ 2012년까지 인권영역을 4개로 나누어 2개 영역씩 격년 조사하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한 해에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보완함.	

-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7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7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7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5개)', '특별보호조치(15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 지표결과 생산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와 타분야의 관련 통계를 보완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 연구결과물은 '기본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서', '통계집' 등 총 3권으로 구성됨. 기본보고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를 분석하였고,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 주제의 소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인권데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도에 새롭게 시도함. 통계집인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임.

○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대분류 영역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인권정책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결과

※ 6개 대분류 영역별 연구결과 일부를 제시하며 아래와 같으며, 130개 지표항목별로 도출된 세부 연구결과는 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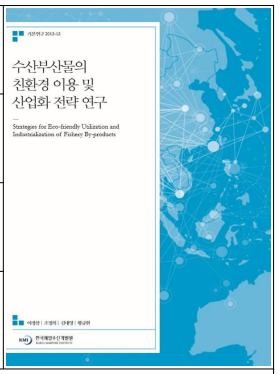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인식 수준은 70~90%로 나타남.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해 67.6%만이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함.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13.1%로 낮게 나타남.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등 8가지 차별경험 중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률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 연령차별 33.7%, 성차별 33.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26.7%로 나타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에서 자녀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이었으나,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수준은 40~50%로 낮게 나타남.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음. 지난 1년간 10명 중 3명은 부모와 교사 체벌을 경험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국·공립 어린이집은 5.2% 정도로 보육의 공공성이 부족한 실태임. 가출경험 청소년은 5.1%였으며 가출청소년의 93.7%는 가출 시 청소년 관련 기관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방임 빈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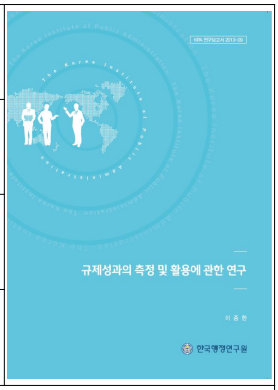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 청소년의 36.9%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음. 경제적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가 열악하게 나타남. 아동·청소년들이 불행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나타남.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지나친 교육열은 아동·청소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과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 경험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3%에 불과했으며, 휴일의 주요 여가활동은 친구와 놀기(48.2%), TV 시청(46.6%), 게임(43.4%) 등으로 나타남(중복응답). ○ 특별보호조치 :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은 13.3%로 나타남. 부당처우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보장이 27.2%였음. 중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은 3.8%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6개 대분류 영역별로 우선 관심을 가져야할 17개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정책과제별로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절차, 관련 법 개정 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을 제시함. □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기구 기능 활성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 시민적 자유와 권리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확대, 입양 아동·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제도 실시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및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 부처간 사업 조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방과후 여가 및 문화 활동 강화, 청소년디딤센터 및 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특별보호조치 :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인권침해적인 처우 개선, 성폭력피해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

연구 기관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보고서명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연구 책임자	이정삼	
연구 참여자	조정희, 김대영, 황규환	
필요성 (목적)	□ 수산부산물의 저이용 또는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부패하기 쉽고 선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수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 가공, 유통, 소비단계에서 가식 부위를 제외한 상당한 양이 저(低)이용되거나 폐기되고 있음 ○ 이러한 수산부산물은 폐수 유출 및 악취 발생 이외에도 해안가 방치, 불법 매립, 해양투기 등으로 이어져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자원화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필요 ○ 수산부산물이 단순히 폐기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 경관 훼손, 생산·유통·가공·판매 과정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원화될 경우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함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단순 폐기되던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자원 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관련 연구 및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연구는 개별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전개되고 있고, 수산부산물 전반에 대한 발생 실태 및 처리 그리고 친환경적 이용 및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한 산업화 전략과 관련된 정책적 연구는 매우 빈약함 ○ 이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거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 정책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더욱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법·제도 및 선진 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설정된 연구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국내외 출장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관련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특히 최근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류 및 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방안과 관련된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음 ○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연구에 적극 활용하였음 ○ 또한 수산부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 통영, 수도권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본 수산청, 중앙수산연구소, 사이타마현 및 북해도 등을 방문하여 정부, 연구소, 업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대한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음
주요 내용	□ 수산부산물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매년 80만 톤에서 120만 톤가량이 발생 ○ 수산물가공업자 및 대형 회센터 등에서 발생한 어류 부산물은 주로 어분 및 사료로 가공되어 재활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회센터 및 가정에서 발생한 어류 부산물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의 형태로 처리 ○ 굴 패각은 채묘용 및 비료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적체량 증가로 인해 해안가 방치, 불법 해양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국내외 수산부산물 처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처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한 실정 ○ 「폐기물관리법」은 현행 법령 상 수산부산물의 처리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데, 수산부산물이 폐기물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됨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 ○ 미국의 경우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폐기물에서 제외 가능한데, 물질이 생산과정의 일부분에 속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경우, “비폐기물 결정”이 적용 ○ 수산부산물이 친환경적 혹은 산업적으로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폐기물과의 분리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 국내외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부산물 중 어류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까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분 제조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 어류 부산물은 수거단계에서 이물질 혼입, 열악한 선도관리 등으로 고품질 어분의 생산을 저해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굴 패각이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안어장에 살포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추진전략을 제시 ○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를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으로 설정하였음

	○ 3대 기본방향으로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폐기 자원의 최소화 및 친환경 유용 자원화, 수산부산물 이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설정 ○ 목표와 기본방향에 맞춰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반조성 전략, 폐기 자원 최소화 및 친환경 유용 자원화 전략,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전략 하에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친환경적 이용 및 산업화 촉진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관련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및 역할분담으로 구분하여 제언함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수산부산물과 폐기물의 분리 추진, 패각의 친환경적 이용 위한 제도 개선, 수산부산물 분리수거 제도 도입,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 촉진법 제정에 대해 제언함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산부산물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수산부산물 선도관리시스템 구축, 기초연구 실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거래소 설치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및 산학협력체제 강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자원화 사업 발굴, 시범사업의 추진, 수산부산물 관련 사회적 기업의 육성, 수산부산물 재활용품 소비 촉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연구 기관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	이종한	
연구 참여자	박형준	
필요성 (목적)	□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관심 ○ 최근 불거진 아동 식품안전문제, 음식점 흡연 규제문제, 환경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규제문제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규제 입안시에 의도한 효과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피규제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의 규제정책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규제체계의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규제체계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규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규제성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규제성과 측정수단으로서의 규제지표 ○ 성과측정 수단으로서의 규제지표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규제의 강도(regulatory stringency)를 어떻게 포착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문제 ○ 만약 이러한 규제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는 규제지표가 존재한다면 규제성과의 측정과 규제정책 평가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 -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수단을 이용할 때 보다 정부개입의 수준이 낮은 수단을 사용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민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이론적 결과인 동시에 주지의 사실 - 따라서 국가개입정도로서의 규제강도는 규제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규제지수를 개발하여 왔으나 이들은 국가비교의 목적에서 개발된 지표들로 규제의 강도보다는 규제정책의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한 규제와 관련된 종합적 지표의 성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별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산업별 규제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산업별 규제지표는 곧 산업별 규제체계의 강도(stringency)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규제체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사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다시 규제개혁정책에 반영한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고, 따라서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table>
<tr><td></td><td>- 현재로서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비계획이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본 연구에서 규제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규제정비계획이나 규제정책 성과평가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규제정책의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td></tr>
<tr><td>연구방법</td><td>□ 본 연구는 규제지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
○ 규제지수 작성을 위한 기존 방법론문헌 검토를 통하여 여러 국제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지수의 내용과 작성방법 파악
- 기존 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일국차원의 규제정책을 산업별로 평가하기 위한 규제지수 작성 사례는 없음
- 규제에 대한 개념, 규제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 규제데이터 부재 등의 문제해결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산업별로 분류하고 통계처리
○ 우리나라는 등록규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등록규제의 산업별 분류와 규제의 가중치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규제지표 작성결과 제시</td></tr>
<tr><td>주요 내용</td><td>□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OECD(2002)는 최고위 수준에서의 정책채택, 측정가능한 규제품질 판단기준, 그리고 규제관리 역량을 규제정책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 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OECD에서 개발한 RMI 규제관리지수는 규제정책의 기본요소 중 특히 규제품질과 규제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나 국제간 비교가 아닌 개별 국가내부의 규제정책의 성과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음
○ 규제정책의 성과(규제성과)는 정책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
<table>
<tr><th>성과유형규제단위</th><th>정책적 성과</th><th>경제적 성과</th></tr>
<tr><td>개별 규제</td><td>- 규제의 생애주기 분석(사후평가)
- 규제정책 사례분석(사후평가)</td><td>- 규제영향분석 (사전평가)
- 규제의 부분균형 분석(사전 또는 사후평가)</td></tr>
<tr><td>집합적 규제</td><td>- 규제개혁 업무평가(사후평가)
- 규제기관 정책평가(사후평가)</td><td>-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사후평가)
- 산업별 규제의 효과분석(사전 또는 사후평가)</td></tr>
</table></td></tr>
</table>

	○ 본 연구에서 작성하려는 규제지수는 규제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는 산출지표의 하나 □ 규제의 산업관련도 ○ Al-Ubaydli & P.A. McLaughlin(2012)는 미국의 연방규제를 대상으로 연방규제집의 타이틀별로 산업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텍스트분석 - 미국 표준산업분류의 각 산업의 키워드를 연방규제집 타이틀별로 검색하여 특정 산업의 키워드 검색건수를 타이들별로 합계를 내어 해당 산업의 규제의 산업연관도 작성 -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의 강도를 측정하였는데, 문장에서 행동의 제약을 나타내는 어휘를 강도별로 구분하고 이들 어휘의 검색건수를 해당 산업별 규제의 강도로 적용 ○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방법을 차용하여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의 두 자리 단위 하위 산업(세 자리 단위) 설명문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산업분류를 실시 - 검색건수는 각 법령들의 해당 산업과의 관련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검색의 결과 법률 A의 두 자리 단위 산업별 검색건수가 산업1 2건, 산업2 5건, 산업3 0건, ... 등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각 산업의 검색건수가 해당 산업과의 관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 규제의 강도 ○ Brunel et Levinson(2013)은 규제강도 측정의 어려움을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 다차원성, 동시성(simultaneity), 산업구성, 자본재 설비연한(capital vintage) ○ 규제강도에 관한 해외의 연구들의 접근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민간의 공해감축비용, 규제에 근거한 평가, 복합 지수, 공해나 에너지 사용, 공공지출 또는 집행실적 등 ○ 본 연구에서 규제의 가중치는 규제 성격과 규제건수 증감, 그리고 규제유형에 따라 부여 - 규제성격의 대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3, 사회적 규제=2, 행정적 규제=1의 가중치를 부여. 경제적 규제들은 '진입규제>가격규제>거래규제>품질규제'의 순으로 규제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규제는 '투입>성과>시장유인'의 순으로 규제강도를 차별화 - 규제성격 중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를 구성하고 있는 진입=4, 가격=3, 거래=2, 품질=1을, 사회적 규제를 구성하고 있는 투입=4, 성과=2.5, 시장유인=1의 값을 부여 - 기존 규제의 강화나 완화도 규제강도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증감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규제변경 사유에 따라 강화=1.5, 완화=0.5, 폐지=-1, 그 외=1의 값을 부여

- 규제 유형에 따라, 사전승인규제인 PA(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기타1)=4, 투입기준규제인 IS(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고용의무, 금지)=3, 산출기준규제인 OS(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2, 정보규제인 IR(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타4)=1의 값을 부여

규제지표 : $RI_j = \sum_{i=1}^{n}(RCI_{ij} \times \sqrt{WR_{1i} \times WR_{2i} \times WA_i \times WT_i})$

(단, $i =$ 규제$[1, 2, \cdots, n(n = 16{,}198$개$)]$, $j =$ 산업$[1, 2, \cdots, m(m = 76$개$)]$)

* RI_j: j산업의 규제지표

* $RCI_{ij} = \dfrac{MIL_{ij}}{\sum_{j=1}^{m}\sum_{i=1}^{n} MIL_{ij}}$: i규제의 j산업 관련도(단, 이 때 MIL_{ij}는 I규제의 근거법령 상 j산업에 대한 언급 빈도

* WR_{1i}(규제성격 분류별 가중치): 경제적 규제=3, 사회적 규제=2, 행정적 규제=1

* WR_{2i}(규제성격 세부분류별 가중치): 진입=4, 가격=3, 거래=2, 품질=1, 투입=4, 성과=2.5, 시장유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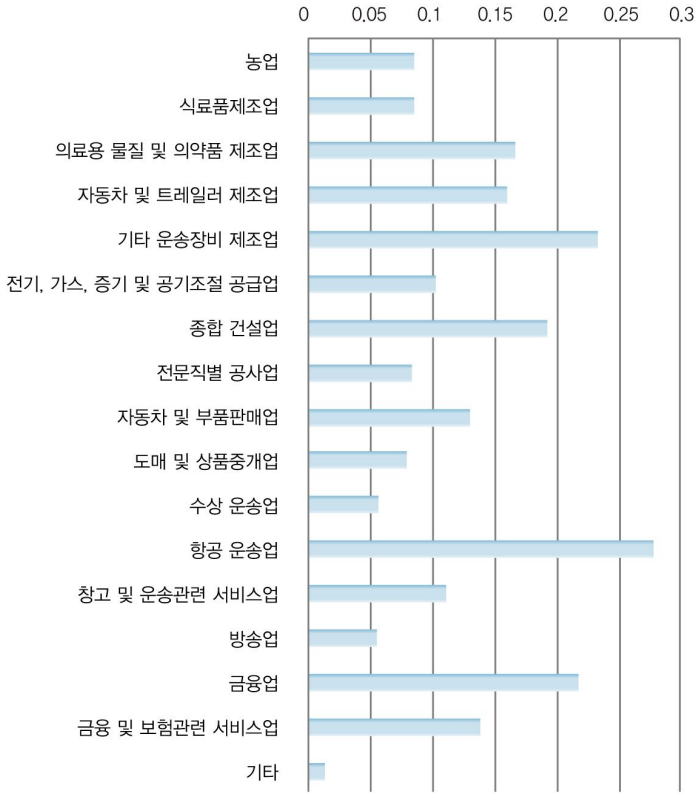
* WA_i(규제증감 가중치): 강화=1.5, 완화=0.5, 폐지=-1, 그 외=1

* WT_i(규제유형별 가중치)
- PA(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기타1)=4
- IS(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고용의무, 금지)=3
- OS(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2
- IR(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타4)=1

□ 산업별 규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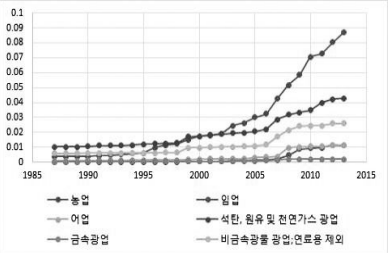
○ 작성된 산업별 규제지표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규제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항공운송업의 규제지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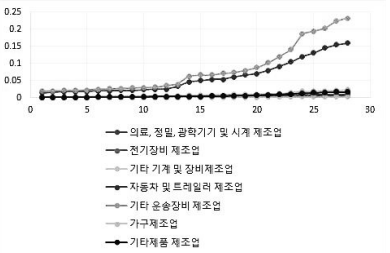
- 이것은 서비스산업도 규제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못지 않게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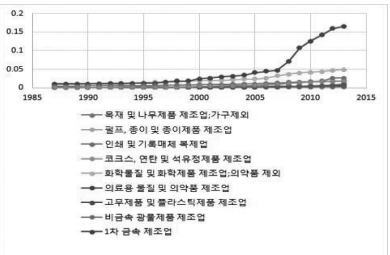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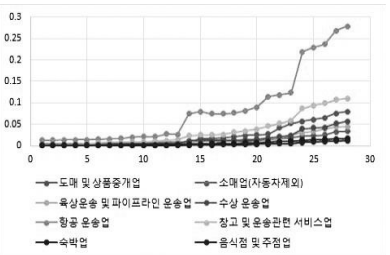
○ 규제저량 변동추이

- 각 산업의 누적 규제지표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대 중반이후 규제지표가 증가하는 산업이 다수 보임
-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규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으며, 농업도 계속 증가추세이나 다른 제조업에 비해 규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도 2007년 전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항공운송업은 특정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금융과 방송업도 200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서비스업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

<table>
<tr>
<td></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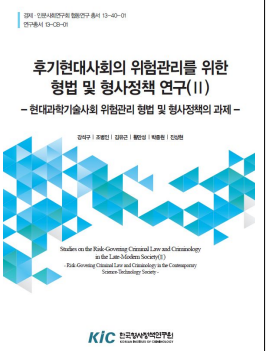


- 이밖에도 필요에 따라 규제유량이나 저량을 나타내는 산업별 지표를 분석관리할 수 있음
</td>
</tr>
<tr>
<td>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td>
<td>
□ 규제지수는 도출된 규제지표를 지수화한 것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활용가능
○ 산업별 규제지수는 본 보고서에서 처음 작성한 것으로 정부에서 아직 활용가능한 단계가 아니며 정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

□ 규제지수를 규제관련 Big data 시각화(visualization): infographics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제공)에 활용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규제관련 정보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우리나라의 규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텍스트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인포그라픽을 이용한 요약정보 제공 가능
- 단순히 규제건수의 증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관련 보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의 강도를 반영한 산업별, 규제성격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정보제공 가능

□ 규제지수를 증거기반 규제관리 시스템(Evidence based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구현과 성과지향의 규제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 첫째. 정부규제 모니터링 제도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과 규제정비계획에의 반영필요
- 시간적 전후선상에서 얼마나 규제정도가 증감했는지를 매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러한 지수작성을 통해서 매년 작성되는 규제정비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목표치를 반영하고 어느 정도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기본법등에 명시할 수 있음
</td>
</tr>
</table>

	○ 둘째, 규제개혁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 지표로서 활용 - 과연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GDP 등을 비교하여 그 성과를 시간적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하고, 또한 어떠한 점이 규제의 성과와 규제개혁이 연결이 잘 안되었는지 평가하여 규제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 ○ 셋째, 산업별 규제 추세연구를 통한 중·장기 규제 전략수립에 지표로 활용 - 현재 규제개혁의 계획이 년단위 규제정비계획이나 정권별 규제감축계획 등 위에서 언급한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규제개혁의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전략이 설정되고 이것을 자료에 근거하여(산업별 규제지수 데이터 등) 관리하는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활용되어야 할 것임. 이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넷째, 이러한 규제지수의 국제화를 통한 각국별 규제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 활용 - 이를 통해 우리의 규제개혁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OECD 등에 본 규제지수관련 연구를 영문으로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측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규제개혁업무 평가에서 산출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각 부처의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객관 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규제개혁평가를 도입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관련조항 개정 ○ 단기적으로는 본 규제지수를 각 부처별로 전환하여 정부업무평가의 성과지표로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장기 규제개혁 추진계획(Master Plan)을 세우고 그 미션과 비젼 그리고 전략들에 따른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문제점을 환류 하는 규제성과관리시스템(Regulator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구축

연구 기관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연구 책임자	강석구	
연구 참여자	조병인, 김유근, 황만성, 이준서, 박종원, 진상현	
필요성 (목적)	□ 과학기술이 남용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광범위한 것임. - 이러한 파급효과는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 - 더욱이 그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지 못한 과학기술의 투입은 점차 증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반국민들이 인용하여야 하는 위험(리스크)은 이에 상응하여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통제시스템, 예컨대 경제, 법 및 정치 구조가 이에 상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 때 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법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됨. - 형법은 규범적인 책임귀속 그리고 이를 통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과학기술 자체 또는 그 발전의 정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 싼 사람들의 행위에 착안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단계에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의 허용한계를 설정함. - 이를 위한 전문가와 일반국민 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함. 위험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전문화된 개별영역에 고립·폐쇄된 전문가들 간의 불통은 위험관리체계의 부실로 이어짐.	
연구 방법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 전문가집단과 일반국민의 의식조사 및 그 결과 분석 - 문헌연구 □ 개별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정책적 함의의 탐구 ○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문헌연구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 문헌연구
주요 내용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위험분야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각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의 어느 한 집단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의 발동은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 -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은 위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행동양식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에 의해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더라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일반국민 및 전문가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와 격차, 그 심각성, 위험소통의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정책입안의 걸림돌 등을 조사 및 분석 - 생명과학기술, 화학공학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조사 - 전문가집단은 비교적 체계적인 기술적 측정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위험의 특성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의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즉 전문가집단의 위험인식은 객관적인 반면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술위험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위험정보가 상호 교환되고 토론될 수 있는 환경에서 민주적인 시민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현대과학기술의 전문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위험사회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위험평가와 관리체계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위험관리의 민주정치화에 대한 가장 의미깊은 요청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개별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정책적 함의의 탐구 ○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매체별 개별 환경법상의 환경공학기술 규제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 관리와 위해성평가를 통한 환경공학기술 관리에 관하여 검토함. 그리고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 다음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리스크)의 관리방안을 도출함. -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환경공학기술 위험을 형사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위험형법론에서 제기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공학기술이 포섭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성이라는 작은(小)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위험이라는

큰(大) 위험을 회피하는 긴급피난과 유사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험형법론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성과기준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공학기술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비교적 값싼 기술을 사용할 유인이 더 클 것이고, 이에 따라 특정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또 다른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외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상존함. 따라서 기술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적용을 통한 성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통합환경관리방식)가 마련된다면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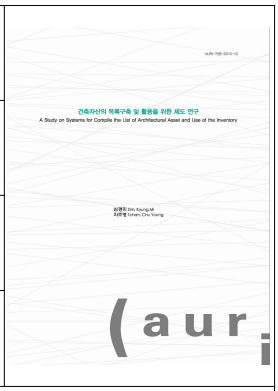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한 다음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귀속의 한계를 살펴봄.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외부로부터의 위험관리 외에 내부에서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때 고려할 만한 것이 바로 준법통제·감시 체계(원자력안전 거버넌스)의 구축,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확대·적용,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원자력공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의 합리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과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봄.
- 입법기술적으로는 형벌규정에 가벌성의 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기술기준의 위반행위를 적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허가 및 승인, 지정 또는 인증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인·허가 및 승인 등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인·허가 및 승인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행위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거나 또는 ② 시설 등이 기술기준에 상응하지 않게 된 경우에 내려진 안전규제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위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형법은 '간접적으로' 과학기술에 내재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함.
- 이 영역에서 형법은 단계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직접적 행위자에 대한 1차적 위험관리, 1차적 위험관리에 대한 2차적 위험관리로서 안전담보시스템 그리고 이때에도 다중안전담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형법은 책임귀속상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추상적 위험범, 부작위범, 과실범 그리고 공동정범임. 이들 범죄유형들은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거나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을 완화하거나 또는 결과에 대하여 부분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도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의 투입을 용이하게 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대안이 바람직함. ○ 과학적 불확실의 감소를 통한 위험인식의 순화의 필요성 -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여야 안전한가라는 정책적 딜레마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 민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은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못한 다른 문화적·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집행에서 일반주민들의 위험인식을 배제하면 결과적으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정책집행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정책적 함의의 탐구 ○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분산된 환경오염 및 환경공학기술규제 입법의 정비의 필요성 · 개별 환경관계법에 따른 규제기준 역시 매체별로 설정된 오염매체별 환경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이 아닌 농도 기준 위주의 성과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리스크)이 당해 매체 이외의 매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제도의 합리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도는 기술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로 인한 위험 통제 가능성 등까지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 인증 등을 강제할 수 없으며, 매체별 성과기준 위주의 규제방식과 결부되면서 일정한 규제·관리의 공백상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 기술수준의 한계 등으로 위해성평가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환경공학기술 통합환경관리방안의 필요성 · 개별 오염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종래의 배출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 원자력진흥과 원자력안전규제의 엄격한 분리 그리고 규제기관의 이익충돌의 해소방안 모색 - 특히 원자력안전부품에 대한 중립적인 인증기관의 선정 · 특히 인증기관은 안전기술인증을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예컨대 원자력진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원자력사업자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대한전기협회에 원자력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안전담보시스템의 확보와 안전규제의 공백의 보충 · 2013년에 발생한 원전비리는 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활용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흠결에서 비롯됨. · 특히 원자력 안전부품의 인증을 광범위하게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안전부품의 제조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층적인 하청을 허용함으로써 원 발주사업자와 원자력 안전규제관청의 관리·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지휘·관리·감독책임의 철저화와 원자력안전 거버넌스의 관철 · 원자력사업자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사업장내 혹은 그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관리·감독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 필요함. 이러한 책임은 전통적인 형법이론에 의하여 충분히 추궁가능함 (과실범, 부작위범). · 이와 더불어 지휘·관리·감독을 해태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양벌규정과 이익환수(추징)를 통하여 추궁할 필요가 있음. 이 때 후자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원자력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원자력안전규제 · 준법통제·감시체계 또는 원전력안전 거버넌스의 관철을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 필요함. · 내부고발자제도의 활성화 · 경제적 이해관계의 단절 - 취업제한의 범위 확대 ▶ 원전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규제관청 공무원이나 원자력 사업자의 임직원이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자와 피관리·감독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기관의 책임의 강화 · 원자력진흥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원자력안전 규제관청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인·허가·인증절차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연구 기관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 책임자	박정규	
연구 참여자	서양원, 간순영	
필요성 (목적)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다수의 인명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화학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은 부처 소관별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도 갖추어왔으나,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초동대응부터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 대두 □ 본 연구에서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대응체계의 수준을 진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방법	□ 국내외 화학물질 및 불산누출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발생원인, 피해규모, 대응절차 등을 분석 ○ 화학물질 사고 사례는 국내 총 469건의 사례와 미국 및 EU의 대형사고 사례 분석 ○ 불산사고는 구미 사고의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전과정 추적조사 실시. 그 외 미국의 대형 불산사고 4건의 조사·분석 □ 구미 불산 누출사고 현장 방문 조사 실시 ○ 사고 현장 및 주변 환경 조사 ○ 인근 주민과 사고대응 담당자 면담 실시	
주요 내용	□ 국내외 화학사고 및 대응사례 조사·분석 ○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를 조사하여 사고원인과 발생유형을 분석 ○ 구미 불산사고의 발생원인, 피해규모, 대응의 전과정을 분석하고, 각 대응절차별 문제점 도출 ○ 미국과 EU의 대형 화학사고 및 불산사고에 대해 대응절차 분석과 국내 사고대응 절차와의 비교 ○ 국내 사고는 인적 요인에 인해 주로 발생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장 자체 안관관리 강화의 필요성 확인	

	□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법과 사고대응 체계 조사 ○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부처 역할 확인 ○ 국내외 사고 대응체계, 사고대응 매뉴얼, 전담기관 및 시스템 조사 ○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소관과 역할의 중첩, 화학사고 전담조직 부재, 위기대응 매뉴얼 내용의 부실,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규정량 미흡, 사고영향 평가 수단 미흡 등 국내 사고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사고대응 주체의 정비 ○ 화학사고 발생시,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주관부처로 역할을 수행하고, 소관이 중첩되는 사고는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사고 대응 ○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담조직 신설 □ 사고대응 체계의 강화 ○ 기존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고발생 시 상황정보 전파대상을 명확히 규정 ○ 사고이력 관리제도(CATS) 프로그램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일부 정보의 대중 공개 제안 □ 사고영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사고대비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보완 ○ 사고 발생 후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위해관리제도 등) 도입 □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소규모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일정 기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제안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성화 ○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RIS)의 탑재정보(독성가스 등 타 부처 정보 포함)를 최신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고지 절차를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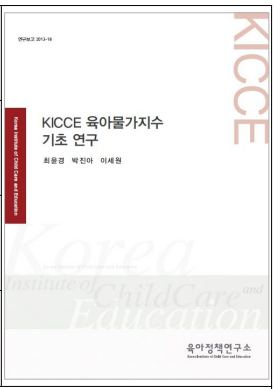
연구 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 보고서명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심경미	
연구 참여자	차주영	
필요성 (목적)	□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 주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중요성 확대 ○ 최근 신규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기성시가지 관리·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활발히 모색 중. 해외에서도 지역의 건축자산의 창의적인 재활용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 및 활력을 증진시킨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 및 보존정책의 한계 등으로 건축자산 급속히 멸실 ○ 문화재보호법에 2001년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어 멸실위기에 있는 가치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으나, 건립기준(건설된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만 해당) 및 등록기준이 한정되어 있음 ○ 문화재 관리체계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근대건축자산은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하고,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임의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며, 문화재 등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오히려 가치있는 건축자산의 멸실을 초래 □ 건축자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나 현황파악 미비 ○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대 생활에 불편함을 줄이고 자산의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멸실되지 않고 보전, 활용되도록 건축법규 특례 및 규제완화라는 '지원'을 강조하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법률 국토해양부 마련 중 ○ 그러나 전국적으로 건축자산과 관련한 현황파악 및 자료구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건축자산의 관리·조성 등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됨. 새로운 법률에서 마련될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선행될 필요 ○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체계적인 기초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축자산의 조사·발굴 및 분류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건축자산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그리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짐 □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조사 및 목록구축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개념 - 건축자산 유형(대상) - 조사·발굴 - 목록구축 과정에 이르는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에 대한 발굴 및 소개를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 또한 건축자산의 지속적인 현황 관리와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 관리 및 활용체계를 마련할 필요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건축자산 개념 정립 및 유형검토, 국내외 조사사례 및 정책 파악, 건축자산 관련 법령 및 제도, 계획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 국내 유사 조사사업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관계자 면담조사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운영 및 실태파악,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 출장 및 관계 담당자 면담조사 ○ 영국 사례분석을 위해 영국의 기관(english heritage) 방문, 담당자 면담조사 및 현장 답사 실시 □ 건축자산 시범조사 실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 협력연구, 현장조사 실시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조사기준(안)의 검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위탁용역을 통한 협력연구 진행 ○ 군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주민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발굴, 조사, 정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방향 및 시범조사 대상지 선정, 선행된 조사사업의 운영현황 파악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시범조사와 관련한 조사 기준(안) 마련, 조사 후 결과내용 검토 및 개선방향 논의,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주요 내용	□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건축자산 개념 정립 및 가치 기준 제시 ○ ‘건축’의 사전적, 법적 의미 검토, ‘자산’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개념으로 ‘유산’과 ‘자원’에 대한 용어 검토. 국내외 유사개념(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서울시의 ‘미래유산’, ‘지역자산(유산)’, ‘건축문화자산’ 등) 검토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 기준 및 개념을 정립함 - 본 연구에서의 건축자산은 한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 및 인물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가치, 오래된 골목길이나 필지 및 건축물이 군집되어 형성된 공간이 지역의 정체성 및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적 가치, 양식적·

	구조적 특징과 미를 드러내는 예술적 가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통해 현재 및 미래에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활성화,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함 □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해 국내 선행 조사사업 분석 ○ 네 개의 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조사사업 추진목적 및 추진방식, 조사기준으로 제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조사사업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별 특성 및 시사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 조사사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전국 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1999, 건축문화의해 조직위원회),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문화재청),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1999~2003, 경기도), 비지정 건조물 일제조사사업(2005~2008,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분석 ○ 조사 결과 조사사업별로 운영적 측면, 내용적 측면, 과정정 측면에서 특징적인 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사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이를 토대로 ①조사수준 및 질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②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기준을 명확히 제시, ③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조사지침 마련 및 조사자 교육 시행이라는 운영 방향을 도출하였음 □ 해외 사례 분석 ○ 해외의 법제도 및 관리조직, 건축자산 조사·기록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사업 기준 및 등록 절차, 건축자산 유형 및 대상 등을 조사, 분석하여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영국의 english heritage는 직접 방문, 담당자 면담조사 및 현장답사 실시 ○ 조사 결과 미국은 문화재에서 확대된 개념의 NRHPs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록화 프로그램(HABS, HAER, HA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EH에서 1940년대와 1980년대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기초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정부부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분석 결과 건축자산 목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운영, 자산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체계(가이드라인, 교육시행 등) 확립, 활용 중심의 보존정책 추진 등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조사 기준(안) 마련 및 검증을 위한 건축자산 시범조사 실시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조사기준(안)을 마련 - 조사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가치 판단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표(양식서) 작성 방법을 제시함 ○ 건축자산 시범조사 실시 - 조사대상지 : 군산시 원도심 일대, 아산시 구도심지역 일대 - 조사 범위 :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구도심 일부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설정,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 발굴을 위해 그 인근 범위를 2차 대상지로, 다시 시 전체차원에서 우수하고 많이 알려진 건축자산을 포함하기 위해 시 전체를 3차 대상지로 설정 - 조사 기간 : 2013.7~10(약 3개월) - 조사 방법 : 지역 전문가에게 위탁용역으로 협력연구 시행,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주민 및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 발굴 및 정리 - 조사 결과 : (군산시)문화재를 제외하고 수상작 10건을 포함한 총 185건 후보군 목록화, 이 중 총 104건을 건축자산으로 선정,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총 45건에 대해 세부 조사·조사표 작성 / (아산시)문화재를 제외하고 수상작 17건 포함한 총 61건 후보군 및 건축자산으로 선정하여 목록화,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총 11건에 대해 세부 조사·조사표 작성 ○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시사점 및 조사 기준 개선점 도출 - 조사표 보완, 조사표 사진관련 항목 조정, 조사표 작성을 위한 매뉴얼 마련, 조사 절차의 표준화, 조사대상 공간영역 설정의 주의점, 조사 운영상 고려사항 등 □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제시 ○ 건축자산 목록구축을 위해 우선 조사 표준안 및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조사 표준안에는 유형 및 분류체계, 선정기준 및 원칙, 조사항목 및 내용으로 구성하고 각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특히 조사표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유형별로 각각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시함 - 조사 매뉴얼에는 조사 표준안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내용에서의 판단기준, 조사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각각에 대해 실제 운영될 수 있는 사항들로 ‘예시’ 함 ○ 다음으로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제시, 년차별 추진방안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구축된 건축자산 목록이 문서로 사장되지 않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호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계체계를 제시함 - 우수건축자산 건축물을 건축물 관리대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방안 제시, 건축물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차원에서 목록 활용방안, 건축자산 멸실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제시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현재 추진중인「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특히 기초조사와 관련된 별지서식 ‘건축자산 조사양식서’ 마련에 기여 □ 지자체 건축자산 조사 및 발굴 사업진행에 기여 ○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건축자산의 유형 및 분류체계,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원칙 제시, 조사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여 조사표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 사업진행시 활용가능

	□ 지자체 건축자산 조사사업 시행시 조사자들에게 조사 교육자료로 활용 ○ 조사 매뉴얼 제공을 통해 조사자가 조사시 작성 내용 및 방식, 조사시 주의사항, 조사후 결과정리 방식 등에 대해 예시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조사자 교육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 □ 건축자산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 ○ 우수건축자산 제도 도입시 건축물 관리대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건축법 개정안 제시 ○ 건축자산 철거방지책에 부재한 상황에서 건축자산의 철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운영방안 제시로 건축자산 멸실방지에 기여

연구 기관명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보고서명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최윤경	
연구 참여자	박진아, 이세원	
필요성 (목적)	□ 확대일로에 있는 보편적 육아지원이 영유아가구와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육아지원 정책 효과분석의 일환으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조하는 영유아가구 고유의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함. ○ 육아지원의 확대는 전국 가구의 2012~2013 소비자물가상승을 연간 1~2%대로 유지하는데 기여, 공공지원의 확대로 물가관리가 이루어지는 정책효과를 가짐. ○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영유아 가구 개별 가정에서 체감하는 높은 수준의 양육물가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기존 CPI식 고정 라스파이레스 산출방법 외 실제 영유아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육아물가수준을 반영하는 지수 산출을 시도함. - 영유아부모가 체감하는 가격수준 및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영유아부모 체감물가지표를 함께 제시함. ○ 이로써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실제 영유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그 정책적 효과와 추이를 검토함.	
연구방법	□ 육아대표 품목과 가중치의 산출 - 2012년 연구(최윤경 외, 2012)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89개 품목에 대해 재검토하여 대표품목 53개로 축소하고, 가중치를 조정하여 타당도 제고 - 본 과제에서 최종 선정한 53개 육아품목의 월평균 지출 총액은 약 90여만원으로 산출됨. □ 육아물가조사 설계 및 온·오프라인 시장가격 조사 - 육아품목의 동일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산출이 가능한 육아물가조사 진행방법과 조사대상처 선정 및 표본설계(안) 마련 - 오프라인 시장가격 조사, 육아지원서비스 전화조사, 인터넷 가격 조사, 영유아부모 대상 체감물가조사의 4개 조사로 구성. 2013년 5-7-9월 육아대표품목 53개에 대한 육아물가조사 실시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2차분석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된 481개 품목 중, 영유아자녀양육의 육아물가를 나타내는 품목은 12개(상품 9개, 서비스 3개)의 과거 20~30년 및 2013년 현재 물가 추이 분석	

	□ 육아물가지수 및 영유아부모 육아체감물가지표 산출 ○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12개 육아품목을 고려한 육아물가지수(I), 각 육아품목의 대표상품 1개의 가격만을 고려한 육아물가지수(II), 베스트-저가-고가의 다양한 육아상품군가격을 고려한 지수(III-1), 베스트 육아상품군의 가격만을 고려한 지수(III-2)로 산출 □ 전국 영유아부모 대상 5-7-9월 육아물가 부담과 변동에 대한 온라인체감물가 조사 실시
주요 내용	□ 육아물가지수 산출 ○ 2013년 5월, 7월, 9월의 3개 시점 4개월간의 영유아가구 고유의 육아물가지수(II, III-1, III-2) 산출 결과,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의 완만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53개 품목을 고려한 영유아가구의 육아물가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임(*3개 산출: 100.65, 100.80, 101.10). - 5월 대비 9월 기준 동 기간 전국 일반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100.56)보다 높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 및 육아물가의 상승률은 높지 않은 수준임. □ 영유아부모 체감물가지표 ○ 육아품목의 시장가격과는 별도로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출가격에 대한 체감을 조사한 결과, 육아물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높다/오를것이다/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부담 가중에 대한 응답이 많음 - 영유아부모가 체감하는 현재 육아물가수준과 향후 육아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 향후 경기와 생활형편 전반에 대한 전망에 비해 부정적임. - 현재 영유아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물가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재 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서도 큼을 알 수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용 하락과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적 체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별 품목 외, 육아물가와 가계 육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체감까지는 반영되지 못함. ○ 품목별 가격체감도는, 산후조리원 > 돌/앨범 > 완구류 > 교재교구/책 > 유모차 > 매트 > 분유 > 학원 > 겉옷의 순으로 나타남. - 주기적으로 구입 지출해야하는 '소비재'에 대한 가격체감과 부담보다 '내구재/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체감이 큼. - 출산 후 서비스인 산후조리원과 돌/앨범비용, 영유아 사교육비와 영유아 승용물 내구재 및 완구류에 대한 영유아가구 가계부담이 큼. ○ 육아지원의 효과가 개별 품목(예: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에 대한 비용하락의 체감에 일정부분 반영되었으나, 영유아가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육아품목 바스켓 총량의 물가와 체감에는 유의한 효과를 낳지 못함. 이미 높아진 가격수준에 대한 부담과 지속되는 지출 비중으로 인해 육아물가에 대한 체감지수가 영유아가구의 높은 부담률을 보여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양육비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서는 육아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육아관련 물가 관리도 병행되어야 함. ○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가격 하락의 실질적 체감이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육아부담의 완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대상과 품목의 확대, 현물과 현금의 지원 방식이 다변화 될 필요가 있음. - 육아물가관리의 대상과 내용을 서비스 위주에서 상품 품목으로 확대함. ○ 가계부담이 높은 품목(예: 산후조리원, 분유, 기저귀, 사교육/교재 등)에 대한 지속적 물가관리가 요구됨. - 가격인상 상한제, 가격정보 공개, 부가가치세 면제, 육아필수 품목의 직접 지원(바우처 제도), 그리고 영유아부모 대상 부모교육과 다양한 육아정보의 제공을 실시하도록 함. □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시장가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육아물가 조사의 주기적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육아물가지수과 체감지수의 공표가 필요함. ○ 기존 소비자물가지수 외 영유아가구 고유의 '육아물가지수' 산출과 '부모체감지표'를 제시, 육아지원의 정책적 효과 제고를 위한 지표를 산출, 제시함. □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용 관리를 ① 가격정보의 제공과 ② 가격상한제의 적용, ③ 가격인상시 상승률에 대한 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함. - 육아물가관리는 수요자 영유아와 부모에게 가격 수준과 인상분에 해당하는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육아물가의 질적 관리가 필요함(예: 교사인건비 상승률의 고려). - 육아물가체감지수에서 학원/학습지의 가격수준과 부담에 대한 체감이 크므로, 시장 가격 규제의 정책적 범주 안에 기타 사교육(학원, 학습지 비용)을 포함, 사교육의 가격 인상과 가격수준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 설계(보육료·교육비, 양육수당, 보조금 지원에서)와 표준보육료/유아교육비의 산출 시 육아물가 인상률과 육아물가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함. □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동육아의 장과 품앗이, 일시보육, 육아품목 대여, 놀이활동 등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아품목 구입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음.

Ⅱ 2013년도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우수과제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국토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통일연구원
8. 한국개발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한국교통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 한국행정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5. 육아정책연구소

Ⅱ 2013년도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우수과제

□ 우수과제 선정기준

- 연구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우수연구과제(국가정책기여도) 후보로 확정
- 연구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우수보고서 사례를 연구기관 평가단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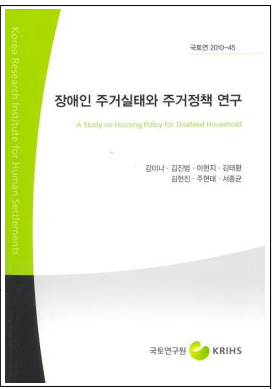
□ 우수과제 현황 : 25개 과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과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이광호
국토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강미나
대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임민경
산업	성과공유제 실태분석 및 확산방안	주 현
에너지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강윤영
정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재영
통일	Trustpolitik :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박형중
KDI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의료, 교육,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김주훈
교육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황준성
평가원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양정실
교통	국가교통 조사 및 DB 구축사업	김찬성
노동	고용영향평가사업(일·가정양립지원정책외18건)	윤윤규
농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공성용
법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연구를 중심으로-	김윤정
보건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기관	연구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여성	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개선방안	황정임
조세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박형수
직능원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연구	김상진
청소년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김기헌
해양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강종호
행정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정지범
형사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	박준휘
환경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Ⅱ)	공성용
건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성은영
대학원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평가대상 연구보고서가 없음.	
육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이미화

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안과제( ) 일반과제(✓) 과제번호 CC2302B-행동100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창조과학부
연구 과제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이광호	
연구 참여자	양승우, 손수정, 최종화, 김승현, 이세준, 강지훈, 이아정	
필요성 (목적)	□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 - 신(新)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창조경제 구현이 설정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이 정책 아젠다로 부상 - 기업 등 현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요청 -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연구개발 제도 위주의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활용될 수 있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제도, 인프라 등 혁신 전주기 관점에서의 규제개선 필요 □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적 환경 구축이 절실 -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2013년 기준, 국가경쟁력은 25위인데 비해 규제부문은 100위권)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 대책 및 체계 구축이 필요 -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혁신활동 전주기에 걸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필요 -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정책방향 설계와 더불어, 규제개선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필요	
연구방법	□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 과제 도출 - top-down식 법령검토, 기존 문헌 및 자료 분석, 기사 검색 등을 통한 과제 도출 -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과제 도출 및 의견 수렴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간략 설문조사 실시 및 과제 발굴 □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 방안 수립 - 규제개선 과제 pool 확보 및 정리, 단계별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 중점 규제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및 조율 - 범부처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 상정용 과제 확정	

주요 내용	□ 부문별 규제개선 과제 -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부문 : 융합·첨단 분야 중복성 심사 완화, 연구실 안전조성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중규제 개선 등 5개 과제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 - 기술사업화 및 창업 부문 :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제도정비, 창업연대보증 규제개선, 농업분야 국가연구직 연구원 창업 규제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 - 신산업 육성 부문 : 스마트카 활용 주파수 할당 관련 규정개선, 빅데이터 관련 규제 재정비, 국방분야 국산 SW 역차별 제도 개선 등 20개 과제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 - 과학기술 혁신기반 강화 부문 : 국제특허 관련 비용 통합관리, PBS 하에서의 3책5공 제도 개선,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통합화 등 9개 과제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 □ 규제개선 과제의 유형별 특성 - 관련 주체별로는 기업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응 전략별로는 제도개선, 규제유형별로는 경제적 규제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과학기술 규제개선 정책방향 -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과제의 전(全)방위적 발굴 - 글로벌 과학기술 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과학기술 규제지원센터(가칭) 신설 등 혁신주체에 대한 규제정보 지원 강화 - 과학기술 규제개선의 사전 타당성 및 사전·사후 파급효과 분석·반영 - 규제개선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상황 점검 □ 과학기술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방안 - 체계적 과학기술 규제개선 시스템 및 추진구조 구축 - 사회적 합의도출 및 규제개선 정책수단 활용을 통한 혁신촉진형 제도기반구축 - 규제지원센터, 규제정책연구사업 등 과학기술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 정책 기여 - 미래부는 본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범부처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2013. 12. 17)하고, 제4차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원안 의결(2012. 12. 19) - 미래부는 본 연구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규제지원센터를 KISTEP에 설치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도출을 주기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체계 구축

연구 기관명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명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연구 책임자	강미나	
연구 참여자	김진범, 이현지, 김태환, 김현진, 주현태, 서종균	
필요성 (목적)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애란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수는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중 약 5.2%이나 2000년 이후 연평균 10.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화, 주거권의 요구 등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정상화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다름없는 생활,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보편적'인 인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 ○ 대부분 주택정책의 대상기준은 소득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주거욕구나 복지정책 소요에 대한 파악이 거의 전무하였음 □ 따라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거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주거실태, 주택정책 현황과 문제점, 주거복지소요 추정, 주거부담 분석, 외국의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및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정책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이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이론 고찰 -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및 정책기준에 대한 개념 검토 □ 계량 및 통계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의 「2008 장애인 실태조사」, 국토해양부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 □ 계량모형 구축 - 장애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 모형 구축	

	□ 전문가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담당 공무원 35%, 학계 35%, 장애인단체 종사자 30%)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자체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의 시·도청, 군·구청, 자활센터, 민간단체, 복지관 관련자 10인) □ 외국 사례 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와 협력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의 장애인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분석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회 개최
주요 내용	□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 파악 ○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파악하고 주택정책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 등을 파악 ○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점과 한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정책의 근거법, 주택공급정책,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주택개조지원의 프로그램속에서 현황과 전달체계,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 ○ 중앙, 지자체, 민간 NGO의 장애인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 □ 미국, 영국,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인 주거정책을 주택건설 및 개조기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수선 및 개조지원, 케어와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상담 등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내용과 함께 정책 집행 주체와 역할 등 전달체계도 분석 □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 장애인의 주택정책별 주거복지소요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주거정책 프로그램 공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법안에서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인 시행방안을 제시 ○ 현행 주택정책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진일보된 장애인 주거안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제시 ○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정상화, 소요 맞춤형 정책, 수요지향적 정책개발과 전달체계, 주거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 강화, 지역밀착형 정책 강화 ○ 범부처적인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장·단기 측면에서 제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법률제정에 기여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 국토교통부(타법개정) 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28. 제24545호,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3.23. 제1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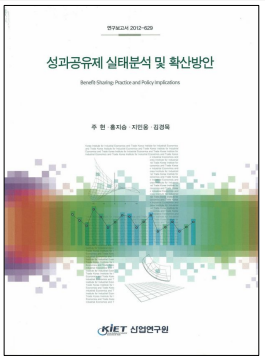
□ 제안내용과 법률, 시행령 반영 사항

제안내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장기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주택종합 계획과의 연계 및 법적·제도적 지위에 대한 명확화를 제안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	
–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책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하도록 하는 **지역밀착형 정책 강화** 제안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	
–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의** 정기적인 시행 제안	제7조(주거실태조사)	제3조에 반영
– 장애인 거주에 적합한 **주거기준** 제안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반영	
–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규주택공급 및 임대주택공급, 공급량 등 **주택공급** 제안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에 반영	
– 장애인 가구의 임대주택 소요를 추정하여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반영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자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안	제12조(주거약자용 임대사업자 지원)에 반영	
– 민간 임대주택업자의 장애인용 주택공급시 **주택 개조비용 지원**을 제안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 반영	
– 장애인 가구의 **주택개조비용지원 정책 대상자**를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별로 추정하여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에 반영
– 장애인용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장애인에게만 임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반영	
– 장애인 주거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관리를 전담할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 제안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에 반영	제9조에 반영

연구 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명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임민경	
연구 참여자	여지나	
필요성 (목적)	□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제조업체도 일부는 국내로의 복귀를 타진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이러한 국내로의 유턴(U-turn)을 지원하기 위한 task force를 가동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 ○ 본 연구는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연구목표를 가지고 접근함. 즉, 유턴에 적합한 기업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과 각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을 시도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지식경제부와 각 지자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 지원에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매트릭스 분석과 FTA 양허안 분석 ○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의 파악을 위하여 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유형을 매트릭스로 분석하여 적합한 기업 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들 중 한-미/한-EU FTA를 활용하여 관세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적절한 업종을 도출 □ 문헌 연구 ○ 미국, 일본, 대만의 유턴지원정책을 지원항목별로 한국의 지원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현지 인터뷰 ○ 연구의 현실성을 위해 임가공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요령성, 산둥성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현지 조사 지역을 유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임가공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유턴 가능 유형 도출과 유턴 정책 개선 방안 제시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유턴에 적합한 유형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유형화하고, 한-미/한-EU FTA 관세양허안을 분석하여, 유턴 시 관세철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관세 품목업종을 선별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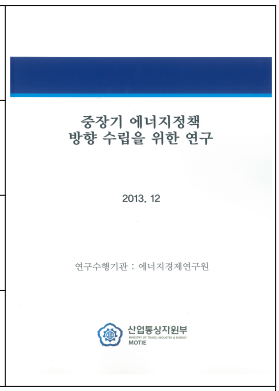
	○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유턴에 적합한 2개 유형을 도출한 결과, 부자재를 한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하고 가공한 후, 제3국이나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부분 복귀의 형태로 유턴 가능성이 존재하는 유형은원부자재를 조달해 중국에서는 임가공만 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전형적인 임가공 업체들로 나타남.(3장의 1) ○ FTA 관세삭감 양허에 의한 관세절감 효과가 큰 업종을 선별하기 위하여 양허안을 분석함. FTA로 인한 관세절감의 효과는 원래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철폐가 즉각 시행될수록 유리하므로, 관세삭감 스케쥴이 즉각철폐에서 5년 이내 철폐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3장의 2) □ 유턴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유턴 정책을 비교분석 (4장) ○ 미국은 제조업 기반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턴 정책의 추진 동기가 보다 거국적이며, 미국 정부가 유턴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정치, 경제적 반대 급부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 ○ 대만의 유턴 정책은 대중국 경제 존속의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존재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음. ○ 일본은 한국이 유턴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정책적 유사성도 보이지만, 한국의 유턴 기업 유형은 일본의 그것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 □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제시 (5장) ○ 한국의 유턴 유형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부분 복귀’ 장려 및 지원 확충, 중앙 - 지자체 간 협의체 및 유턴 홍보기제 마련, 중·장기적 로드맵의 구축, 다양한 유턴 모델의 발굴, 원부자재 조달 원활화, 일자리 수급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산 문제 해결의 한-중 FTA 투자협정 상의 반영 가능성 등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분류,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시 선택과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턴 시 ‘부분복귀’ 장려 및 지원 확충 ○ 잠재적 유턴 가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지원 플랫폼 마련 ○ 유턴기업과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원부자재 조달상과의 동반 복귀 및 이를 위한 임대부지 마련 ○ 지역 내 산관학 협력 클러스터 형성 ○ 현지 청산 원활화를 위한 한·중 FTA 투자 협정상의 반영 가능성 □ 대안의 정책화 과정 ○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2013.5.9) 개최 ○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의 활로로써 유턴 활성화와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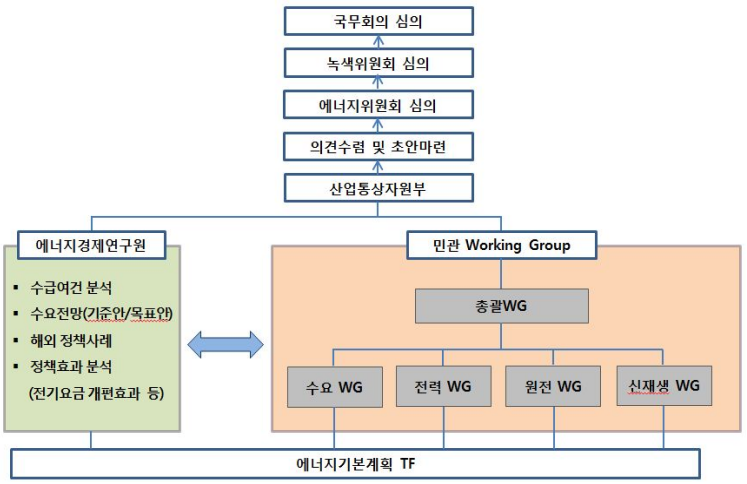
	○ 산업단지공단 주최 '유턴기업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지원방향' (2013.9.11) 토론 ○ 중소기업청 주최 「유턴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자문회의(2013.9.30) 참석 ○ 2013년 9월, 중소기업청은 유턴지원법 시행세칙 제정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자문회의를 개최 ○ 유턴지원법 제정 후 새롭게 발견된 개선사항을 반영(유턴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정책 보완) □ 대안의 정책화 실적 ○ 2013년 8월, 「유턴기업지원법」 제정 ○ 부분유턴 장려, 동반복귀 지원강화, 산관학 연계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해외사업장 청산뿐 아니라 축소도 유턴기업에 포함(제2조),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 입주조건을 개선(제16조 제2항, 제3항), 산관학 클러스터 조성 지원(제16조 제4항) 등 ○ 범정부 유턴기업 지원위원회 구성, 추진(2013.8) ○ 2013년 12월,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2013.12.7.)에 맞추어 유턴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세칙에 반영 예정) ○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완·강화 ○ 인력, R&D,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 ○ 유턴기업의 국내수요 확보 및 현지사업장 청산지원 체계를 구축 계획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청산절차 완화에 관한 사항 한·중 FTA 협상 의제에 포함 검토 □ 파급효과 ○ 유턴 추진 중인 기업의 업종 증가 및 다양화 - 기존에는 주얼리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집중되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 자본집약적 산업도 유턴 추진 중 -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등이 이에 해당

연구 기관명	산업연구원	
연구 과제명	성과공유제 실태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책임자	주현	
연구 참여자	홍지승, 지민웅, 김경묵	
필요성 (목적)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위 윈-윈(win-win)하는 바람직한 제도에 해당 ○ 대·중소기업의 공동 목표에 대해 중소기업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혁신 노력을 추동할 수 있고 대기업도 그 성과를 함께 공유 가능 □ 우리 사회에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이해는 아직 낮은 수준 ○ 성과공유제의 개념을 재확립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새로운 노력과 수단 필요	
연구방법	□ 성과공유제의 이론적 논의 및 개념의 재정의 ○ 성과공유제에 대한 항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과공유제의 경제적 합목적성을 논의하고 개념을 재정의 □ 성과공유제 추진실태 파악 ○ 현재 우리나라 성과공유제 확산 통계를 통한 현황 파악 ○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파악 □ 사례 분석 ○ 국내의 경우 민간 부문의 포스코, S전자, KT, 공공 부문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를 분석 ○ 해외의 경우 민간 부문은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 사례를, 공공 부문은 영국, 호주 및 미국의 사례를 분석 ○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의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 성과공유제의 개념 및 유형 ○ 성과공유제란 기업 간에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 제도로 재정의 ○ 성과공유제 유형으로는 ㉠ 공급사 제안, ㉡ 공급사 개발, ㉢ 목표원가제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	

	□ 성과공유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성과공유제 실태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기업은 성과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향후 성과공유제는 현 수준보다 더 확대될 전망 ○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CEO 및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공유 제안에 관심을 갖고 성과공유 과제 수행을 위한 역량 배양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 -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적 계약시스템으로 인해 성과공유제 도입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국내 성과공유제 사례 분석 ○ 2000년대 중반부터 성과공유 활동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관련 활동들을 크게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특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성과공유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사의 특성에 맞게 성과공유 활동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사업추진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 □ 해외 성과공유제 사례 분석 ○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개선되며, 협력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서비스 향상 등을 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도 촉진 가능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기본방향 ○ 성과공유제의 확산 노력 필요 - 성과공유제를 협력활동 일반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경계 ○ 성과공유제는 기업들이 자체 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 - 외부의 지나친 개입은 성과공유제를 왜곡시킬 우려 -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왜곡된 거래관행과 계약문화를 바꿀 유인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성과공유제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성과공유제의 내실화 ○ 성과공유제 개념의 명확화 □ 성과공유 모델의 발굴 및 확산 ○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의 발굴 및 확산 필요

	□ 성과공유제 추진 임직원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 ○ 기업 내부에 성과공유제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인 제공 □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 ○ 기업의 인식 제고와 여건 조성: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등 ○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제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등 ○ 정부 지원사업에서 성과공유 계약 우대 □ 대기업-중견기업의 성과공유 계약 확산 ○ 중견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확대 ○ 대기업-중견기업의 성과공유도 필요 □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확산 여건 조성 ○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제 개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 정부의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과제 확인요건의 구체화 ○ 성과공유 과제 확인요건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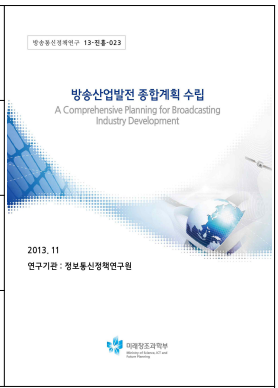
연구 기관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과제명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 책임자	강윤영	
연구 참여자	최도영, 노동석, 임재규, 조상민, 소진영 외 11명	
필요성 (목적)	□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국내외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였음. ○ 급격히 상승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급락하였으나, 세계경제가 회복기를 맞게 된 2009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다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전세계의 빠른 에너지 수요증가와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을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세계 경기위축과 맞물리면서 연관 산업이 단기적 침체를 겪는 등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 ○ 반면, 셰일가스·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원의 생산개발 확대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신재생 등의 신에너지원이 본격 활용되기 전까지 고유가와 자원 민족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2008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투자 증가로 산업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 통계 생산 및 검증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및 수단을 개발하고, 에너지원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방법	□ 에너지경제연구원내 분야별 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 ○ 수요전망, 수요관리, 신재생, 원전, 정책개발팀을 운영 □ 장기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망 시스템(KEEI-EGM System)을 활용 ○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 부문별 기준 에너지수요(BAU)를 전망하기 위해 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 개발·운용하고 있는 KEEI-EGM System을 활용 □ 에너지 수급 및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정부·시민단체·학계·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에너지, 총괄 등 5개 분과별 전문가회의 운영 결과를 에너지 믹스(안) 도출에 활용 
주요 내용	□ 대내외 수급여건 변화 ○ (대외 여건)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 고유가 지속,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확대,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정책 변화,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 (대내 여건) 전력수급 여건악화,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 강화, 송전여건 악화, 다양한 갈등과제의 등장, 온실가스 감축여건 변화 □ ’35년 수요전망(BAU) 및 에너지믹스 목표 ○ 총에너지는 전망기간(’11～’35년)중 연평균 1.3%,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9% 증가 ○ 에너지 원단위는 매년 1.4%씩 개선되어 ’35년에는 2011년 대비 30% 개선 ○ (원전)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 등을 종합 고려, 총발전량의 22～29% 범위를 제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재산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수요의 11% 공급을 목표 □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과제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 ’35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BAU 대비 13.3% 감축, 전력 수요는 15.0% 절감을 목표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 ICT활용 에너지수요관리 시장 창출, 수송·건물·에너지기자재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수요, 공급, 감축기술 등 에너지 정보관리 시스템 혁신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 ’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할 것을 목표 - 송전선로 건설시 수용성 제고 등 합리적인 송전망 계획 및 수도권 송전망의 안정적 운영 ○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 - 원전산업 혁신 및 원전 안전성 강화, 에너지시설의 안전제도 확충 및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분산전원·수요관리 등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중점 추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전략적 투자체계 구축 등 기술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 에너지안보 강화 - 자원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 및 ‘35년 5대 신재생에너지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동북아 에너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 국제공조 강화 등 ○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 효율개선 개편, 에너지복지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복지 제도 개편 -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지역에너지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에너지 정책기반 구축 등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참여 확대 - 사후적 갈등 해소·조정에서 사전적 갈등 예방에 중점의 선제적 갈등관리 체계 확립 ○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석유·가스의 공급 다변화, 공급인프라 적기 확충 등 안정적 공급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현물시장 활성화 등 석유·가스 산업구조 선진화 등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전문 분야별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 TF’에서 초안 작성 ○ 에너지위원회(’13.12.30) → 녹색성장위원회(’14.1.8) → 국무회의(’14.1.14)에서 심의 확정 □ 주요 정책 제시 ○ 국가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2대 비전 및 5대 정책목표) 제시 비전: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국민신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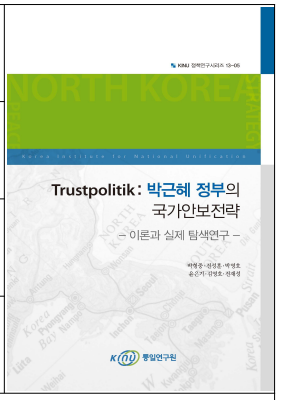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에너지수요 전망(BAU) 및 수요관리 목표 제시
- (기준전망, ’11～’35년, BAU): 총에너지 수요 연평균 1.3%, 최종에너지 수요 0.9%, 전력 연평균 2.5% 증가
- (수요관리목표) 가격정책 및 부문별 수요관리를 통해 ’35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BAU 대비 13.3% 감축, 전력 수요는 15.0% 절감

○ 국가 적정 에너지믹스 설계
- (에너지공급구조) 국민수용성·안전·환경요소를 최대한 고려
- (원전비중)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9%로 결정
- (신재생) 보급잠재량·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11% 수준의 보급목표 설계
- (석탄·LNG) 경제성·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설정

연구 기관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과제명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책임자	이재영	
연구 참여자	박동욱, 이종원, 곽동균, 박병선, 김민철, 황준호, 심홍진, 이종관, 김성민	
필요성 (목적)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와의 조화 발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송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으로 방송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콘텐츠 이용행태가 변화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동반됨에 따라 방송광고수익이 감소하는 등 시장 환경이 악화 □ 본 연구에서는 방송 · 미디어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당면한 제도, 산업 구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방송·미디어 시장 현황(통계 등) 및 법제 현황 분석 ○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과 관련한 기존 연구 분석 □ 연구반 운영을 통하여 발전방안 초안 마련 ○ 미래부, KISDI, ETRI, KCA, NIA, 미디어미래연구소 등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하여 정책방향 프레임워크와 정책방안을 도출 □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주관 학계, 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반에서 마련된 발전방안(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지상파, 유료방송, PP, 콘텐츠제작사, 구글코리아, 그레텍(곰TV) 등 '업계 전문가' 간담회와 경제학, 법학, 신문방송학, 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 공개토론회』개최 ○ 학계·연구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 및 일반 대중의 여론을 수렴	
주요 내용	□ 방송산업을 재정의하고 방송산업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조명해 보는 한편, 창조경제와 방송산업의 관계 및 ICT산업과 방송산업의 관계를 검토 □ 온라인 중심의 스마트미디어 발전에 따른 방송산업 환경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진화 방향을 검토해본 다음,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	

	□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고 규제체계 및 진흥정책을 검토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동향 ○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의 스마트미디어 관련 규제 정책 ○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의 스마트미디어 관련 진흥 정책 □ 국내 방송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신성장 기회를 검토해보고,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 ○ 방송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 역동적·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안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방송 규제 완화, 방송콘텐츠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육성,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의 5대 추진전략별로 나누어 제시 ○ 경직적인 방송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콘텐츠진흥 및 글로벌 지원정책의 틀을 단순 일회성 지원에서 기획·유통·사업화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스마트미디어의 등장, UHD 및 향후 post-UHD 서비스에 대응한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 ○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8VSB, MMS 도입방안 강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안을 제시 ○ 개별사업자 단위의 진출이 아닌 국가적 통합브랜드(K-portal)를 구축·진출하는 방안, 기획단계에서부터 국외진출을 염두에 둔 ‘글로벌 제작협력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 ○ 해외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입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콘텐츠부문의 체질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콘텐츠 제값받기, 공정수익배분, 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을 제시 ○ 스마트미디어 생태계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 마련, 기술·서비스 개발지원, 스마트광고 산업 육성 등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방송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홈 산업 육성, UH방송 상용화 로드맵 제시,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네트워크 고도화 등 정책방안을 제시 □ 본 보고서가 제안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기대효과를 제시 ○ 종합계획의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방송산업매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방송 이용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미래부·방통위·문체부 공동으로 제안한『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2.10)에 반영 ○ 창조경제에서 차지하는 방송산업의 의의를 제시 ○ 스마트환경 도래, 콘텐츠 다양화·시장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이용자 시청행태 변화 등 방송산업 환경변화를 분석 ○ 방송시장 현황 및 문제점, 성장잠재력과 신성장 기회를 정리하는 등 방송산업 경쟁력을 분석

	○ 방송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투자촉진 및 경쟁력 제고,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제시하여 정부안의 '5대전략 19개 정책과제의 전체 프레임웍'에 반영됨 ○ 전략 및 정책과제 : 방송산업 규제개선,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의 5대 추진전략의 세부 추진 과제들을 제시 □ 미래부「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13.12.26) 시에 반영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방송산업 규제개선 방안이 포함·발표됨에 따라 2012년 2월 입법예고했던「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수정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개선" 부분만을 재입법 예고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은 폐지하고 가입가구 제한을 '종합유선방송 사업 가입가구'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기준으로 완화 - 본 보고서가 제시한 '방송산업 규제개선' 내용 중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부분에 해당

연구 기관명	통일연구원	
연구 과제명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연구 책임자	박형중	
연구 참여자	전성훈, 박영호, 김영호, 윤은기, 전재성	
필요성 (목적)	□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본 틀인 Trustpolitik을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신뢰정책의 타당성 및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학술적·이론적 논리를 개발·제시 ○ '신뢰'(Trust)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신뢰의 개념을 국내정책에 적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이나 신뢰를 국방, 통일, 외교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제기는 박근혜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기본 틀인 Trustpolitik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 - 따라서 "Trustpolitik"에 대한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국정목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과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는 다양한 논리와 자료를 개발·제공 ○ 신뢰정책, 신뢰외교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의 이해도와 설득력을 제고	
연구방법	□ 연구 수요조사 ○ 정기 수요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수요 파악하여 연구수행 심의 및 수행 결정 - 통일부 정책기획과 요청 □ 연구 수행 ○ 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처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정책협의 - 월례 북한정세 토론회 개최(6/4):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등 참석 하에 박근혜정부의 효율적 대북정책 방향 모색 ○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 Trustpolitik이 큰 틀의 국가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이론의 관점에서 Trsutpolitik을 분석 ○ 향후 Trustpolitik을 이론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분석틀 제공 - '전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를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분야로 한정하여, 군사 분야에서 연구·개발된 전략이론과 관련 개념을 국가 전체의 범주에서 해석 및 적용하여 Trustpolitik을 이론적으로 보강 및 실천적 추진방향 탐색	

- 전략이론의 관점에서 Trustpolitik을 국방통일외교의 세 국정분야에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대전략으로 규정

□ Trustpolitik에서 규정하고 있는 튼튼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차원에서 신뢰의 개념을 국방정책에 투영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

- 신뢰국방 확립을 위한 3대 중점영역 및 추진방향 제시
  · 강력한 대북 방위 및 억지력 확립
  · 능동적인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
  · 신중한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
-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군의 전투의지와 사기 증진을 위한 군의 투철한 직업의식 고양과 군인정신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 제기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국방예산 편성 및 운용과 이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

□ Trustpolitik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구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에 대한 연구

○ 신뢰라는 개념이 남북관계와 통일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차원의 심층연구 추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하여 변화된 국내외 상황과 남북관계의 현실, 국가장기발전전략,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남북공동체통일방안」 제안

□ Trustpolitik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연구

○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및 탈병진 기초 마련, 비핵화와 통일기반 조성 필요

-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한국의 외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통일 전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을 분석하고 서독의 경험이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

○ 동서독 관계에서 신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경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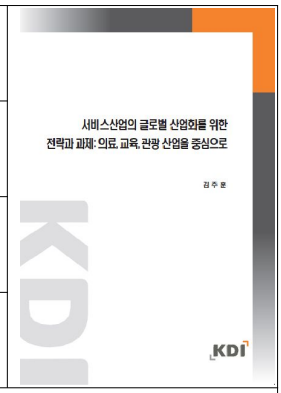
- 서독이 장기간 축적해 온 신뢰 덕택에 독일통일은 주변국으로부터 적극적 저항을 받지 않고 추진 가능, 특히 미국의 서독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요인

□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갖는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연구

○ 신뢰의 이론적 의미와 개념 탐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Trustpolitik을 신뢰의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국가전략의 이론적·정책적 방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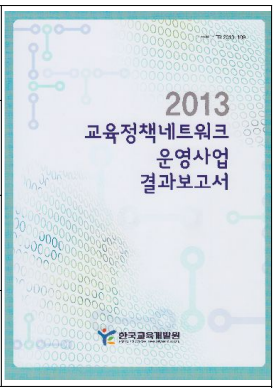
-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호혜성에 근거한 국제적 합의나 규범을 따를 시 이에 대해 보상하는 상호적 인간형과 상대방이 규범적 합의나 규범을 어기면 보복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보수·대응적 인간형 등 두형태의 적용이 남북관계 전략에 필요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본 연구는 Trustpolitik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철학적, 정책적 심층연구를 통해서 Trustpolitik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대전략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신뢰의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짐. □ 신뢰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책을 대량으로 창출 ○ Trustpolitik에 근거한 통일정책 제시 - Trustpolitik에 기반한 주요 통일정책과제 식별 -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보완할 필요성 제시 ○ Trustpolitik에 근거한 외교정책 제시 - Trustpolitik 하에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목표 제시 · '2014 대통령 신년사'에 본 보고서의 향후 외교정책 목적 반영 · 박근혜대통령 기고문(2013.12.30.) "Reinvent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에 일부 반영 ○ 신뢰국방정책 확립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정책 방안을 제시 - 신뢰국방정책 확립을 위한 3대 중점 영역 및 추진 방안 · 강력한 대북 방위 및 억지력 확립 · 능동적인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 · 신중한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Trustpolitik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정책 방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통일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국정지표에 근거하여, 통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2014년도 중점 사업으로 채택 - 통일부의 정책 목표 설정과 추진 방안에 본 저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 채택 - 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기반구축'과 관련한 정책 작성에서 본 보고서 참조 ○ 외교부의 신뢰외교 정책은 -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신뢰외교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저자가 외교부 정책 자문을 통해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정책 추진 방안 작성에 반영하도록 작용

연구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과제명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의료, 교육,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연구 책임자	김주훈	
연구 참여자	한동우, 배좌섭, 최석준, 류광훈	
필요성 (목적)	□ 서비스산업은 성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해관계의 저항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지 못한 결과 추진 효과가 높지 못함 -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 교육 등이 공공성과 직결되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서비스산업을 내수산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 제로섬 게임의 구도에 빠져 있기 때문임.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대외지향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 -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능력 제고가 필요하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여 글로벌 산업화를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	
연구방법	□ KDI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 관하여 다년간에 걸친 연구가 축적 - KDI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서비스 수지적자, 서비스산업의 R&D투자, 의료산업의 투자개방화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최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수중심의 제로섬 상황에서 벗어나 수출 등 대외지향적 육성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KDI의 서비스산업 연구성과에 주목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13. 9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 - 이에 따라 KDI에서는 연구팀을 결성하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	

주요 내용	□ 주요 연구내용 ○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비교역부문이었던 서비스산업도 글로벌화가 진행. 특히 기업지원서비스(혹은 사업서비스) 및 의료, 교육, 관광 등에서 글로벌화가 급격히 전개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의료, 교육, 관광 산업의 글로벌화로 연구를 집중 ○ 의료산업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국인 환자 및 의료수출을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수립 ○ 교육산업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학교 유치를 통해 중국 등 주변국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동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육성하고 동시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합작 등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양자간 경쟁화 ○ 관광산업은 중국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한지역에서 허용(예: 카지노)하고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 ○ 정책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의 이해관계자 면담 및 규제실태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작성 - 인천 경제자유구역(3회), 제주특별자치도(1회) 등의 인천자유구역청, 제주개발공사는 물론 현지 의료기관(제주)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세부적 규제 및 건의사항을 청취 -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13.11.28)에서 연구책임자(김주훈)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소관부처들에게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수립을 지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책대안 제시 ○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부분 기인하였음. - 만일, '90년대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이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더라면 200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현재 실적치보다 약 0.6%p 높았을 것임 ○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로 1980~2010년간 연평균 서비스 교역 증가율은 7.9%로서 상품교역 증가율 6.6%보다 오히려 높았음(WTO 자료) -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조차도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독일 및 일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낙후되었음을 의미 ○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 교육, 관광 산업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육성방안은 이미 수립되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성장전략이 시급한 과제 - 글로벌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육성과제를 도출 ○ 의료산업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국인 환자 및 의료수출을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수립

	-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유치가 부진한 것은 수도권 병원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보는 외국병원 전략에 기인 - 따라서 외국병원 유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병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출시키고 중국 등 주변국 환자들의 의료집적지로 육성. 이 경우 재원조달 등이 필요하므로 자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 - 해외진출의 경우에도 재원조성 및 해외 수익금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 ○ 교육산업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학교 유치를 통해 중국 등 주변국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동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육성하고 동시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합작 등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양자간 경쟁화 -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명문대 진학률이 높을 경우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 - 고등교육기관은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연계를 통해 취업률 제고. 특히 산업현장 교육을 중시하는 해외 명문교를 유치 - 이들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송금허용 등 관련규제를 개선 ○ 관광산업은 중국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한지역에서 허용(예: 카지노)하고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 □ 정책기여 실적 ○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정책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할이 기대되는 경제자유구역에 주목하여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의 동북아 허브 육성 방안을 제시 - 동북아지역의 외국인 환자, 학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집적지 육성방안을 제시 - 연구결과는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3.11.28)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의 형태(PPT자료)로 보고되었음 ○ 이 자료에서 제안된 각 정책방안중 의료 및 교육 대책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12.13)에서 정책추진방안으로서 보고되었고 관광산업 대책은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2014.2.3)에서 정책추진방안으로 보고되었음

연구 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과제명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연구 책임자	황준성	
연구 참여자	임소현, 조옥경, 최미영, 이미림, 심지혜, 김평화, 전해령	
필요성 (목적)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정의 ○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체제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2조). -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의 협력체제로서 구축된 네트워크 시스템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교육관련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력 필요성 증대 ○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의 교육 이슈별 신속한 대응 필요 ○ 교육정책 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정책대상 집단의 신뢰 제고 및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 □ 사업 추진의 목적 ○ 교육부-시·도교육청-연구기관 등 교육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장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 ○ 교육정책 집행과정 및 현장교육 개선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체제 구축 ○ 교육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효과적 수집·분석 및 제공의 체계화를 통한 교육정책 흐름 선도 및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제 확립	
연구 (추진) 방법	□ 네트워크 포스트들 간 연계 담당 조직으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은 네트워크 포스트들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센터'의 기능을 수행함(훈령 제7조). ○ 사업비는 교육부 출연금 및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충당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증액(%)
교육부 출연금	300백만원	300백만원	-
시·도교육청 분담금	685백만원	715백만원	30백만원(4.4%)
총 액	985백만원	1,015백만원	30백만원(3.0%)

	- 중앙정부 재원의 경우, 2012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부터 교육부 출연금으로 전환 - KEDI 등 교육관련 유관기관은 인적 자원 및 전문성·정보 제공 □ 참여기관 간 정례협의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사업 운영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KEDI, KICE, KRIVET, KERIS, NILE, EBS, KOFAC) 간 정례협의(실무회의 4회 등)를 통한 사업의 공동계획·추진 및 참여 ○ 세부사업 추진 시에 교육정책네트워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조사 실시·반영 -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요구조사 실시: 4회 - 교육현장지원연구 현장개선 과제 주제 요구조사 실시: 1회 등 □ 자체평가 사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결과의 지속적 환류 ○ 교육정보 공유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실시(온·오프라인 총 6회) ○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평가회 개최를 통한 사업 점검 및 개선사항 보완(1회)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운영
주요 내용	□ 협업체제 구축 및 교육정책 의제 발굴 ○ 교육정책협의회(책임관 회의, 실무회의, 유관기관 담당자 회의 등) 개최 - 교육정책 현장착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제공 - 향후 추진할 현실적인 교육정책 의제 발굴 ○ 교육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과제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원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다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책 방향 및 정책 추진 전략 설정 □ 교육현장 개선지원 ○ 행복교육현장토론회 개최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교육 이슈 및 핵심 주제에 대한 해당 권역 인사 중심의 심층토론의 장 제공(참여기관 공동의 주제 선정 및 전문성에 따른 공동 주관) ○ 교육현장지원연구 추진 및 결과발표회 - 모든 시·도에서 당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시·도 간 중복연구를 피하고 국가 수준의 연구 효율성 제고(시·도 및 교육부 합의에 의한 공동 주제 선정) ○ 교육정책컨설팅 - 교육공동체가 공동의 과제로 안고 있는 주제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지원 ○ 이슈페이퍼 발간 - 현안 이슈를 선정하여 실태와 과제, 향후 발전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 학교현장자문단 운영 - 학교현장과의 지속적 교류 체제 구축 및 학교중심 '교육' 네트워크의 보완 ○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 워크숍 - 특정 중요 정책에 대해 관련 정책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 간 의사소통 및 집중 논의 기회 제공, 각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 교육정보 공유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발간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최신 언론 보도자료와 교육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국제경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다양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

- 국내 주요 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교육정책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시사점을 주고, 교육정책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

○ 교육정책포럼 발간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지원 및 교육정책 분야의 대안적 뉴스미디어 역할과 함께 국내 오피니언 리더에게 교육토론의 장을 제공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

- 사업 전반의 성과 및 결과물, 그밖에 교육현안, 정책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 판단, 연구, 결정에 기여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교육공동체 간 협업 체제 구축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의제 발굴

○ 참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10회 개최

협의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교육정책 협의회	기관장회의	장관	교육감	기관장
	책임관회의	차관	실·국장	부원장
	실무회의	담당관·담당자	담당 장학사	담당 실무자
	유관기관 담당자회의			담당 실무자

- 책임관회의 1회는 정부방침에 따라 참여기관(교육부, 유관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대응한 영상회의로 실시

○ 현안과제의 다층적 논의를 위한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0회 개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방향(2.22), 국민대통합을 위한 교육과제(3.1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제(3.15), 교육정책 자문기구 평가 과제(3.25), 학교밖 교육활동 관련 법제 정비방안(7.31),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9.2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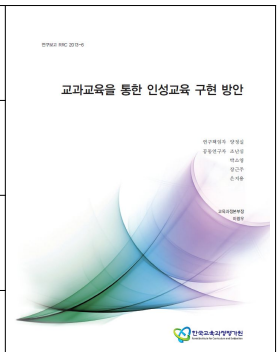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현장개선 지원

○ 행복교육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현장적합성 제고

날짜	지역	주제	주최	주관
05.20 (월)	서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KRIVET 서울·경남·세종교육청
06.27 (목)	제주	꿈과 끼,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의 과제	제주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KOFAC·제주교육청
07.16 (화)	광주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의 과제	광주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EBS 광주·충북·전남교육청
09.12 (목)	전북	교육본질에 충실한 인정중심 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KERIS 전북·부산·대전·경북교육청
10.22 (화)	강원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평가 재설계	강원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KICE 강원·대구·경기교육청
11.19 (화)	울산	모두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울산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KEDI·NILE 울산·인천·충남교육청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및 개선 연구 추진 -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내 인력구조 개선 및 학교직원(Non teaching group)의 업무 개선 방안'(신현석, 고려대) 등 8종의 연구 수행 및 결과 발표회 개최 ○ 교육청 대상 교육정책 컨설팅 실시를 통한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 3.0 추진 지원 - 시·도교육청 '정부 3.0'선도적 운용 모델 컨설팅(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1종 실시 ○ 이슈페이퍼발간을 통한 새로운 교육정책 소개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참여기관 및 학교현장자문단 등에 대한 요구조사(분기별 1회)를 토대로 주제 선정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김홍원, KEDI) 등 14종 발간 ○ 교육정책네트워크 학교현장 자문단 운영을 통한 현장 개선 지원 - 현장자문단 43명 위촉 활용(국내·외 현안보고서 주제 요구조사 실시, 발간물 집필, 교육현장지원연구 심의 등 사업 참여 등) ○ 연계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현장적합성 제고 -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의 자유학기제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및 집중 논의 기회 제공(1회) □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정책 흐름 선도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발간 및 기획기사 제공을 통한 해외교육 정보의 수집·공유 - 주요 8개국(미, 영, 독, 프, 중, 일, 핀란드, 호주) 현지 해외통신원 제도 운영 - 월 2회(총 24회),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최신 뉴스의 수집 및 공유 - 월 1회 국내 주요 이슈 관련 각국의 현황 파악 관련 기획기사 발간 - 이메일을 통한 발송 및 온라인 제공: 약 8만 5천여 명에게 제공 ○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을 통한 주요국의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참여기관 및 학교현장자문단 등에 대한 요구조사(분기별 1회)를 토대로 주제 선정 -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김현철,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13종 발간 ○ 교육정책포럼 발간을 통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 교육정책네트워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정책포럼 편집위원회 운영 -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1월),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의 진정한 의미'(2월) 등 월 1회 발간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관련 정보의 DB화 및 공유, SNS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http://www.edpolicy.net) - 월 평균 방문자 수 9,100건 □ 자체평가 사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결과의 환류 ○ 교육정보 공유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실시(온·오프라인 총 6회)

	- 행복교육 현장토론회(응답평균 4.0): 2013년부터 도입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의 주제선정 협의 및 추진과정이 효과적이었음. - 이슈페이퍼(응답평균 4.7): 국내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응답평균 4.3): 외국의 최신 교육정보 공유 및 우리 교육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응답평균 4.7): 외국의 교육정책을 전문적 시각으로 분석·제공하여 우리 교육에 시사점 제공 - 교육정책포럼(응답평균 4.3): 우리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활용 정보 제공 (※5.0만점) ○ 사업관계자 및 수요자 대상 사업평가회 개최(11.27.): 교육정책네트워크 전체 사업점검 실시 및 개선·지적사항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반영 - 우수한 점: 합리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립 방법이 적절함. 사업목표치는 알맞게 설정·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보장함.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국내·외 교육정보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함. - 사업 개선방안: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일선 학교 및 국민들의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사업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교육네트워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학교현장 자문단' 확대·운영 필요

연구 기관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과제명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연구 책임자	양정실	
연구 참여자	조난심, 박소영, 장근주, 은지용	
필요성 (목적)	□ 학교 인성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에 인성교육이 통합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추진 정책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상황과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건과 맥락 형성이 필요함. 교과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와 제반 제도 구비를 중심으로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 이론적 근거 탐색과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인성교육 및 교과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문서,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연구 추진 과정 점검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협의 및 정책 협의회 실시 □ 교과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양상 조사와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탐색을 위한 교과 수업에서의 수업 관찰 및 분석(총 30개 수업) □ 수업 분석의 타당성 제고와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교사 대상 면담 실시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현황(실태, 문제점) 파악과 개선에 대한 요구 수렴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실시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 개최	
주요 내용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8가지 공통 가치덕목·인성역량 및 교과별 가치덕목·인성역량 도출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공통 가치덕목·인성역량: 존중, 배려, 책임, 참여와 협동, 공감과 수용, 대화와 소통능력, 문제와 갈등 해결 능력, 정의	

○ 공통 가치덕목·인성역량을 교과별로 수정, 가감하거나 의미를 재규정하여 교과별 가치덕목·인성역량 설정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수업 관찰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자료, 교수·학습 방법, 평가 측면에서 인성교육 실천의 시사점을 도출함.

○ 설문 조사를 통해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미,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의견과 관련 지원 요구를 수렴함.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구안

○ 학교와 교사 수준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의 공통 지침으로서 6가지 기본 방향 설정

① 오늘날 학교 교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설정한다.
② 각 교과교육 내용에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연계시키고 구체화한다.
③ 각 교과별로 학생 참여적인 협력학습을 위주로 하는 인성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④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⑤ 각 교과의 평가에서는 인성 교수·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⑥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각 교과별 인성교육 실천 방안 구안

- 교육 내용의 구체화: 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교과에서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과 가치덕목·인성역량의 조응 양상 제시
- 교수·학습 방법: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되 특히 협력학습과 체험·참여 중심의 방법 제시
- 평가 방법: 교수·학습과 연계된 수행평가 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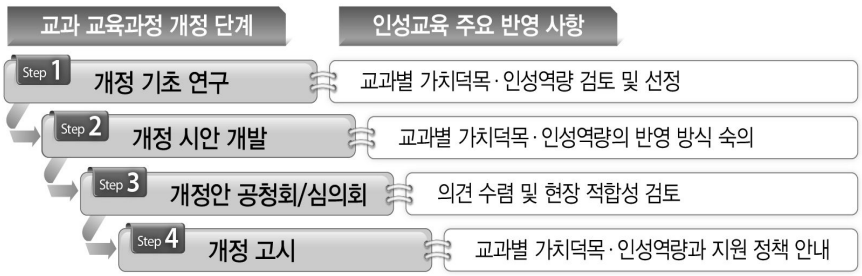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 제시

○ 교육과정 차원, 교과 수업 차원, 교원 역량 차원의 총 11개 지원 사항 제시

교육과정 차원의 지원	1) 국가 수준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인성교육 강화 명시 2) 인성교육에 대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구체화
교과 수업 차원의 지원	3) 인성교육 친화적 교과서 개발 4) 교과별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개발·보급 5) 교과별 인성교육 평가 방법을 개발·보급 6) 가정,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과별 활동 지원 7) 교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지원 예산 확대 8) 인성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환경 구축
교원 역량 강화	9) 교과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학교장 연수 실시 10) 교과 인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11)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간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지원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인성교육의 체계적·지속적 구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단계별 인성교육 반영 사항 제안



□ 교과용 도서의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인정기준 및 심의기준'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신설 항목 제안(예시 : 중학교 국어 교과서)

□ 인성교육을 위한 수행평가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제시

항 목	개 선 안	실 행 방 안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의 2항(초등학교), 3항(중학교), 4항(고등학교)	'교과목별 인성평가의 결과를 입력한다.'는 내용 삽입	• 수행평가의 방법과 채점 기준 관련 연수 •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결과 작성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
[별지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 - 7.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 제목을 '세부능력, 인성 및 특기사항'으로 수정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1. 방침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업 성취와 인성발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내용 삽입	

□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지원 강화를 위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정보 공유 온라인 시스템(Character Education through Subject Education Online; CESE Online)' 개발 제안

CESE Online 사이트의 구성안 (기본 목차)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란
- 교과교육 내용과 인성교육의 관계
-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별 평가 방법과 도구
- 나의 학생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교사인가
-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교실에서는
- 자료 은행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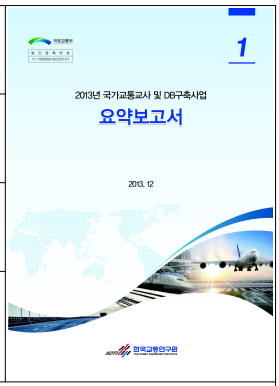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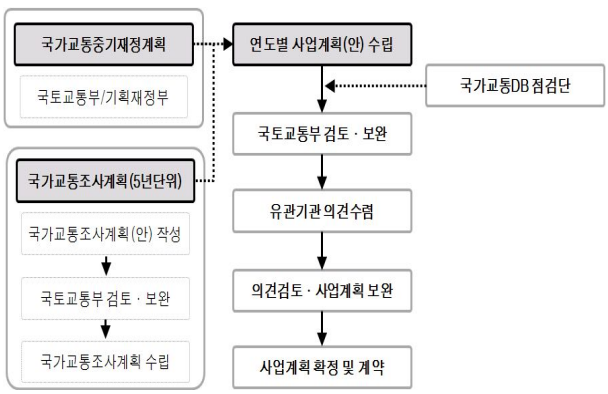
CESE Online 사이트의 개설·유지·활용 방안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re.kr) 또는 에듀팟(www.edupot.go.kr)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 제고
- 시·도 교육청 주관의 자료 탑재와 홍보

자료 개발과 자료 탑재, 자료 활용 등과 관련된 CESE Online의 유용성 및 활용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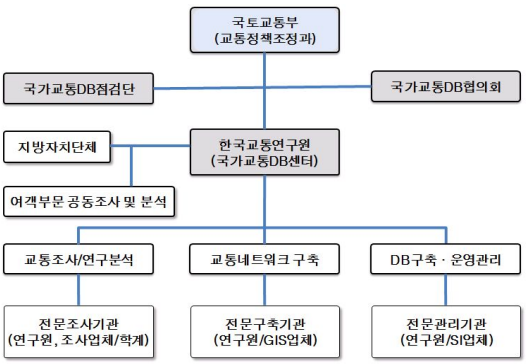
□ 인성교육의 계획, 시행 확인 및 점검을 위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추진 종합 계획(안)' 마련

영역 \ 수준	국 가	교 육 청	학 교	교 사
교육과정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침 제시	인성 관련 교과 수업 시수 확보, 편성·운영 및 평가 방안 제시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시 인성교육 관련 편성·운영 지침 반영	교과 수업 계획 및 시행 시 인성교육 실천
교과서	국·검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심의 기준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 반영	인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 반영	인성교육 친화적 교과용 도서 채택	수업 준비 시 인성교육 관련 교과서 재구성
학생평가	인성 평가 강화를 위한 지침 보완	교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과정 및 결과의 평가 반영 방안 안내	시·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학교 성적 관리 계획 수립	학생의 인성을 고려한 교과 평가 계획·시행
지원체제	인성교육 관련 지원 정책 제시 및 예산 마련(CESE Online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 체제 마련 및 지원, 교사 간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지원, 교실 환경 마련 지원, CESE Online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가정·지역 사회와의 연계 체제 마련 및 연계 시행	자원을 토대로 한 교과 인성교육 수업 실행
교육과정 평가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모색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수업 반성 및 개선
	-	학교 컨설팅 수행	동료 컨설팅 수행	

연구 기관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과제명	국가교통 조사 및 DB 구축사업	
연구 책임자	김찬성	
연구 참여자	김찬성, 황상규, 박인기, 최정민, 조종석, 박민철, 박용일, 박상준, 이석주, 황순연, 홍다희, 천승훈, 연지윤, 장동익, 한진석 외	
필요성 (목적)	□ 교통계획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시행타당성과 효과분석에 필요한 교통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비효율적 투자가 발생하고, 기관별·부문별·사업별로 자료가 상이하여 자료의 신뢰성 측면과 공동 활용 측면에서 한계 □ 이에 따라 교통관련 자료들의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시계열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교통조사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교통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국가교통 DB 사업 필요 ○ '98년부터 지속사업으로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수행 ※ 법적 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및 제17조	
연구방법	□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원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정책고객의 직접 참여 및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계 구축 ○ 정부(국토교통부)대행사업으로 5년 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국토교통부)과 국가교통 중기재정계획(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착수 전에 사업계획의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DB점검단을 통한 사업계획 점검 및 의견 수렴  〈 국가교통DB사업 계획 수립체계 〉	

○ 연구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무내용과 예산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본 사업의 전담 조직으로 국가교통DB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 연구진을 배치하여 전문성 제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업무수행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외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개 시,도와 교통조사부터 연구분석까지 매칭펀드 형태의 공동사업 수행



〈 국가교통DB사업 추진체계 〉

□ 사업관리

○ 사업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책고객과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교통DB점검단 및 외부기관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공정한 업체 선정 평가회의 운영

- 외부 공고과정과 원내외 평가위원회를 통해 외부 자원 활용의 투명성 확보

○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외부 수요검증기구인 국가교통DB점검단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상시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 국가교통DB점검단 상시 운영(점검활동이 저조한 일부 점검위원 교체(국토부장관 방침, 12년 10월)로 점검 활동 강화, 전체점검단회의 및 각 분야별 수시 실무점검단회의 운영)
- 국토교통부,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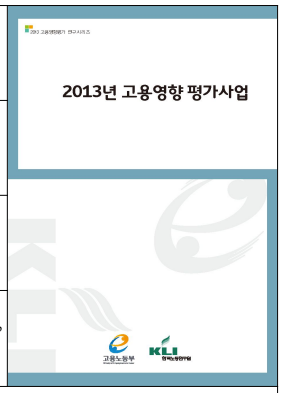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교통조사 : 자동차이용실태조사, 교통시설물조사, 전국연안화물 O/D조사, 국가교통통계조사

□ 연구분석 :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O/D) 보완갱신, 여객교통수요분석 개선방안 연구, 화물 통행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주요 화주기업의 물류활동 동향분석과 예측, 물류지도 작성연구, 교통유발원단위 분석연구, 교통비용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TSI) 산정, 온실가스 DB 구축,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 교통네트워크 : 교통주제도(도로, 철도, 대중교통) 구축, 교통 네트워크 소통 성능지표 연구,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DB 시스템 : KTDB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이용자 요구에 따른 교통분석자료를 신속히 제공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부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지원 분석자료 제공('13년 5월,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분석자료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 면적구분에 따른 차등부과 분석결과 및 대안 제시 ○ 정부의 특별수송대책(설, 하계, 추석)기간 중 통행실태조사를 통한 특별교통대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13년 2월/8월/9월,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 OECD ITF 분기별, 연도별 교통통계자료 구축 및 제출('13년 7월,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필요한 자동차 보유대수 통계 부재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5년 단위)의 예측 결과 지원 및 자동차이용실태조사 수행 ○ 국내 물류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물류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을 위한 국내 물류지도 설계 및 구축('13년 8월, 국토부 물류정책과) ○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대도시권 수단별 수송분담률 분석자료 제공 ('13년 3월,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정책적 법적 보완을 위한 전국 지역 간 연도별 여객 통행지표 제공('13년 5월,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 정부정책수립 지원 및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을 위한 보고회 개최 ('13년, 4월/5월/7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교통정책조정과장) ○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내비게이션 데이터 관련 현대 MnSoft사와 MOU 체결 ('13.03), 서울시 택시 및 버스 데이터 관련 한국스마트카드사와 MOU 체결('13.05) - 지속적으로 지자체(대전시)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MOU 체결 협의 중('14년) □ 법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에 기여 ○ 국가 교통/물류계획 수립과 지자체 계획 수립,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활용하여 교통투자 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정)(국토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방안(천안시) 등 ○ 다양한 논의 및 각계의 의견수렴에 기반을 둔 2014~2018년 국가교통조사계획(안) 수립('13년 4월) 및 보완 제출('13년 10월) □ 정부 및 국회의 법 개정에 기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시 필요자료 구축 및 제공(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단위v부담금 개선, 경감제도 개선,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원) - '13년 3월~7월 국토부 및 국회 법안 개정 근거 지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법안) 제36, 37, 40조 공표(4.29), 시행(5.22)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발의안) 제36, 37조 공표(8. 6), 시행(11.7) - ’13년 5~10월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근거 지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국회발의안) 제18, 22, 24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10월), 개정(12월) □ 언론홍보 및 정책지원형 통계 제공 ○ 외부요인 변화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언론홍보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적 지지도 확보 ○ 주요 언론보도(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 및 신문)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보 노력(8건) ○ 본 사업에서 조사 및 연구분석으로 생성된 국가교통통계 제공(통계청, OECD 등) □ 사업 집행의 환류를 위해 다양한 행사(정책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 정부정책수립 지원 및 이해증진을 위한 보고회 개최(’13년, 4월, 5월, 7월) - 화물통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13.04.05) - 국가교통조사 및 DB사업 성과발표회(’13.04.25) - 국가교통DB 발전방안 워크숍(’13.06.28) - 2013년 전국 여객 O/D 배포 자료 설명회(’13.09.11) - 교통수요 과다예측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13.10.26) □ 정부, 지자체, 민간의 교통 SOC 및 교통수요 관련 사업들의 기초자료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제공 ○ 국가교통DB 자료제공 실적: 총 537건 제공(2013년)

연구 기관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과제명	고용영향평가센터(일·가정양립지원정책외18건)	
연구 책임자	윤윤규	
연구 참여자	윤윤규, 윤자영, 안주엽, 이장원, 이승렬, 이경희, 이규용, 박찬임, 김세움, 이규용, 안주엽, 오상훈, 최세경, 조준모, 윤혜준, 이상원	
필요성 (목적)	□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주요 정부 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여 국가 전체의 일자리창출력 제고를 위한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 경제·산업정책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유목표와 함께 고용창출효과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제시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 고용친화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올바른 결정 ⇆ 원활한 수행 ⇆ 정책 및 사업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의 산출과 배포를 통해 정부 정책/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현장 목소리의 청취,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컨설팅 제공,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외국사례 조사, 고용환경 평가 등을 통해 수행 - 학계, 연구기관,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 노사단체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활성화 ○ 고용영향평가(사전적·사후적)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신뢰성·수용성을 확보 - 고용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 결정 및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공	
연구방법	□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고용영향평가체계 구축 및 적용 ○ 정책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정부 정책·사업은 각각 고유목표를 추구하므로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해당 경제·산업정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가작업에 참여, 고유목표와 고용목표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결 ○ 정확하고 풍부한 DB 확보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의 도출에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 및 사업주체로부터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인건비 집행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적 예산계획 및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해당 정책/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용의 질적/양적 측면을 분석	

	- 고용영향평가의 프로세스를 세부분야별로 표준화하고 평가방법론 적용 및 분석DB 활용 지침을 제공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통일성 제고 - 양적 고용효과의 분석과 더불어 창출되는 고용의 질적 분석(임금, 근로조건 등)을 위해 정책수혜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및 FGD를 실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친화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소관부처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개선방안의 수용성과 적합성을 제고 □ 정량적 평가방법론 1) 거시적 고용효과 추정의 표준화: 거시-I/O 통합모형 개발 ○ 표준화된 통합모형 개발·적용을 통해 센터에서 거시적 고용효과를 일괄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개별 평가과제 연구진에게 제공함으로써 평가과제 수행의 효율성과 추정결과의 일관성을 확보 - 기존의 고용영향평가사업은 대상사업 종류가 다양한데다 연구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평가의 측정범위, 단위 등이 과제별로 상이하여 재정지출사업의 고용효과를 일관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거시-I/O 통합모형 개발) 정부 재정지출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거시경제계량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의 통합모형(거시-I/O통합모형)은 경제의 최종수요를 총부가가치로 이전하여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도록 구성 - 통합모형은 거시경제적 소득순환과 산업간 순환의 연계를 통해 거시·미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예측 분석,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 가능 2) 사업시행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미시적 분석 ○ 정책/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정책/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분석 - 사업 특성이나 가용한 분석자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PSM)방법, 이중차분방법법(DID), 도구변수방법, OLS모형 등 다양한 미시분석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미시적 고용효과 추정 - 기존의 유사정책/사업 사례로부터 획득한 분석자료나 기존 통계자료(노동패널, 복지패널 등)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로부터 분석자료를 직접 구성하여 분석 ○ 평가과제의 특성이나 평가연구자의 취향에 따라 평가방법론 적용이나 실태조사 설계가 달라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 - 따라서 향후 미시적 고용효과 추정, 실태조사 설계 등 분석영역에서 분석방법론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세부적인 표준화 지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정성적 분석방법: 고용의 질 분석 ○ 양적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용의 질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면담 및 FGI 등 정성적인 방법론을 통해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 ○ 정책/사업 수혜자와 공급자 대상의 실태조사, FGD 등에 대한 기존 평가사례들을 검토, 표준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개별 평가과제 특성을 감안한 추가적 실태조사는 개별과제 연구진이 설계

	□ 정책·사업으로 실현되는 고용효과에 대한 현장밀착형 모니터링 수행 ○ 정책 수립과정의 고용전망 및 사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고용창출효과가 정책 수행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 운영기관-참여주체-수혜자 등 정책전달체계의 각 단계에서 실제 고용창출효과, 인력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DB 구축 및 보고체계 정립을 지원하고, 고용효과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컨설팅 ○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및 제도 개선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강화로 장기적인 정책개선 효과 제고
주요 내용	□ 중앙 부처 및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정책/사업,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가하기로 선정한 정책/사업들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실시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 재정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의 증감 및 질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중앙 부처 요청 사업, 고용정책심의회가 선정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KDI, KISTEP 수행) 가운데서 평가과제 선정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법·제도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제도가 일자리의 증감 및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토록 정책제안 제시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평가과제 선정 ○ 산업별·정책분야별 고용영향평가 - 산업별·정책분야별로 거시적 차원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기획·추진 시 고용의 변화를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언 □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점검 ○ 고용률 70% 로드맵과제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한 각 부처 주요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점검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부의 주요대책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 산정이 완료('13.11월) 되었고, 기 산정된 각 부처의 일자리창출효과 추진실적 점검을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고용영향평가와 병행 ○ '가이드라인' 대상사업(578개) 가운데 특히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선정, 고용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2013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분류	소관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과제	복지부, 여가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윤자영(KLI)
	기재부, 안행부, 고용부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안주엽(KLI)
	고용부, 교육부	한국형 일·학습 Dual 시스템	이장원(KLI)
	고용부	60세 정년제 조기정착 및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이승렬(KLI)
	기재부, 산업부	서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	이경희(KLI)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조준모(성균관대)
국정과제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이규용(KLI)
	문광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	박찬임(KLI)
	산업부	일자리창출 중심 지역산업 재정비	이승렬(KLI)
부처·지자체 요청과제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김세움(KLI)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최세경(중기연)
	경상남도	통영시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정	윤윤규(KLI)
	광주시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규용(KLI)
예비타당성조사 과제	국토부	서울 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이상원(인하대)
정책분야별 과제	고용부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윤혜준(직능원)

□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 과제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

①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 고용연계성

② 고용의 양적 창출효과

③ 고용의 질(고용유지, 교육훈련, 근로실태 등)에 대한 분석·평가

④ 해당 평가결과를 토대로 고용친화적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도출

○ 법·제도 개선, 비정형화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틀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본적 평가내용을 수정하여 평가 수행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법/제도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용친화적인 정책개선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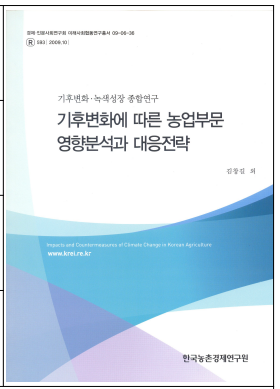
○ 정부 정책/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로드맵과제 고용효과 산정가이드라인, 로드맵과제 모니터링방안 등) 작성 및 법·제도 개혁방안(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등) 제시

○ '고용없는 성장'의 시기에 정부 정책/사업의 고용친화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실천적 정책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일자리창출력 제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책화과정에 참여

○ 고용부와 정책협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KDI, KISTEP)과 협력, 정부사업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개선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

	○ 기재부/고용부와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과제 고용효과 산정가이드라인 작성작업 및 이에 의거한 로드맵과제 고용효과 산정작업에 직접 참여 ○ 고용률 70% 로드맵과제 고용효과 관련 차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반영되고, 이들 안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분석 작업 수행 □ 대안의 정책화 실적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3.12.26 국회본회의) : 사전고용영향평가, 고용부장관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 정책개선권고제, 결과통보·공개제 등 기존의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크게 개선·강화 ○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주무부처(기재부) 및 수행기관(KDI, KISTEP)은 고용창출효과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포함하는 사전평가제도 개선작업 진행 ○ 고용률 70% 로드맵과제 고용효과 산정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로드맵과제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후속조치로 로드맵과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평가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기재부, 고용부)

연구 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책임자	김창길	
연구 참여자	이상민, 정학균, 장정경, 이충근	
필요성 (목적)	□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핵심 현안이슈로 부각 ○ 온난화 문제의 접근은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의 감축과 흡수를 중심으로 하는 완화대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을 기초로 완화대책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기후의존적인 농업부문의 경우 최근에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기초로 한 적응과 적응능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한 적절한 대응책 연구는 미래농업의 비전과 농정방향 설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지역 농업발전계획이나 농가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 □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농업생산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개념과 분석이론의 체계화 ○ 기후변화 대응의 접근방식으로 완화방식과 적응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 ○ 기후변화에의 적응능력 개념, 기후변화의 적응 유형과 접근방식 제시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 기후-작물 반응함수를 설정하고, 비모수적 커널분석과 준모수적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을 평가 ○ 기후-작물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인 CERES-Rice 모형과 ORYZA2000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쌀 생산을 예측 ○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기회귀모형인 Parks Method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호우, 태풍, 우박·낙뢰, 해일, 돌풍 등의 기상재해 발생의 영향분석 ○ 로지스틱 함수 추정을 통해 미곡의 수량능력단수, 보급단수, 농가단수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단수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미곡 생산의 기상요소 영향력을 분석 ○ 농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 실태를 살펴보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분포를 분석하고 산지 이동을 전망	

	□ 기후변화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 기후변화에 따라 모든 생산요소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서 토지가격은 토지이용에 따른 수익(준지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적인 영향의 평가방법인 리카디언 모형(Ricardian Model)을 이용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분석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여부,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장애요인, 농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방안 실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기대효용 의사결정 통합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경우 농가들의 적응수단 적용여부를 분석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단계별 정책 우선순위 결정 ○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농업인수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고려하는 계층분석의사결정(AHP) 방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적응옵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주요 내용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개념과 분석이론의 체계화 ○ 기후변화 대응의 접근방식으로 완화방식과 적응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 ○ 기후변화에의 적응능력의 개념, 기후변화의 적응 유형과 접근방식 제시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 기후-작물 반응함수를 설정하고, 비모수적 커널분석(Kernel Regression)과 준모수적 부분선형모형(Partially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을 평가 ○ 기후-작물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인 CERES-Rice 모형을 활용하여 조생종(오대벼), 중생종(화성벼), 만생종(동진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쌀 생산량 변화를 예측 ○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기회귀모형인 Parks Method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호우, 태풍, 우박·낙뢰, 해일, 돌풍 등의 기상재해 발생의 영향분석 ○ 로지스틱 함수 추정을 통해 미곡의 수량능력단수, 보급단수, 농가단수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단수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미곡 생산의 기상요소 영향력을 분석 ○ 국제미작연구소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개발한 생육시뮬레이션 모형인 ORYZA2000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작물재배 영향을 분석 ○ 농가자산의 속성함수(Hedoni Function)를 기초로 하는 리카디언 모형(Ricardian Model)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농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 실태를 살펴보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분포를 분석하고 산지 이동을 전망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분석 ○ 농업인의 인지도, 체감 정도, 기후변화 영향력 반응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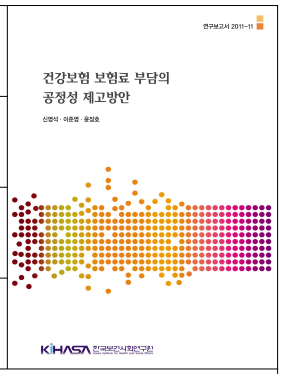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여부,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장애요인, 농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방안 실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CropSyst의 생태물리적 모형과 경제분석 모형을 연계한 기대효용 의사결정 등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경우 농가들의 적응수단 적용여부를 분석 □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문헌검토를 통해 일본, EU, 영국, 호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농업인수용성 등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는 계층분석의사결정(AHP) 방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적응옵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평가기준에 대해 9점 척도의 쌍대 비교치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안은 절대비교 방법을 적용하여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의 적응방안 우선순위 결정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책대안 제시 ○ 기술개발, 기반시설관리, 경제적 수단,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홍보교육, 모니터링 분야별 핵심적인 대응전략들을 제시 - 농산물의 고유한 품종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품종의 도입 - 새로운 병해충·잡초 등에 대응한 방제기술 및 예측모델 개발, 새로운 시비·작목파종 및 수확 시기 조절 등의 재배기술개발, 새로운 재배적지의 조정 - 시설재배 작물의 물 절약형 관개기준 설정과 재배환경 조건에 적합한 맞춤형 물 관리, 농업용수의 배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파이프도랑 수로 정비와 관개수로의 건설 - 경제적 수단분야로 환경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메뉴방식의 직접지불제 도입 -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재배보험과 같은 위험관리 프로그램 운용 - 지역·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확대, 농업재해보험 약관의 현실성 있는 기후 조건의 반영,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개인보험 개발, 농업기반시설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의 재정비 - 농업인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기후변화에 사전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적인 대응방안인 기후변화 조기 탐지와 신뢰할만한 예측을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적응방안을 실천하는 주체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의 중요성 강조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실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농업인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 제시

	□ 정책적인 기여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자료로 활용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2009. 12)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2010.10) 보고서에 인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음. 고온 적응성 품종으로 고온착색 사과와 노지적응 감귤이 개발되었고, 내재해성 품종으로 뿌리혹병 저항성 배추와 내습·내서성 무 등이 개발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 세부추진계획 발표(2011. 12. 1)에 기여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2011~2020)』 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품종개발 등 관련 내용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계획』(2012. 9. 19)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계획'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보고서』(2012. 10. 17.)중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부처 합동,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관계부처 협의회 자료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정·보완』 (2012. 11)중 '농수산 부문'의 내용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2013. 10) 보고서에 활용

연구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과제명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김윤정	
연구 참여자		
필요성 (목적)	□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해당 내부거래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초래하는가를 위법성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2013년 8월 13일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음 □ 공정거래법은 사업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신설하였음. 그리고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나목을 신설함으로써, 소위 '통행세' 관행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신설된 '통행세' 금지규정의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신설규정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예외사유의 판단기준 등 중요사항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화 작업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의 내용을 입법목적에 알맞게 설계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분석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관련 판례와 사례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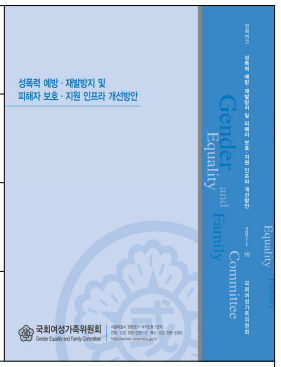
	□ 워크숍 등 전문가회의 운영 ○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련 워크숍(2013.8.1.)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정책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연구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 제1차, 제2차 - 업계 실무 담당자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전문가회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업계 실무진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상 신설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내용과 과제 분석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간 상호관계 정립 ○ 규제목적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제목적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설된 제23조의2의 규제목적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상이한 규제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규제대상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제대상은 '사업자 일반'이고, 신설된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 규제내용 -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제23조의2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이외에도 '사업기회의 제공'과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통행세'만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와는 차이가 있음 - 양 규정은 서로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제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제23조의2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 제7호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관계를 갖는 규정이 아니라 규제의 차원이 다른 '병렬적 관계'에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 및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 신설된 '통행세' 규제의 유형화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신설된 '통행세'의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시행령의 내용은 '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와 '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로 구체화하면 될 것임 ○ 대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의 세분화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유형은 시행령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사업기회의 제공' 및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본문 및 결론에서 제시함 ○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예외사유 판단기준의 구체화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사유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므로,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본문 및 결론에서 제시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에 관한 연구성과가 관련 시행령에 반영(14.2.14,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공정거래법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구체화를 통한 제도 시행의 적합성 제공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간 상호관계를 정립 - 부당지원행위 금지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안 제시 - 예외사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정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2.14.)에 반영 -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안 제37조의2 제1항 →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반영됨) -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안 별표1의3 → 시행령 별표1의3에 반영됨) -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소위 '통행세 징수행위')에 대한 세부유형 및 기준(안 별표2 → 시행령 별표1의4에 반영됨) □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실무에 반영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의 실효성 있는 차단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 효과 제고 -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 효과 -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대기업집단의 부당이익제공 및 관련 지원의 금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유형화·구체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합리화 효과 발생

연구 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명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책임자	신영석	
연구 참여자	이준영, 윤장호	
필요성 (목적)	□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에 있어 직장보험 및 지역보험 간 부과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한형평성 논란 지속 ○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에 여러 부과요소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소득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미래 지향적 부담의 형평 방안 개발 시급 □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험료 부담 방안의 개발이 필요 ○ 직장과 지역간 가입자 구성비율의 변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 산업 및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구조의 급변으로 인해 시대적 환경변화 반영이 필요 □ 사회적 연대성이 강화될 수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발이 시급함.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국민 단일 부과 모형 개발 및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 과거의 부과체계 모형에 대한 검토 □ 해외사례 연구 ○ 외국의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등 현지 방문 및 자료 구득 □ 현지실사 및 간담회 ○ 건강보험공단 지부 방문 및 일선 담당자 의견 수렴 □ 모의운영: 모형의 현실적합성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 분석 ○ 의료보험 도입 후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현행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 직역간 부담주체, 주체의 책임 범위, 부담능력 판단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 직장가입자: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등급별로 산정됨. - 지역가입자: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 ○ 직역간 피부양자 인정제도의 차이 존재 ○ 부과체계의 복잡성 및 부과요소의 차별화 -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 가입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인 부과요소 적용 및 차별화의 문제가 있음. ○ 직역간 자격 이동시 보험료 변동 심각 □ 단일 보험자 아래 단일부가체계 가능성 탐색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직장·지역가입자의 구체적 생활수준 비교 ○ 산출된 생활실태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 ○ 보험료 부과요소의 적정성 평가 □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 현행 부과체계의 지속가능성 검토 ○ 현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 직역간 이동에 따른 형평부과방안 개발 ○ 미래 지향형 공평 부담 모형 개발: 소비량에 비례한 부담방안 도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 방안 제시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안 제시 -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로 흡수) -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로 전환(종합소득 고려) ○ 직장가입자의 임금소득 외의 소득(연금, 금융, 임대, 사업소득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평성 제고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 부과요소에서 자동차 제외 -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 개선 - 소득 추정을 위한 대리변수로 이용되었던 성·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 - 소득분배 기능 개선(정률 방식을 적용하는 등 소득역진성 문제 해소) - 지역 부과체계 내의 500만원 기준선을 폐지하여 재산 및 자동차 비중을 단일화 - 평가소득 개념 대신 과세소득 기준으로 부과(명확한 근거에 의한 보험료 부과)

	- 일정기준 이하의 전월세는 부과 과표에서 제외 - 재산에 대한 부과비중 하향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및 특수직역(개인택시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가입자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중장기 단일화 방안> ○ 전국민 대상의 소득 기준 단일부과체계로의 개편안 제시(종합소득 기준) ○ 소득이 없는 자는 기본보험료 부담(18세 이하 아동은 제외)

연구 기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과제명	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황정임	
연구 참여자	박선영, 송치선, 변혜정	
필요성 (목적)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에 따라 민간단체 중심의 상담소와 정부위탁에 기반한 통합센터의 갈등과 문제점 제기 ○ 초기단계에는 법제정 이전부터 반성폭력운동을 전개해왔던 민간단체 주도의 상담소를 중심으로 운영됨. 그러다가 정부위탁에 기반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확대되면서 이들간의 갈등과 문제점이 제기됨.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실태 분석 및 국가서비스체계로서의 내실화(강화) 방안 모색 ○ 서로다른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상호보완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성폭력 인프라의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폭력문제에 대한 국가책무성 차원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모색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성폭력 예방,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선행연구 결과, 2007년과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국회 속기록(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및 검토의견서, 정부내 각종 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등 활용 □ 2차자료 분석 ○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현장실무자 간담회 ○ 상담소 및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쟁점과 현안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에 대한 자문 실시	

주요 내용	□ 성폭력 재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운영현황 분석 ○ (법률 차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를 검토함. ○ (공급 차원) -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정부의 기관지원 현황 차원에서 검토 - 정부의 기관지원 현황은 프로그램비 지원, 기관운영비 지원, 위탁(설치) 운영, 관리운영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함. □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관련 문제점 및 쟁점 분석 ○ 현행 성폭력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을 진단하고 각각에 대해 분석함. - '여성인권운동에서 출발한 태생적 색깔 약화' - '성폭력인프라 확대과정에서 민간주도형 상담소 중심의 기존인프라와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국가주도형 센터중심의 신규 인프라간에 상생하는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미흡' - '신규인프라와 기존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부재' - '신규인프라가 설치와 함께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유입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논란 촉발' - '성폭력인프라의 양적·질적 토대 마련 및 운영노력 미흡' □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 민간주도형 상담소와 국가주도형 센터가 공존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며 균형감있게 발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함. ○ 국가서비스 체계로서의 성폭력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상담소와 통합지원센터간의 역할분담과 주력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응급지원(원스톱지원센터)-지속관리 및 지원(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상담소)-전문치료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역할 및 기능을 구분하며, 상담소를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성폭력 인프라내에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서비스로서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시각은 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 정부지원의 체계화 필요성 제기 - 성폭력 인프라에 속한 여러 기관간의 격차 해소가 아닌, 상담소나 통합지원센터 등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를 위한 관리체계 운영방안 제시

-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여성폭력방지시설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정책현장과 실천현장간 브릿지 기구를 설치하며, 민간위탁모델 발굴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방안을 제시함.

□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방안 제시

- 1안) 현행 법률체계 유지하면서 관련 법률 정비
- 2안) 기본법으로서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법률 제정
- 3안) 일반법으로서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법률 제정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국회에서 주관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성폭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안건으로 활용

○ 2012년 2월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주관으로 현장관계자, 여성가족부(차관외)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논의함.

연구결과	여성가족부 검토 결과
입법과제	기본법 제정 및 일반법 제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 필요
운영효율화	-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피해자지원센터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통합형태로 설치 추진 - 기존 설치된 센터는 특성에 맞게 집중·전문화 추진('12~) : 원스톱은 응급지원, 해바라기는 치료중심으로 전문화 - 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상향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종사자 양성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제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체계화된 교육훈련 인증시스템 구축 검토
정부지원 체계화	- 상담소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단계적 상향 계획 - 인건비 및 운영비 상향 기준과 근거 마련 위한 연구 추진
관리체계 운영	- 통합지원센터 시설평가지표 개선 추진 및 전문가 수퍼비전, 컨설팅 추진 - 시설평가지표 개선 추진 - 기관별 표준운영 매뉴얼 마련 - 지도점검 내실화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의 역할 강화

□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본계획 및 대책방안 수립에 반영 및 기초자료로 활용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여성인권분야(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의 세부정책과제로 반영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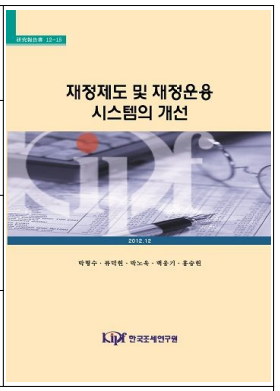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응급지원-전문치료-지속관리" 등 피해자 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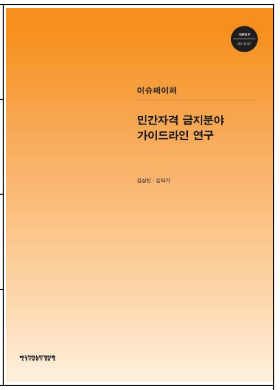
	3-1-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 현실화 - 종사자 양성·보수교육 체계화 및 자격관리 방안 마련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원기관별 컨설팅 제공 - 지원기관별 특성화된 자문·컨설팅 등 체계 마련 3-4-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여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체계 개편 검토 ○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중 3.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종사자 교육시스템 강화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등의 과제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제도운영 개선에 기여 ○ 성폭력통합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시행(2012), 여성폭력방지시설 평가지표 개선(2012) 및 평가 시행(2013) 등 성폭력통합지원센터 및 여성폭력방지시설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 ○ 여성폭력방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추진(2012)에 기여 ○ 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추진(20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에서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과정 개발(2013) 등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체계 개선에 기여

연구 기관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과제명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연구 책임자	박형수	
연구 참여자	류덕현, 박노욱, 백웅기, 홍승현	
필요성 (목적)	□ 국내외적으로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의 시스템적 개선을 추진 - 미국의 경우 PAYGO원칙의 부활, 재정건전화 관련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헌법상의 재정준칙을 도입하였고, 영국은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제정 및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설립 ○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정권의 출현으로 재정제도와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혁이 추진된 사례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영점기준예산편성방식(Zero Base Budgeting System)과 양입제출 원칙을 도입하였고, 제6공화국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다수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참여정부는 4대 개혁으로 대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의 도입이 있었음 ○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제도 및 예산운용 시스템의 모색 필요성 ○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기초로 이루어진 현재의 주요 시스템은 개혁 당시의 시각에서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변형하여 도입 ○ 기존의 4대 재정 개혁의 지난 성과를 재조명함으로써, 2013년 새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될 재정 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작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제도의 도입목적과 당시의 문제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 ○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연구진들이 정책 담당자들을 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 과거 재정개혁 당시 개혁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의 배경, 의도 및 제도 도입 이후의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 - 현재 재정운용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및 도입 취지의 달성 여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 □ 재정학 이외에 재정법, 행정학, 정치학 등의 학제적 연구결과의 종합 및 재정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통해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 ○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및 국제기구의 자료 등을 통한 결과와의 비교
주요 내용	□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의 개선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단년도 재정운용의 시계를 넓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라는 시각을 제시 - 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중장기 목표설정에 있어 목표지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확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전략 및 세부계획의 부족을 지적 - 전망 및 목표의 잦은 변경과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의 부재도 문제이나 이는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후반부에 대한 기준선 전망을 강화하고, 명시적인 재정준칙의 도입, 목표변수의 명확화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체계의 객관성 확보와 정권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결과보고서 작성, 채무관리계획의 성과 평가 등을 제시 ○ 수립체계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의 활성화, 국회의 참여 확대, 그리고 분야별 작업반의 운용 개선 등의 방안 제시 □ 예산편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 ○ 2004년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은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의 확산과 단계적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목적 - 단 10여년 간의 운용과정에서 재정전략회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하향식 예산제도의 운영과 불일치하는 문제 ○ 재정전략회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젠다 설정 및 회의 참석 범위의 조정, 회의 내용의 공개 확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상 제고가 필요 ○ 국회 내 심의과정도 이에 따른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필요 ○ 이를 위해 예결위의 삼임위화와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시키는 등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여타 상임위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 ○ 이를 통해 예산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모두 효과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국회구조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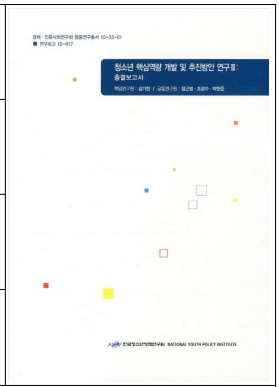
	○ 예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상의 예타면제조건을 강화하고,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순 소득 이전 목적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간이예타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혹은 정책적 결정에 의한 재정사업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개선 ○ 효과적인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위한 필요 하부구조와 제도운영방식으로 구분 - 하부구조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정보, 재정사업의 비용을 보여주는 비용정보, 그리고 성과관리 단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기본 - 이러한 하부구조의 바탕위에 성과관리 및 평가과정의 제도화, 제도 운영 주체의 역량, 그리고 제도 운영 환경 등이 중요 ○ 효과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개선,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개선,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의 개선, 사업평가의 개선,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 그리고 비용정보의 개선이 필요 ○ 제도 간의 연계 개선 및 중복을 해소하고, 기재부 내 조직의 일원화 필요성 및 정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 동시에 감사원과 국회도 전반적인 평가제도 운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보의 활용 ○ 현재 우리나라는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 □ 재정정보의 생산, 공개 및 활용 개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재정통계 작성범위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였고, 정부정책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는 상당부분 만족 ○ 그러나 정부 산하 공기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다양한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조직과 예산구분 단위를 보다 일치시키고, 공통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성과관리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발생주의 회계제도 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부와 국회가 의사결정과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4대 재정개혁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 ○ 채무준칙을 포함한 명시적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기 ○ 중장기적 시계의 강화를 위해 기준선전망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활용 필요성 제기 ○ 행정부내 예산편성 및 국회내 예산심의 과정에서 top-down적 요소 강화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내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와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필요성. ○ 예비타당성 검사의 강화, 특히 면제요건의 강화와 명확화 필요성 및 면제사업들에 대한 간이예타 필요성 제기

	○ 성과평가에 있어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중복 개선,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정부의 성과평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 제기 ○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재정정보 산출 필요성 제기 ○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제기 ○ 재정정보 공개의 확대와 재정보고서 정례화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제기

연구 기관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과제명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 책임자	김상진	
연구 참여자	김덕기	
필요성 (목적)	□ 민간자격 금지분야의 개념과 의의 ○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민간에서 자격으로 신설해서는 안되는 분야로서, 국가만이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함. ○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규제'로서 국가자격 신설의 타당성 기준, 민간자격 신설의 합법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 ○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자격의 현황 관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금지분야 민간자격의 시장진입 억제, 민간자격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자격기본법(제17조)은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된 분야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임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의 쓸모없는 민간자격 남발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반대로 금지분야 적용을 너무 확대하면 규제로서 민간자격을 통한 시장 창출 특히, 일자리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자격관리자, 금지분야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민간자격 금지분야 해당 여부의 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민간자격 금지분야의 의미를 법적,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민간자격 등록 금지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격제도 운영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분야의 의미를 법적, 학문적 고찰 ○ 국가자격 관련 법령상 금지 기준 분석 □ 민간자격 등록 금지 현황 분석 ○ 2008년 이후 민간자격 등록금지 종목 및 유형 분석: 민간자격 금지 개별 법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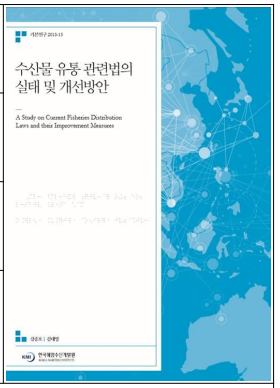
	○ 면허형 국가자격 현황 분석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현황 분석 ○ 민간자격 등록제도 분석: 등록 절차, 민간자격 등록 금지 기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등록불가 현황 분석: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자격분야별 □ 전문가 협의회 ○ 민간자격 금지분야 법령 분석 내용 검토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안) 검토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검토 ○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논의
주요 내용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별 금지분야 적용 범위 제시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는 다른 법령에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면허형(사업면허형, 의무배치형, 직무허가형, 행위허가형)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금지 ○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금지 - 생명: 생명의 생성, 소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나 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 - 건강: 건강의 유지, 회복, 예방에 필수적인 식품, 의료, 위생, 보건과 관련된 분야 -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 국방: 군사적 방위를 위한 군대와 군대를 조성, 유지하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법판례를 참조하되, 민간자격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으로도 금지 □ 민간자격 금지분야 적용 방향 ○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 필요 ○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할 분담 필요 ○ 국제표준이 적용되는 자격의 경우, 국가만이 검정을 행하는 면허성 국가자격 종목의 적용 예외 조항을 단서로 하여 민간의 참여 허용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의무화' 법제화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4)

	□ 부처별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3.11.25) ○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1.2)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2.5)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2.10) ○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2.13) ○ 여성가족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2.25)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3.19) ○ 해양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14.4.1)

연구 기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과제명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연구 책임자	김기헌	
연구 참여자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필요성 (목적)	□ 교과중심 학습에서 역량중심 학습으로의 전환 필요성 ○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학습 대신 생애에 걸쳐 육성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역량중심 학습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인 연구프로젝트가 필요해짐. □ 체험활동을 강조해온 청소년정책과 역량 중심 학습의 접목에 대한 요구 증대 ○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건전한 체험활동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서구에서 추진 중인 역량 중심 학습과 접목되는 지점이 있어 청소년정책의 정책목표로서 역량 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짐. ○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4차, 2008-2010)에서 “역량 강화”가 “기회균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정책이념으로 등장함.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지표 개발의 필요성 ○ 1990년부터 20년 간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핵심가치인 덕·체·지의 조화와 관련하여 학습역량과 대비되는 사회적 역량, 자율적 역량 수준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비교지표와 국내시계열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방법	□ 연구수행체계 ○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조선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음. - NYPI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였으며 KRIVET은 지적도구 활용 부문을, KEDI는 사회적 상호작용 부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연구팀은 수련시설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조선대학교는 학교 중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개념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성 검증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문헌을 분석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 OECD의 PISA, ALL, ICCS 자료 등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UNDP와 Bonnet et al.(2003)의 지표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청소년 핵심역량지수(Youth Key Competency Index)를 개발함. ○ 양적 연구(청소년 대상 진단조사) - 청소년기 핵심역량 중 사고력 영역 측정을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례층화집락표집법으로 전국규모의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장접목연구 - 학교(전남 함평고)와 청소년수련시설(7개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기 핵심역량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음.
주요 내용	□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 이 연구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개념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외 생애핵심역량 개념 및 지표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개념화하고 지표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기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진단조사 결과 분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하였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PISA, ICCS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 핵심역량지수 개발 ○ 국제적인 수준에서 IEA에서 추진한 ICCS 2009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Youth Competency Index)를 개발하였음. □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검증 ○ 시범운영은 크게 2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학교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핵심역량중심 교과수업(지리과목)을 시범운영하고,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핵심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 규명 및 역량기반 학습체계 도입 제안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지적도구 활용(지적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역량), 자율적 행동(자율적 역량), 사고력 등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교과중심의 학습체계를 역량중심 학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목표로 핵심역량을 접목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전환하고 시수를 늘려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함. - 역량 개발을 위한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제안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66 학교교육 정상화) 중 핵심적 추진과제인 자유학기제 형태로 도입됨.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에 청소년 역량 개발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함. □ 청소년 핵심역량 측정을 통한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발 ○ 이 연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IEA에서 추진한 ICCS 2009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Youth Competency Index)를 개발하였음. -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역량 측정지표는 정부부처합동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4차 수정·보완[2010~2012] 및 제5차[2013~2017])에서 성과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활용되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제성취포상제 및 수련시설인증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문항으로 활용됨.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청소년활동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진단도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장접목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과 진단도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 및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및 수련시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연구 기관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과제명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강종호	
연구 참여자	김대영	
필요성 (목적)	□ 농산물 유통이 농안법이라는 명확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수산물 유통은 일관된 법체계가 없고 정책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의 법체계로는 수산물 유통의 특이성을 반영하고, 유통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법체계 정비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농산물은 “수확 이후에도 살아 숨 쉬는 생명체(채소, 과일류)”이지만, 수산물은 “죽은 동물(활어패류 제외)”이므로 과채류 법인 농안법으로는 적용에 한계 발생 □ 본 연구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이를 규정하는 제 법률을 진단하고, 수산물 유통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산물 유통법(안)을 검토함 ○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여건과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법체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수산물 유통 관련법에 대하여 제·개정 과정과 시사점을 검토 ○ 거래제도, 새로이 도입되거나 도입이 검토되는 유통시설 및 사업, 물류기능, 품질 위생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국내외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새로운 수산물 유통법 제정(안)에 반영 ○ 최종적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수산물 유통법(안)의 제시이며, 만일 새로운 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의 개선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연구 범위 ○ 주된 법률 검토는 농안법으로 하고, 주된 유통기관은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으로 한정하였음. 또한 신규 정책사업인 FPC와 도입 추진 중인 유통시설 등 새로운 수산물 유통 관련 정부 정책사업을 포함하였음 □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범위에 대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면접조사, 국내외 사례조사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선행연구) 과거의 법제화 동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유통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유통구조 차이를 밝혀 법제화 내용을 도출함	

	○ (전문가 의견수렴)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법률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해 수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정책담당자, 유통업자, 수협, 중도매인, 장외유통업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수산물가공업자 등임 -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시 면접조사와 2회의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합동대책 추진단을 통해 검증함 ○ (국내외 사례조사) 일본 도매시장법과 국내의 최근 농수산물 유통관련법의 제·개정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와의 장단점 비교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음 ○ (협동 연구) 최종 법률(안)의 작업은 KMI에서 초안을 제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정부TF를 구성하여 작업함
주요 내용	□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의 개선 방향으로 수산물 산지유통과 위생관리는 독자적 법률을 제시하고,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농안법의 개선 사항을 제안함.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준이 되는 법이 없어 정책과 법의 일관성이 없음, 둘째, 수산물의 시장구조와 법이 맞지 않음, 셋째, 수차례의 농안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고질적인 거래제도 문제는 현 상태로는 개선이 어려움, 넷째, 선도관리와 위생관리는 수산물 유통의 기본 원칙이지만 식품위생법을 제외하면 수산물 유통 관련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9개장 55개조(벌칙 제외), 부칙 4개조로 구성하였음(※ 연구보고서 부록으로 법률(안) 수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산물유통시책의기본방향), 제4조(다른법률의적용·배제) <제2장 수산물 유통발전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수립·시행등), 제6조(시행계획의수립·시행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사업시행등), 제8조(수산물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설치) <제3장 수산물 산지시장>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개설), 제11조(위판장개설구역), 제12조(위판장허가기준등),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의무), 제14조(위판장의운영등), 제15조(산지중도매업의허가), 제16조(산지매매참가인의신고), 제17조(산지경매사의임면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수탁판매등), 제19조(위판장수산물매매방법및대금결제), 제20조(위판장의공시및평가), 제21조(위판장의개설등지원), 제22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설치), 제23조(산지거점유통센터의운영등) <제4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제24조(수산물저온유통체제의구축), 제25조(수산물어획후위생관리지원), 제26조(수산물저온유통관리기준의설정), 제27조(수산물위생안전의확보), 제28조(유통시설의품질위생관리인증), 제29조(불법어획수산물의유통금지등) <제5장 수산물 수급 관리> 제30조(수산업관측), 제31조(과잉생산시의생산자보호), 제32조(몰수수산물의이관), 제33조(비축사업등), 제34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지원), 제35조(수매및비축사업의손실처리) , 제36조(수산물의수입추천등), 제37조(수입이익금의징수등) <제6장 수산물 유통 기능 및 시설의 효율화> 제38조(수산물규격화의촉진), 제39조(수산물직거래활성화), 제40조(수산식품거점단지의조성), 제41조(소비지수산물분산물류센터), 제42조(수산물산지시장등의개설·정비명령), 제43조(수산물수요개발및소비촉진)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제44조(수산물유통정보화의촉진), 제45조(수산물전자상거래의활성화), 제46조(수산물유통협회의설립), 제47조(수산물유통관련단체의설립및지원), 제48조(수산물유통전문인력의육성) <제8장 보 칙> 제49조(보고), 제50조(검사), 제51조(명령), 제52조(승인등의취소등), 제53조(과징금), 제54조(청문), 제55조(권한의위임등)

	□ 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수탁에 대한 농안법의 개선 사항 ○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 혹은 중도매인 수탁의 전향적 수용 방안 제시 ○ 중도매인 수탁 수용 시 거래방법은 정가수의매매 활용, 상장은 수의매매의 방법 중 하나로 일본의 예약상대거래 도입 ○ 기타 개선 사항으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조건의 수정,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일반법정도매시장에 대한 법률 규정의 정비 제안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정책 대안 제시 ○ 기존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법률인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9개장 55개조, 부칙 4개조)을 제시하고,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록상장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조속한 법률화를 위해 의원 입법을 제안하였으며, 수산물 시장의 지속적 제도 개선을 위한 수산물 시장 제도 개선 위원회를 제안함 □ 정책 기여 내용 ○ 해양수산부의 관계부처합동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종합대책('13. 7. 10)'의 연구내용 일부 반영 지원 및 입법 계획 명시 - 동 대책안 중점 추진 과제(4-5)에 수산물유통법 제정을 명시 ※ 기획재정부 주관 유통구조 개선 관계부처 합동 TF로 해당 과업 추진(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대책회의, 민생경제정책관 주재 간담회 등 참여 지원) ○ 정부의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2013년도 국정과제로 추진 ○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합동대책 추진단 실무반(TF) 참여 지원 및 개선 계획 도출 - 상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TF를 구성하였으며, 법률(안)의 초안 검토를 위해 3회의 회의를 거쳐 법률에 대한 의견수렴 - TF 내 법률(안)의 수정을 위한 별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법률(안) 수정 작업을 진행함 ○ 국회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13. 12. 10) 의원 입법 추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 12. 10) ○ 국회 김춘진 의원실 주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4. 2. 6,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의 수정 작업을 진행함 ※ '2014년 상반기, 1차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2차 공청회 실시 예정)이며, 2014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

연구 기관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과제명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연구 책임자	정지범	
연구 참여자	안철현	
필요성 (목적)	□ 국가위기환경의 심화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 각종 인적재난 및 안전불감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불확실성 및 피해의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재난안전 및 국가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통합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개편을 추진했으나 위기대응 능력 저하 □ 연구의 목적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 테러 및 국지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 ○ 신종재난, 복합재난 등 미래 재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 및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	
연구방법	□ 국내외 기존 연구, 사례 및 법제도 분석 등에 대한 문헌조사 □ 심층 인터뷰 및 언론기사 조사를 활용한 실태 조사 ○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 ○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를 비판한 주요 언론 기사들을 분석 □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활용한 대안의 제시	
주요 내용	□ 성공적 위기관리의 원칙 제시 ○ 통합성 및 조정성(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협력성(네트워크 중심의 협조 체계 구축), 유연성 및 미래지향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 등 5대 원칙을 제시 □ 계층제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현행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 계층제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체계는 통합성 및 조정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 대상적 관점에서 인적재난·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비상대비, 국가기반시설, 생활안전 등의 분리 문제와 주체적 관점에서 각각의 관리주체 간 통합 및 조정이 부족
○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은 무리한 측면 존재
-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산된 위기관리 법제의 유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과 실질적 협력의 강화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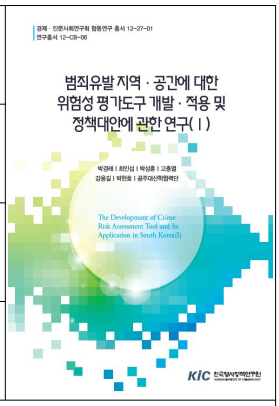
□ 현행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주요 문제점
- 대상의 문제
· 자연·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 분리 문제, 안보와 재난관리 분리 문제
· 신종재난 관리의 문제
· 안전관리·안전문화 총괄 범위의 문제
- 주체의 문제
· 총괄 조정 기능의 문제
· 부처간 조정 기능의 문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실효성 문제
· 소방방재청 내부의 갈등: 일반직과 소방별정직 간의 갈등
· 천안함 사태 등 비상대비 기능의 문제
·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위기관리의 문제
- 과정의 문제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
· 예방과정, 대비·대응·복구 과정 통합의 어려움
·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문제

□ 국가 위기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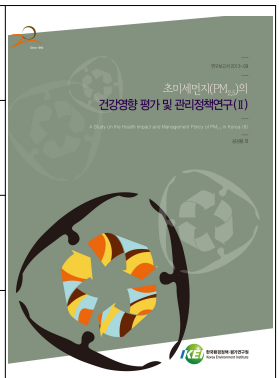
대안	내용
인적·자연·사회적 재난의 통합 및 새로운 재난 정의의 필요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의 통합 개념 마련 ▪ 피해 중심으로 재난 재정의 ▪ 사회적 취약성과 정신적 및 간접 피해에 대한 고려도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실효화 및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실효화	▪ 상시적 협의체로서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실효화 ▪ 법령 위주 통합 작업보다는 계획 위주의 통합 작업 지향
공공기관 위기관리 평가 시스템 도입	▪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유사한 형태의 지침 제정·시행 ▪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매뉴얼 체계 개편 및 (가칭)국가위기대비 TF 구성	▪ 현행 위계적·계층적·분과적 매뉴얼 체계를 장기적으로 범용적·포괄적 형태로 개편 ▪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 ‘국가위기대비 TF’의 구성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합성 및 조정성'의 고양 ○ 이와 함께 전문성과 미래대응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강조하는관점 역시 매우 중요 - 효과적 네트워크의 구성 □ 무조건적인 일원화보다는 각 전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와 분야 간 협력이 보다 바람직 ○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재난·안전 부문이 안보 분야와 결합한다면,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및 역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재난·안전 분야의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의 통합 관리는 꼭 필요하지만 안보까지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즉, 재난·안전 분야 총괄과 국가 안보 관련 총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 □ 재난·안전 분야 총괄조직 형태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행 행정안전부 체계를 유지·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타당 → 안전행정부 구성 ○ 재난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방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 ○ 최근의 국내외적 위험환경이 급변 및 안전복지·포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비, 재난안전 분야를 차관급(제3차관 실선)으로 격상하는 방안 고려 ○ 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 방안으로는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와 같이 전문성과 실행력을 겸비한 상설조직의 실효화가 필요 · 또한 '국가안보실' 형태의 청와대 비서조직 강화 방안도 고려 □ 소방방재청 내 갈등과 이로 인한 협력성 저하의 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청은 분리가 바람직함 ○ 소방방재청은 현재의 전통적 소방 업무(화재, 구조, 구급)와 생활안전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재 부분은 행정안전부로 흡수 ·소방행정체제는 미래 위험환경을 고려 현재와 같은 광역 행정체제 유지 □ 비상대비기능은의 조직적 개편은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만일에 대비한 전시정부 혹은 통일정부의 수행 등 기능 재정립의 전제가 필요 □ 대안의 정책화 실적 ○ **조직개편**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 (3국 9과)로 확대·개편하고 부명을 안전행정부로 개칭 - 정부는 2014년 1월 7일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NSC 사무처 신설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 강조.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

	○ **법령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제3조(정의): 이전의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통합한 사회재난 개념 도입 -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기존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안정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안전행정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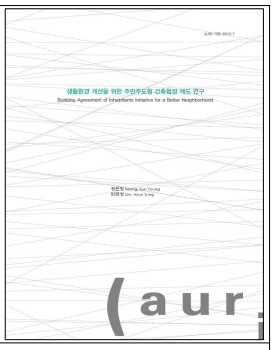
연구 기관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과제명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Ⅰ)	
연구 책임자	박준휘	
연구 참여자	최인섭, 박성훈, 고충열, 강용길, 박현호, 이경환	
필요성 (목적)	□ 범죄발생의 편재성(偏在性) - 소·중·대도시간, 서울의 강남·강북간, 상업지역·비상업지역간, 아파트·비아파트 지역간 등 범죄발생률의 현저한 차이 발견한 연구결과물 대두 - 특히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오원춘 사건, 서진환 사건 등이 보여주듯 특정 강력범죄가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부재 □ 범죄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 및 정책대안 부재 - 거시적 및 미시적 시각에서 범죄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평가도구개발에 대한 국내연구 부재 - 현실적으로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론과 정책대안을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성과 부재	
연구방법	□ 포괄적/학제간 연구 강화 - 기존 CPTED적 접근 외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의 분야를 포괄한 문헌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경찰학, 심리학 전공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도구 개발 및 연구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 반영 □ 객관적/현장조사연구 강화 - 범죄위험성을 최대한 계량화된 수치로 보일 수 있는 방법론 채택 - 기존 공식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의 지역별 배정을 통한 현장연구 강화	
주요 내용	□ 관련 이론 및 공식통계 등의 분석 - 기존 국내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던 환경범죄학 및 위험관리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하여 범죄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마련 - 공식통계분석을 통해 실제 공식통계와 범죄위험성이 정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님을 보임 □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과 적용	

	○ 포괄적·객관적 평가도구의 개발 - 범죄발생가능성과 결과/영향이라는 2가지 차원으로 범죄위험성을 정의. 발생가능성 차원에는 특정 지역의 범죄특성(예, 범죄율, 우범자 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비경제활동인구, 주거안정성 등), 물리/상황적 특성(예, 가디언십, 토지이용 특성 등) 등 3개 범주로, 결과/영향 차원에는 사회경제적영향(범죄의 사회적 비용), 심리적 영향(범죄두려움) 등 2개 범주로 분류하여 범죄위험성에 영향요인을 제시 ○ 16개 지역의 선정과 평가도구의 적용 - 기존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범죄발생률과 지역소득에 있어 상호 매칭되는 지역을 서울 8개, 경기 8개 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도구에서 요구하는 자료수집 - 아파트 지역이 비아파트지역에 비해 범죄위험성이 25.4% 더 높으며, 저소득지역의 범죄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더 높음을 발견. 특히 중위소득지역이라 하더라도 다가구 밀집지역은 공간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위험성 증가함을 발견 □ 해외사례의 소개와 정책대안의 개발 - 독일의 하노버, 영국의 맨체스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폴란드의 슈체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문제해결 사업인 PLuS프로젝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관련 연구자들과 접촉하여 자문 청취 - 도시계획, 위험관리, 주민참여라는 3가지 관점에서 범죄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또한 법적·행정적·경제적 측면에서 범죄위험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범죄예방사업 진행 -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마포구 염리동에 범죄예방기법을 실제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 경기도의 CPTED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한 정책자문 -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단순히 이론적 연구가 아닌 실제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특히 서울시와는 시범사업 중간종료 후 양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기관간 협력의 제도화 □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범죄위험관리의 제도화 -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셉테드를 적용하는「도시개발법 시행규칙」개정 - 2014년 상반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하는「건축법」개정안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 법무부/안전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제도화 -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CPTED 우수사례’ 항목을 삽입하고, 각 지자체별 CPTED교육을 일정 비율 이상 받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과목 내용 개발 및 2014년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별 순회강연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중

연구 기관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 과제명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II)	
연구 책임자	공성용	
연구 참여자	배현주, 홍석표, 박해용	
필요성 (목적)	□ 초미세먼지($PM_{2.5}$)의 위해성이 보고되면서, 2011년 3월「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미세먼지($PM_{2.5}$)의 대기환경기준을 공포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나 적절한 정책 수단이 미흡한 상태 ○ 배출량 inventory 또는 배출원, 측정방법, 관리수단 등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 ○ 건강피해 또는 건강편익은 대기질 기준 선정 또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통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함.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건강영향과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수준에 따른 건강편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 □ 이에 본 연구(2차년도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_{2.5}$)가 심혈관계 질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도시의 $PM_{2.5}$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관리정책을 연구하고자 함 ○ 1차연도(2012.1~2012.12)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의 시공간적 분포특성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산업시설 중심의 관리정책 road-map 마련	
연구방법	□ 초미세먼지($PM_{2.5}$)의 배출원별 영향 문헌 조사 ○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의 장거리이동 영향, 배출원별 영향 조사 □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영향 통계분석 ○ 분석자료 : 건강자료, 초미세먼지(PM2.5) 농도자료, 기상자료 ○ 시계열 연구를 통한 포아송 회귀분석 ○ 각 요인들의 비선형 관련성을 고려한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적용 □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편익 산정 ○ 분석자료 : 지리정보자료, 통계청의 인구자료, 초미세먼지(PM2.5) 농도자료, 유병률 ○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의 농도-반응함수를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BenMAP)에 적용하여 건강편익을 분석	

	□ 대도시지역 초미세먼지($PM_{2.5}$)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의 사례조사 및 국내 정책 조사 ○ 기존 정책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수집
주요 내용	□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편익 산정 ○ 서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미국 EPA에서 개발한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BenMAP)을 활용하여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변화에 따른 건강편익을 산정 □ 대도시지역 초미세먼지($PM_{2.5}$)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외국의 관리정책 사례 분석 ○ 수도권 특별대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존의 관리대책 평가 ○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관리수단의 제시 - 배출계수 확보 등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포함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초미세먼지($PM_{2.5}$)는 심혈관계 입원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임 ○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PM2.5 10 ㎍/㎥ 증가 시 전 심혈관계 입원 발생위험은 2.00 %(95 % CI: 0.90～3.11 %)와 3.74 %(95 % CI: 1.99～5.51%) 높아짐 □ 초미세먼지($PM_{2.5}$)는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임 ○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PM2.5 10 ㎍/㎥ 증가 시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은 1.06 %(95 % CI : 0.18 ～ 2.31 %)와 8.84 %(95 % CI : 6.09 ～ 11.66%) 높아짐 □ 미래 배출량 전망 결과는 배출원의 배출 기여도가 미래에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과 배출원 중요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줌 ○ 산업도시와 일반 대도시의 주요 배출원은 확연하게 구별되나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예산투자는 주로 도로이동 오염원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 - 현재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 배출량 전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삭감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함 - 도시 특성(배출원 기여도)에 맞도록 삭감수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PM_{2.5}$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1차 고체입자뿐만 아니라 2차 입자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s, 암모니아 등의 오염물질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현재도 다양한 삭감 수단이 적용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삭감이 필요 ○ 누락 배출원을 포함하는 지역별 배출량 인벤토리의 작성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 활용 및 관리 내실화

	○ 지역 대기관리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개선 - 지역별 주요 배출원과 관리가 용이한 오염물질이 서로 상이하여 정부 주도의 지역관리는 한계가 있음 □ 장거리이동오염원 대책 마련 ○ 중국에서 이동되는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마련 필요 - 국제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점

연구 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 과제명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성은영	
연구 참여자	임현성	
필요성 (목적)	□ 노후한 주거지의 정비 및 관리 수단의 한계 ○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 및 막대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정)구역의 해제 진행 및 확산 ※ 2013년 8월 말 현재, 전국 175개 구역(서울 64개, 천안시 40), 27,088,453㎡ 해제 ○ 인구의 노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와 주택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에 대한 수요 증가 ○ 노후한 저층주거지들에 대한 주택 정비 정책도 전면철거식의 재건축, 재개발 보다는 기존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단위 정비 및 관리를 지향 ○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가 견인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설 및 공간의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에 따른 활용 한계와 가능성 파악 필요 ○ 정부는 주민의 자주적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건축법」개정을 통해 주민간 협정시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 ○ 2013년 12월, 도입이 확정된 건축협정 제도는 개별 필지단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정비와 관리가 가능한 반면, 맞벽건축을 통한 주택의 정비시 건축특례 및 완화 조항에 초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 □ 건축협정을 중심으로 한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의 사회적 작동 체계 마련 ○ 본 연구는 건축협정 제도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의 형태로서 주민주도적으로 계획, 운영될 수 있도록 진화된 체계를 구축, 제시하고 ○ 구역내 주민간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관리하고 정비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형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방법	□ 국내외 생활환경 개선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 국내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및 정책, 주민약속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 미국의 자치규약(CC&Rs), 영국의 공유벽 협정서 등 관련 사례 분석 □ 건축협정 관련 주민 의식 및 개선 수요조사 ○ 주거지 및 주택의 정비 및 유지관리 의지 파악을 위한 주민 인터뷰 ○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만족도에 따른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관리에 대한 지불의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건축협정 제도 작동 가능성 시뮬레이션 ○ 건축협정에 의한 건축법 적용 특례(맞벽건축허용, 건축선, 사선제한, 통합건축 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모의 건축협정 수립 과정 수행을 통한 건축협정 제도의 실효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 건축협정 제도와 사업적 특성과 활용 제도적 배경이 유사한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과 적용 가능성 협의 ○ 지방 중소도시의 기성 주거지 문제점 및 정비 수요 파악, 건축협정 제도 활용 가능성 협의 ○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통한 건축협정 수요 및 적용 가능성 자문
주요 내용	□ 생활환경 개선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 기존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및 정책사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의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진 후에도 주민 스스로의 주택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의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약속 제도들은 주거성능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개선의 범위가 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심미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어 생활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는 한계가 있음 ○ 입주자들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거생활 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층간소음 등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주거지 정비 및 관리 측면에서 건축협정 제도의 가능성 - 기존의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들은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만 초점하고, 주민간 약속 제도들은 경제적 동인이 없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건축협정 제도는 생활규약으로서 주민협의 체계이자, 건축행위를 기반으로 정비를 동반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법 특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이나, 기존 소규모 주거지 정비 제도의 한계 및 기존 주민약속(경관협정)이 시범사업 이외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한계 역시 건축협정의 한계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 운영 및 활용 사례 분석

○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는 195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60여년에 걸쳐 제도가 성숙되어 왔으며, 일본 전역 2,800여 지구(2008년 현재, 국토교통성)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되어 다양한 주거지 및 상업지역의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는 주민들이 주거지 계획 단계에서 양호한 주거지의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유지 관리 수단으로 주로 활용

- 주로 고밀 다세대 거주 주택이 저층의 주거지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활동의 건축적 제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구계획, 녹지협정, 경관협정 등 다양한 제도들과 목적에 따라 혼합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주거지 관리 및 정비 시 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 개선, 상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 주택개발 시에도 다양하게 이용

○ 일본 건축협정 제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토지와 주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마치즈쿠리연락회, 마치즈쿠리헌장)을 통해 스스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축협정과 지구계획이 정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도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 후 20여년이 지나 정착되었고 장기간이 흐른 후 수요 변화에 따른 갱신 실패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주거지의 관리 방향에 따른 다양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방안

○ 주거지의 정비와 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생활환경 개선의 결정 흐름을 개념적으로 단순화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법정 건축협정 구역 등을 고려하여 5개 정비 모형에 대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물리적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통해서 건축협정시 생활환경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

○ 대상지 이슈별 건축협정 체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주거지의 여건과 문제들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

- 첫째, 주거지 정비사업시 공공재정 투입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축협정 활용 방안

기반시설 정비 후 필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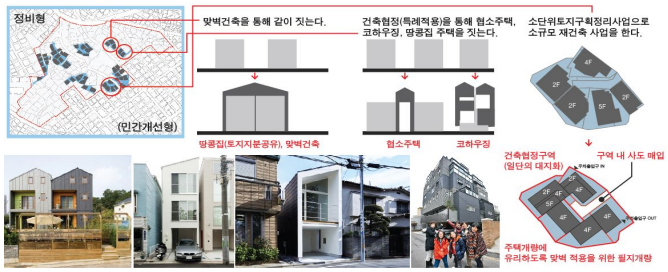
→

건축협정으로 추가 기반시설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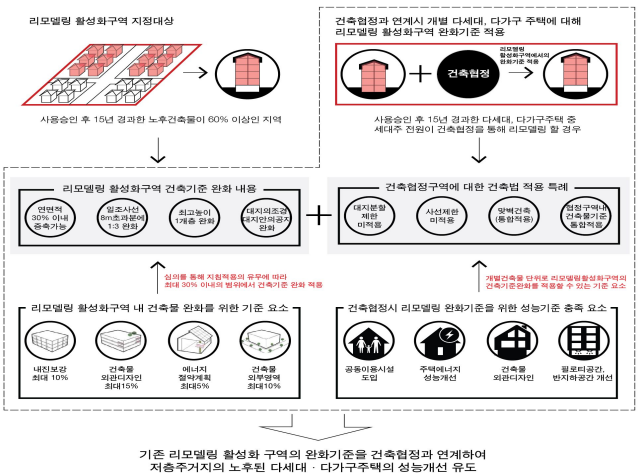
건축협정을 통한 주택개량

- 둘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비 모델의 적용 가능



협소주택, 코하우징, 땅콩주택 등 새로운 건축수요에 건축협정으로 대응

- 셋째, 과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강화된 성능 적용시 최소한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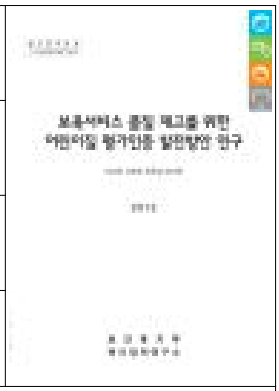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및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주거지 성능개선

- 넷째, 기존 도시맥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는 마을단위 정비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수단으로 활용 가능

기반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건축협정 구역의 마을단위정비계획

	- 다섯째, 일단의 양호한 주거지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계획, 관리를 위해 건축협정을 통해 일단의 양호한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자율적 규제가 가능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향,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시장 건전성 제고, 기존 제도와 통합적 적용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협정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 건축협정 제도의 체계화 방안 ○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안 제시(생활환경의 범위 및 건축행위 범위, 체결 대상자 등) ○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추진을 위한 건축협정 체결 가능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 건축협정 체결 절차 및 방법 제시 □ 기존 정비 및 관리 제도와 연계 활용 방안 ○ 과밀한 주거지의 성능개선 담보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완화 기준 연계 □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건축협정 체결을 통한 조건부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필지단위 주택 정비 활성화 유도 방안 (기반시설 설치 최소화를 위한 완화 기준 등) ○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구획정리(필지정리) 유도(합의 형성 방안 등) 방안 ○ 건축협정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지위 강화(부동산 등기법에 포함 등) 방안 ○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지원 방안

<table>
<tr><td>연구
기관명</td><td>육아정책연구소</td><td rowspan="4">  </td></tr>
<tr><td>연구
보고서명</td><td>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td></tr>
<tr><td>연구
책임자</td><td>이미화</td></tr>
<tr><td>연구
참여자</td><td>서문희, 최윤경, 엄지원</td></tr>
<tr><td>필요성
(목적)</td><td colspan="2">□ 본 연구는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2차 평가인증의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평가인증의 성과와 한계, 그 가능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학부모와 전문가의 관점이 균형있게 반영된 3차 평가인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보육현장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품질 욕구가 적절히 반영된 평가인증제도를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부모의 보육서비스 품질에의 욕구가 반영될 3차 평가인증 지표 설계의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td></tr>
<tr><td>연구방법</td><td colspan="2">□ 관련 국내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해외자료 고찰

□ 관련 통계 및 기존 조사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를 활용

□ 학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만 0~5세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1,050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평가인증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92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보육분야 학계 교수, 보육정보센터장, 관련 공무원, 현장 등)</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2">□ 평가인증과 관련 현황 및 보육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 평가인증 현황조사와 상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파악
○ 평가인증 현황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

□ 보육수요자인 부모의 욕구를 고려한 지향점 및 부모참여방안 마련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A안</td><td>B안</td><td>C안</td></tr>
<tr><td>(간접적인 반영형태)</td><td>(간접적인 반영형태)</td><td>(부모 직접평가)</td></tr>
<tr><td>특징</td><td>▪모든 재원아 부모 대상 체감만족도 조사</td><td>▪현장관찰자가 부모대상 무선선별 체감만족도 조사</td><td>▪부모서포터즈★ 활용 방안</td></tr>
</table></td></tr>
</table>

	→ 부모평가점수로 반영	▪부모 무작위 선별 면담 후 부모면담 보고서	
	점수 반영에 대한 고려사항	만족도에 대한 고려사항	일반적인 고려사항
고려사항	▪양적평정의 한계 ▪점수로 반영될 경우 부모평가 점수의 전문성 문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성 문제	▪무선 표집이 편중될 우려 ▪부모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과 무관할 수 있음 ▪부모의 기대치가 어떠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	▪부모가 평가자가 되는 것에 대해 현장의 거부감이 존재함 ▪몇 명의 부모를 대표성 있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려 필요 ▪비전문가로서의 수요자 입장의 평가가 전문가 관점의 객관적 평가를 왜곡할 수 있음 ▪별도의 평가인증 항목 및 지표의 마련이 요구됨
장점	▪모든 부모의 수요자로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A, C안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C안 대비 실질적인 수요자의 의견 반영 가능 ▪양적평정의 보완으로 질적평정을 활용할 수 있음	▪A,B안 대비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은 부모가 평가하므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전수 조사이므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요구됨 ▪만족도를 점수로 객관화 하는 것의 어려움	▪현장관찰자의 업무과중 ▪무선표집의 편중 우려 ▪만족도를 점수로 객관화 하는 것의 어려움	▪지속적인 부모평가자 훈련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소요 ▪A, B안 대비 실질적인 수요자의 의견 반영이라고 보기 어려움

□ 3차 평가인증 운영체계(안) 개발

○ 성과 분석을 토대로 평가인증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3차 평가인증 운영모형 및 절차를 개발

인증 단계	1안 (현행 수정 및 보완)	인증 단계	2안 (평가제(안))
참여 신청	▪2차 평가인증과 동일	기본 확인*	▪시설 인허가 기준 상향조정 ①시설인허가 기준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②설치인가 시 평가인증 일부 영역 사전 평가 ▪법규완비시설에 신청자격 한함 ▪신규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조력개입
기본 확인	▪지자체의 기본확인 과정과 항목 재검토 ※미충족 시 참여제한	참여 신청	▪유예기간 안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미참여어린이집 대부분이 신청
자체 점검	▪자체점검 비중 하향조정, 보고서 점수 반영제외	자체 점검	1안과 유사
현장 관찰	▪현장관찰 비중 상향조정, 방문주간 공지 ▪현장관찰자 파견인원 기관규모에 따라 조정	현장 관찰	1안과 동일
- (부모 참여)	▪부모참여방안(간접적인 반영형태) ①모든 재원아 부모 대상 체감만족도 조사 ②부모 무작위 선별 면담 후 부모면담보고서 ③부모대상 무선 선별 체감만족도 조사	- (부모 참여)	1안과 유사
심의	▪심의점수 비중 하향조정, 내용영역 축소 ▪부모만족도 결과 반영	심의	▪기준점수 이상과 미달로 구분 ※인증참여에 따른 점수로 구분하며, 점수가 낮은 시설에 대한 계속적 관리 실시
비고	▪신규/재인증의 절차 차별화 ▪관련 인력의 전문성 수준 제고 ①자체점검 조력 인력-보육정보센터 ②현장관찰자, 심의위원	비고	▪평가인증 상위기구 신설(복지부장관령 정도) :제도의 독립성 및 일관적인 방향성 유지 ▪고경력 현장관찰자 활용 -신규/일반/고급 구분(안)

인증 단계	제 3안 (자발적 참여 및 순환적 평가(안))
기본 확인*	2안과 유사
자체 점검*	▪先 자체점검, 後 참여신청 : 기간 단축(6개월→2개월) - 단계별 소요기간을 2주 단위로 진행
참여 신청*	
현장 관찰	▪'보육과정'과 '보육과정 외'로 나누어 평가 ▪평가주체별 영역 분담(지표체계 변동) :부처-지자체, 인증국, 부모(직접평가) 등 평가 영역에 대한 분리, 평가의 분담 (예: 지자체, 인증국, 부모, 안전공제회 등 참여)
- (영역 분리 /부모 참여)	
심의	2안과 유사
특징	▪평가영역의 분리로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부담 감소 ▪시설 및 환경 관련 평가에 대한 지자체 참여 강화 및

인증 단계	1안 (현행 수정 및 보완)	인증 단계	2안 (평가제(안))	인증 단계	제 3안 (자발적 참여 및 순환적 평가(안))
			▪ 미인증기관(1만개)유입방법 ▪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재정재원 연계 필수 (미참여시설의 인증참여 동기부여)		인증국의 보육 영역에 대한 집중과 전문성 확보 ▪ 부모가 평가인증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바우처 적용

□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마련

인증 단계	1안 (현행 수정 및 보완)	인증 단계	2안 (평가제(안))	인증 단계	제 3안 (자발적 참여 및 순환적 평가(안))
사후 질관리 및 지원	▪ 결과 부분 공개(안) : 2차 평가인증과 동일 ▪ 인증기관 사후 질 관리 ①확인점검 -> 불시방문제 ②인증기관 미비점 보완지원 :인증기관 컨설팅, 조력, 모니터링 강화 ③확인점검 & 인증유효기간 현행(3년) 유지 ④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가능	사후 질관리 및 지원	▪ 결과 부분 완전 공개(안) ①모든 어린이집의 인증결과 ②상세점수와 등급, 전체 내 분위 ③온라인/오프라인 ④미비점 보완을 위한 지원 연계 ▪ 결과 활용 ①인증결과와 재정연계 • 인센티브: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바우처 • 디스인센티브: 미인증기관 보육료지원중단 ▪ 사후 질 관리 ①1년 연중 질 관리 체계 :인증기간에만 집중되는 현장의 허점 개선 ②사후점검(불시방문)과 유효기간 연계 :주요항목 부적절수준 확인 시 시설폐쇄 ③질 관리 우수정도에 따른 차등유효기간	사후 질관리 및 지원	2안과 동일 · 강화

□ 3차 평가인증 지표(안) 개발

구분	1안	2안 (간편형 포함)
지표 I 영역 항목 점수 체계 점수 비중	▪ 지표의 난이도, 적절성 ① 난이도 조정: 문항 간 층위/세부수준 비슷하게 ② 적절성 검토: 실행내용 현장/아동연령 대비 ▪ 점수체계, 기준점수 상향조정 ① 점수체계 조정: 3점→5점(변별력 제고) ② 평가점수 0점 신설 (미충족시 인증제한) : 0점 점수를 포함하면서 점수를 4점 척도로 구성 ③ 통과기준점수 상향조정(75점→80점): 점수분포 정규분포화 ④ 상대평가 등급 산출(by 표준화 점수) : 절대평가도 고려 ▪ 항목 추가 -원장 평가 · 운영자로서 전문성 · 교사 재교육 기회 제공 등	▪ 통합지표 및 지표 차별화 ① 통합지표(안) 공통지표 / 특화지표: · 연령별 (영아/유아) · 기관규모 및 특성별 (20인이하, 장애통합, 방과후 등) · 이력별 (평가인증 결과 우수성에 따른 차별화, 인증/재인증/재재인증) / 선택지표: · 우수한 경력 · 근속교사의 현황 · 낮은 이직률/재교육 기회 제공 · 보육과정과 상호작용/교수법의 우수성 · 컨설팅의 효과 ② 우수어린이집 선별을 위한 지표차별화 - 고득점 재인증기관:간소지표적용, 상위지표선택 후 고난도 항목 고득점시 추가 인센티브 ③ 3-5세 누리과정 내용을 지표의 보육과정에 반영 ▪ 점수체계 변경(1안에 추가사항) -지표항목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필요

□ 3차 평가인증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기여)	□ 평가인증 3차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3차 평가인증제도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 5개 정책부문별 14개 추진과제 □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안 제시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력에 따른 차이를 적용한 개선안 - 신규인증기관의 평가인증과정(1안) - 재인증기관의 평가인증과정(안) ○ 3차 운영체계의 평가인증과정 개선 공통사항 □ 3차 평가인증에 대한 개선(안) 제시 ○ 1안: 2차 평가인증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 방안 ○ 2안: 평가제 도입 ○ 3안: 평가인증의 자발적 참여 및 순차·순환적 평가 체제 적용 □ 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안 제시 ○ 1안: 문항의 난이도와 평가척도의 단위 확대 ○ 2안: 지표의 통합, 특성화 지표 개발 □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안 ○ 1안: 결과 부분공개, 사후관리 강화 ○ 2, 3안: 결과 전체공개, 연중 사후관리체제 □ 3차 평가인증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제시 ○ 방안별 적용시기에 대한 차이, 평가인증 관련 업무 협조관계,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의 형태와 정도를 고려 ○ 3차 평가인증 추진과제(5개 정책부문, 14개 추진과제, 37개 세부추진과제)의 연차별 추진 계획 제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에 반영됨 ○ 2013년 업무계획에 명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평가결과 공개 범위 확대(2013년 하반기) 및 재정지원 연계 추진(2014년 하반기) ○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명시 - 성과 및 수요자 중심 평가지표 개선, 국가 품질기준 마련 및 평가 의무화 전환(2015년) - 평가와 퇴출 연계하여 최소기준 미달 시설은 보조금 지원 중단, 권장기준 시설은 자율성 강화, 자율 점검 기회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질 낮은 시설 자연 감소 추진(2015년) - 국가적 질 관리 체계 마련 및 적용, 평가 등 추진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업무계획에 반영 - 제 3주기 평가인증 지표 수정, 보완 중

Ⅲ 연구기관 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Ⅲ 연구기관 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상위기관 2개를 후보군으로 확정하여 우수사례 작성을 연구기관에 요구한 후, 연구기관 평가단 제3차 워크숍(4. 3.(목)~4. 4.(금))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1개를 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에 기술

평가지표	우수사례 연구기관	비고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정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정	산업연구원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한국교통연구원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1. 리더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에너지경제연구원	
2-2-2. 노사관계 선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한국개발연구원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한국노동연구원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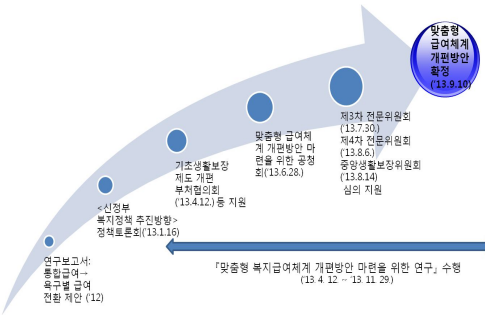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추진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실적 외에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 민간 등과의 능동적인 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
- 한국적 복지모형 패러다임 구축과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정책의 비전 선도

o 추진내용 및 과정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가동 및 전담조직 운영
  · 전체 조직을 6개 실 체제에서 4대 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각 연구본부 내 국정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센터 조직 설치
  · 정부정책 현안에 즉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대응 TF' 구성 및 운영
- 정부부처 국정과제 수행 과정 중 정책 설계 및 추진 지원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참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참여(2인) 등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기본계획(안) 공청회 등
  · 신문, 방송 등 활발한 언론보도를 통한 국정과제 성과확산 지원
- 국정과제 영역별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 방안 수립
  ·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방안 제시 연구, 임플란트 급여 적용방안 연구
- 국정과제 수행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인수위원 2인 및 전문위원 1인)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국정방향 정립에 기여
  ·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복지공약 실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집약하여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상이 강화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하위 전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을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의 기반 마련
  ·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진전략 연구 수행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해 주요 연구내용의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반영



- 정부 및 국회, 산학연 등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 ·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및 10개 의원실 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을 공동 점검하고 정책 발전 방향 검토
  - ·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정책실무협의 적극 진행
  - · 사회복지분야 기관장 중심의 협의체 구성를 하여 격월 주기 회의개최를 통해 정책현안 분석 및 주요 이슈 논의
  -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영역별 학회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 개최를 통해 정부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노력(16건의 학회 직간접 지원)
  - ·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포럼 운영
    : 고령사회포럼, 미래사회포럼, 사회서비스발전포럼, 민관복지포럼 등
- 언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 확산 및 국민 여론 수렴
  - · 방송·언론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 성과 확산 및 국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효율적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언론기관 과의 네트워크에 집중
  - ·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서 정책토론회>를 중앙일보·JTBC, 토론회 공동 개최 및 TV 연속기획보도(13.10.14~16)
  - · <벼랑 끝에 사람들: 진단과 대책 토론회> 중앙일보(후원)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산업연구원

o 추진배경

- 정책연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기여도가 높은 기본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가 발굴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굴·선정 시스템 구축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적 시대적 환경변화 및 정책적 요구에 부합한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획·제안할 수 있는 체계 조성
-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심의·평가체계 운영

o 추진내용 및 과정

- 산·학·연·정 연구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정책협의회 운영
  · 정부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주관하는 정책연구협의회(총 3회) 및 정부부처 담당 과(課)와 '연구분야별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총 22회)
  · 연구수요조사는 Off-line 수요조사(총 2회, 상반기: 3.4~3.15, 하반기: 8.30~9.13) 및 On-line 수요조사(상시) 병행 실시
- 정책연구 강화 및 창의적인 연구 확대를 위해 Top-down 방식의 기획연구 선정시스템 및 Bottom-up 방식의 연구과제 선정 경합시스템 병행 운영
  · (Top-down) 정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선도적 정책연구 및 팀 단위의 종합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Top-down 방식의 기획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 (Bottom-up)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연구과제 제안 발표회' 및 '사업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합과정별 연구과제 제안 및 채택 현황】

구분	총 제안과제 수	채택	미채택	채택율
제1차 경합단계	29개	10개	19개	34.5%
제2차 경합단계	33개	13개	20개	39.4%

- 시의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연구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총 15인)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총 2회, 1차: 6.27, 2차: 10.30)
  · 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한 유사·중복여부를 점검하고, 제안서별 정량평가 실시
- 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한 연구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계획 심사위원회 평가결과(70%), 연구자문위원회 평가결과(30%)를 반영하여 기본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연구원을 대표할 기획연구과제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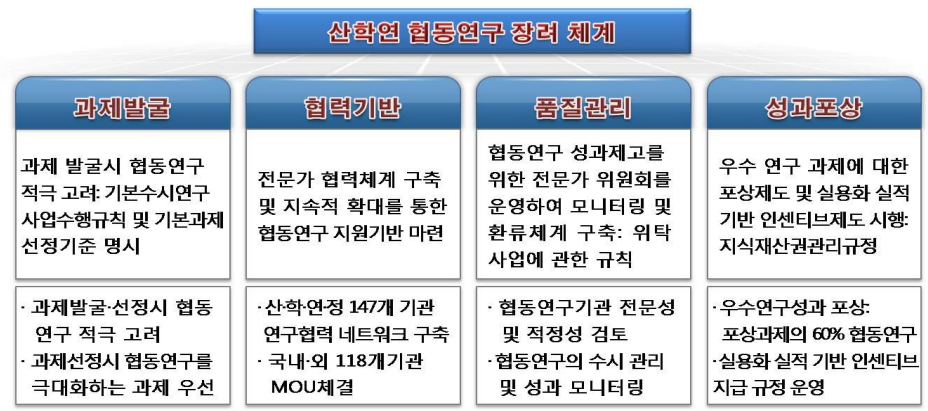
1-3-2 협동연구 추진정도 – 한국교통연구원

ㅇ 추진배경

- 학제간융합연구를 통해 분야간, 기술간, 기관의 기능간 상호 보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에 대한 필요성 급증
- 효과적 산·학·연·민·관 협동연구의 발굴 및 추진, 성과달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 연구의 50%인 총 90건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동 워크숍 및 과제점검 회의 등을 개최
- 범국가적 정책과제 및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등의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민·관의 전문가와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연구품질 향상 및 정책기여도 제고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과제발굴, 협력기반 구성, 품질관리, 성과포상 등 다각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유형별 과제발굴 및 수행과정의 차별화를 통하여 협동연구 적극 장려를 통한 연구성과 진작 도모

ㅇ 추진내용 및 과정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및 제도 운영
  · 연구과제의 발굴, 협력기반 구성, 품질관리 체계, 성과포상 등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다각적 추진체계 구성



- 다양한 유형의 협동연구 발굴 노력 수행
  · 국가정책지원형: 정부부처 수요조사 및 외부과제 제안에 의한 과제 발굴(기본 8건, 수시 9건)
  · 혁신기술개발형: 협동연구 협력기반을 활용한 산학연 연구진 구성 및 R&D 과제 발굴(43개 협동연구기관 참여, 19개 R&D 과제 수행)

· 국제협력교류형: MOU 체결 및 국제 세미나·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외부기관 교육 등 연구교류를 통한 과제 발굴 및 기회 확대(유관기관 국제협력 관련 57개 기관 MOU 체결, 국제 세미나·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외부기관 교육 등 총 79건 개최)

- 다양한 유형의 협동연구 발굴 : 2013년 90건의 협동연구 수행(전체의 50% 수준)
  · 국가정책지원형 : 교통물류부문의 정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관련 협동연구
  · 혁신기술개발형 : 실용화 기반 융복합형 혁신기술 개발관련 협동연구
  · 국제협력교류형 : 해외 국가 정책방안 제시 및 지식·경험 공유관련 협동연구

2013년도 산학연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 실적			
국가정책지원형	혁신기술개발형	국제협력교류형	총계
57건	19건	14건	90건(전체 181건 중 50%)

·유형별 협동연구 발굴 및 실적

유형	주요 내용 및 실적
국가정책지원형	· 교통물류부문의 정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관련 협동연구 · 정부부처 연구 수요조사 및 외부과제 제안에 의한 과제 발굴 · 기본 8건, 수시 9건 과제 발굴
혁신기술개발형	· 실용화 기반 융복합형 혁신기술 개발관련 협동연구 · 연구협력 네트워크, MOU 체결, 전문가 Pool 등 협동연구 협력기반을 활용하여 산·학·연 연구진을 구성하고 R&D 과제 제안 및 발굴 · 43개 협동연구기관 참여, 19개 R&D 과제 수행
국제협력교류형	· 해외 국가 정책방안 제시 및 지식·경험 공유관련 협동연구 · MOU 체결 및 국제 세미나, 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 외부기관 교육 등 해외 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연구교류를 통한 과제 발굴 및 기회 확대 · 유관기관 국제협력 관련 57개 기관 MOU 체결, 국제 세미나·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외부기관 교육 등 총 79건 개최

- 협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노력
  · 협동연구 품질관리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수행 연구 점검·평가위원회 규칙' 및 '위탁사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위탁기관의 전문성 검토 및 협동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 협동연구 책임자 자율권 확대 : 연구단급 R&D 협동연구의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진 구성,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고유권한 부여

- 협동연구 추진실적 및 성과(사례)

· 과제명 : 2013년 ICAO 전략의제 대응 연구

과제명	2013년 ICAO 전략의제 대응 연구					
참여 연구인력	구분	연구 참여자	소속	직위	전문 연구분야	담당역할
	원내	박진서	한국교통 연구원	부연구위원	항공교통	과제 총괄 및 SLOT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안
		김제철		연구위원	경제	LCC 시장구조 개선
		조준행		연구위원	건축공학	장기기후재원 조성 및 활용
		김준혁		부연구위원	항공교통	항공화물 보안성 연계방안
		오성열		전문원	물류	군민 공동사용 공항 협력
	원외	이강빈	한국항공 우주정책 법학회	회장	항공법	공정경쟁 법적·정책적 개선
		김종복		부회장	항공법	항공안전 법적 보호 제도
		신성환		상임이사	항공법	RPA 손해배상 법적체계 개선
		김선이		부회장	항공법	항공안전 법적 보호 제도
		신동춘		부회장	항공법	공정경쟁 법적·정책적 개선
		김기웅	한국항공 대학교	교수	경영	공항 지속가능 경영
		문우춘		교수	항공교통	공항 운영 최저치 개선
		김웅이	한서대학교	교수	물류	공항 운영 최저치 개선
		손영우	연세 대학교	교수	심리	인적요인의 보안검색 영향 및 관리방안
		정은경		조교수	심리	
		김진환	용인대학교	교수	경호학	위협승객 사전식별 프로그램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학	지정항공사 해외 사례
		이종석		변호사	법학	항공사 제휴협정
협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타당성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한 ICAO 전략의제에 대하여 국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항공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연구 수행 필요					
산학연 협동연구 참여진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본원은 과제총괄을 비롯해 환적 시 보안성 연계, 기후재원 조성, 공항운영 효율성 증대 협력, 시장구조 변화 및 규제 정책 , ICAO 가이드라인 제안 등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법·제도적 개선(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항공협정 법률 검토(법무법인 광장), 지속가능 경영(항공대), 보안관련 인적·기술적 검토(연세대, 용인대) 등 부문별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협동연구 추진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과정상의 상호협력 정도	· 연구진 워크숍 및 정기적 점검회의 등 연구진 간 의견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ICAO 국제회의 시 분야별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연구우수성 제고	항공관련 정책연구(한국교통연구원), 법·제도(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인적요인 분석(연세대), 항공보안(용인대), 안전 및 지속성장(항공대), 법률 검토(법무법인 광장)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ICAO의 전략의제 국내적용에 따른 문제점 사전파악 및 선제적 대응방안 도출. 주요성과-항공 안전, 보안,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 분야의 ICAO 전략의제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정책기여 확대	전 세계 항공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ICAO 전략의제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및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 **추진배경**

- 연구보고서의 질 및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체계 개선
- 수시, 수탁, 기본연구과제의 성격 및 운용 방식에 맞는 평가 체계 도입
- 기본과제의 경우 전년도 평가지적 사항인 보고서별 심사위원간의 평가 점수 부여 편차 해소 방안 마련에 부응하기 위해 집체 평가 방식 도입

o **추진내용 및 과정**

- 기관 연구사업별 평가 방식 수립 및 개선

① **고유연구과제(기본, 일반, 협동연구):** 실행계획서와 중간보고서 단계 심의 실시, 최종보고서 단계 심의 및 평가 실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실시

② **수탁연구과제:** 수탁연구 수행을 위한 타당성 심의, 최종보고서 평가 실시

③ **수시연구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타당성 심의, 최종보고서 평가 실시

- 기관 고유연구사업의 경우 정책연구와 기초연구의 심의 및 평가 지표 구분 실시

구분	2012년	2013년	개선사항
고유연구 과제	·3-4개 보고서를 묶어 그룹별로 평가위원을 배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룹별 편차에 대한 지적	·기본연구군 8개 보고서와 일반사업군 9개 보고서에 대하여 집체평가 실시, 평가단이 해당보고서 전체를 검독하여 평가	·군별 평가위원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차 해소 ·평가대상 보고서 전체를 비교하여 평가점수 부여
	·실행계획서: 서면평가 ·중간보고서: 서면평가 ·최종보고서: 서면평가	·실행계획서: 심의(심의회) ·중간보고서: 심의(심의회) ·최종보고서: 심의(서면) 평가(집체)	·실행과 중간보고 단계 심의회 실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 심화 ·최종보고 질 제고를 위한 2단계 검토체계 마련
수시연구 과제	·최종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평가	·기존과 동일
수탁연구 과제	·평가 미시행	·최종보고서: 평가	·수탁연구과제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

- 기본연구, 수탁연구, 수시연구의 성격에 따라 평가절차와 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사업유형	연구단계	심의평가	주요지표
기본 연구	실행 계획서	심 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선행문헌 및 관련 자료 검토 연구설계의 구성 및 내용, 방법 검토, 연구진 및 자문진 구성 예산 및 국외출장 여부 등 검토
	중간 보고서	심 의	연구내용, 선행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수준 연구계획에 의거 연구추진 상황 점검, 향후 추진 일정 및 주요 계획 검토, 연구윤리 관련 검토
	최종 보고서	심 의	주요 연구결과, 분석, 정책제언 등에 대한 검토 및 최종본 작성을 위한 심의의견 제공
		평 가	최종보고서의 구성, 내용, 분석, 결론, 정책제언 등 최종본의 완성도를 평가
수시 연구	최종 보고서	평 가	수시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결론, 제언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수탁 연구	최종 보고서	평 가	발주처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용 및 구성 요건의 부합성 평가

- 연구단계별(착수, 중간, 최종심사 등) 평가의 활용
  · 연구기획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단계별 심의 평가 후 연구진에 전달, 연구진은 심의, 평가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

사업유형	연구단계	심의평가	연구기획소관부서	활 용
기본 연구	실행 계획서	심 의	심의회 실시, 심의의견 접수, 심의의견 배포	심의회 발표, 심의의견서 반영한 연구진의견서 및 수정본 제출
	중간 보고서	심 의	심의회 실시, 심의의견 접수, 심의의견 배포 표절검사 실시	심의회 발표, 심의의견서 반영한 연구진의견서 및 수정본 제출
	최종 보고서	심 의	심의회 실시, 심의의견 접수, 심의의견 배포, 표절검사 실시	심의의견서 반영하여 수정 보완후 최종보고서 평가본 제출
		평 가	집체평가 실시, 평가점수와 의견서 전달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실시	평가서 수용 또는 이의신청 평가의견 반영한 최종본 제출 연구윤리자가진단확인서 제출
수시 연구	최종 보고서	평 가	평가의견 및 평가표 접수 및 배포	심의, 평가 반영한 수정본 제출
수탁 연구	최종 보고서	평 가	평가의견 및 평가표 접수 및 배포	평가의견 반영한 수정본 제출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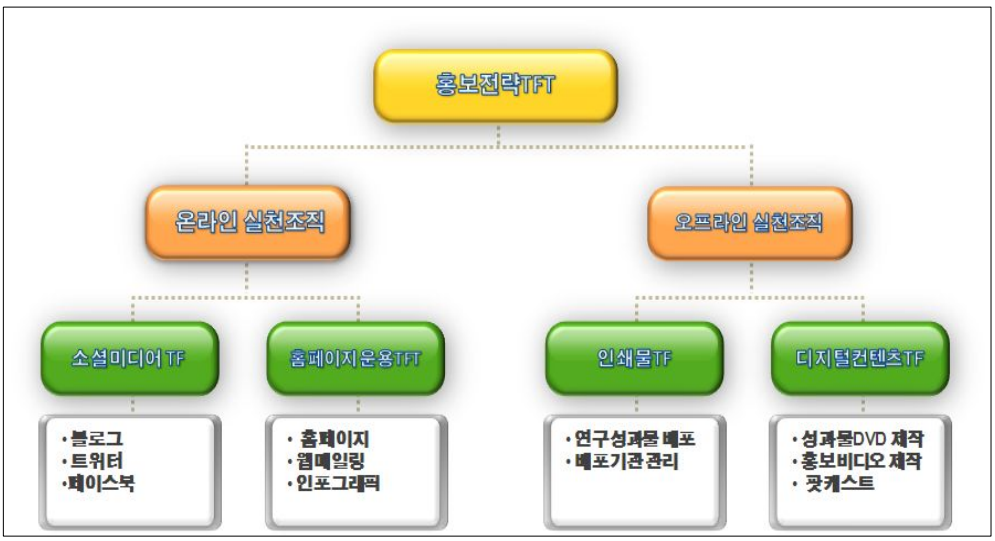
o 추진배경

- 홍보전략 TFT를 통해 지속적으로 2013년 중점과제로 3대 과제(①매체별 특화된 홍보확산·전략 수립, ②환류형 종합적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 ③국제협력 네트워크 활동강화)를 선정하여 상세실천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홍보확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확산계획을 수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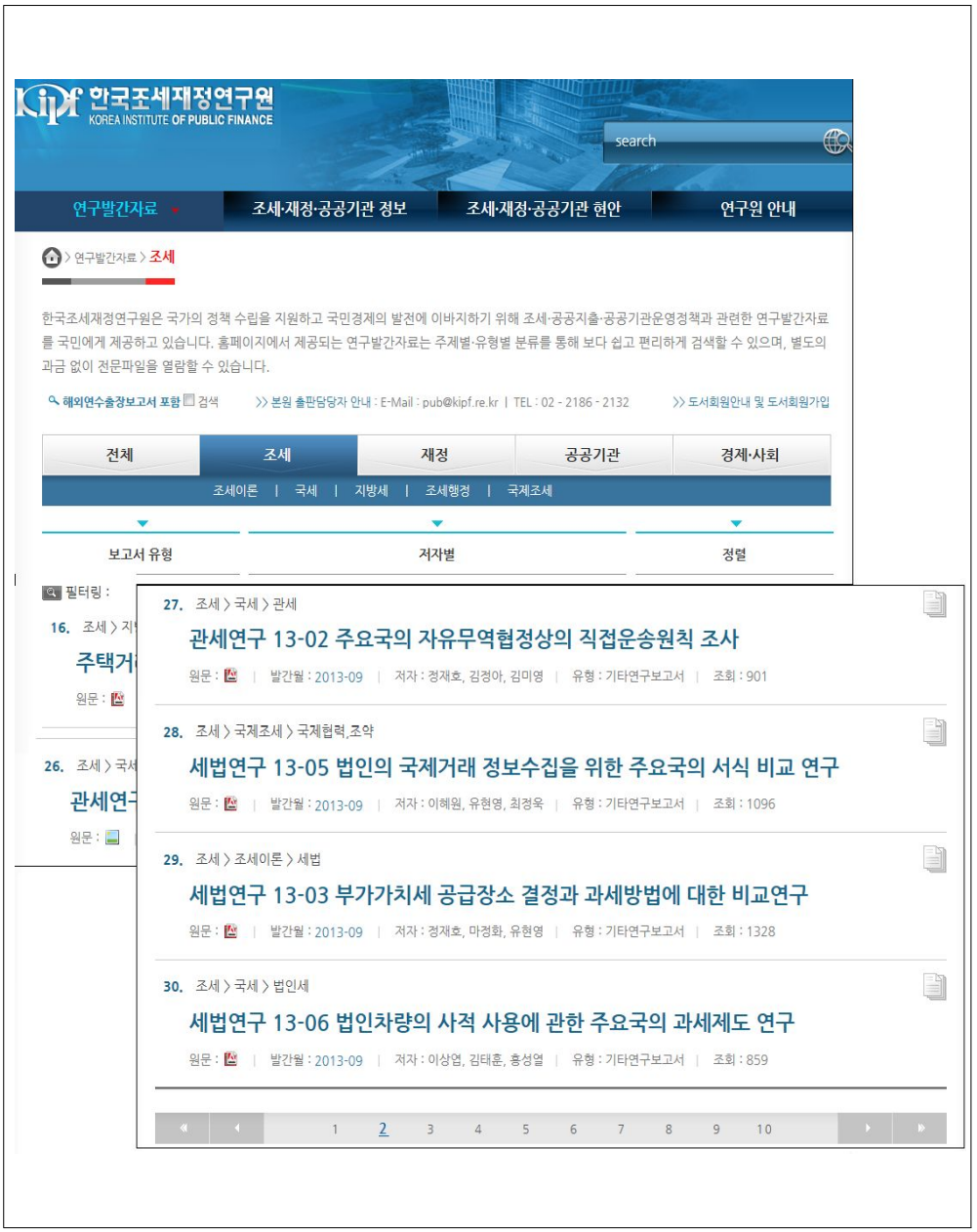
o 추진내용 및 과정

- 성과확산조직 운영의 적절성 및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여부
  · 홍보전략TFT는 연구성과 홍보·확산 전략 및 계획수립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천조직을 분리·운영하여 추진실적을 개선

온라인 실천조직	– 소셜미디어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5명
	– 블로그 기자단	블로그 기사 작성	15명
	–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3명
오프라인 실천조직	– 인쇄물	연구보고서, 배포회원 관리	3명
	– 디지털콘텐츠	보고서 DVD, 홍보비디오	2명



- 홈페이지 등록의 충실성
  ·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연구성과물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총 109건의 연구성과를 등록하였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arch
연구발간자료
조세·재정·공공기관 정보
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연구원 안내
연구발간자료 > 조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정책과 관련한 연구발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발간자료는 주제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금 없이 전문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출장보고서 포함 검색
>> 본원 출판담당자 안내 : E-Mail : pub@kipf.re.kr | TEL : 02 - 2186 - 2132
>> 도서회원안내 및 도서회원가입
전체
조세
재정
공공기관
경제·사회
조세이론 | 국세 | 지방세 | 조세행정 | 국제조세
보고서 유형
저자별
정렬
필터링 :
27. 조세 > 국세 > 관세
관세연구 13-02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원문 : | 발간월 : 2013-09 | 저자 : 정재호, 김경아, 김미영 | 유형 : 기타연구보고서 | 조회 : 901
28. 조세 > 국제조세 > 국제협력,조약
세법연구 13-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원문 : | 발간월 : 2013-09 | 저자 : 이혜원, 유현영, 최정욱 | 유형 : 기타연구보고서 | 조회 : 1096
29. 조세 > 조세이론 > 세법
세법연구 13-03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결정과 과세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원문 : | 발간월 : 2013-09 | 저자 : 정재호, 마정화, 유현영 | 유형 : 기타연구보고서 | 조회 : 1328
30. 조세 > 국세 > 법인세
세법연구 13-06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원문 : | 발간월 : 2013-09 | 저자 : 이상엽, 김태훈, 홍성열 | 유형 : 기타연구보고서 | 조회 : 859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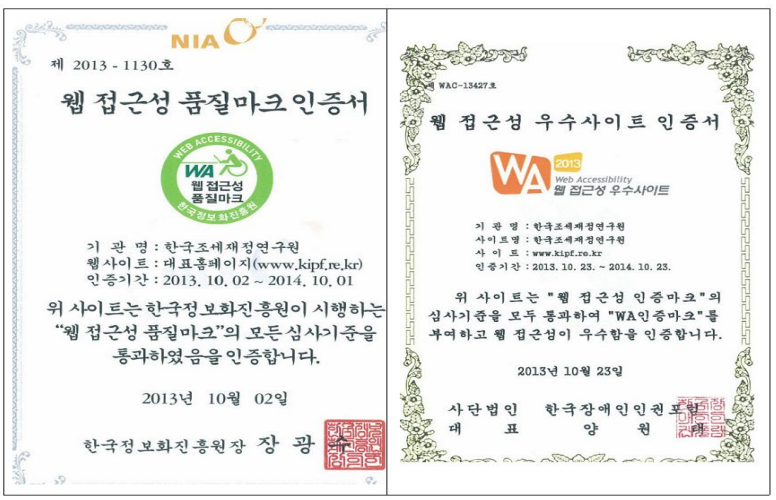
- 연구성과 확산수단의 다양성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기고 19회 및 인터뷰 75회, 인용 등 언론 노출 실적은 618회 등 총 768건에 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2013년 현재 언론홍보 현황〉

<table>
<tr><th>구분</th><th>추진실적</th><th>건수</th></tr>
<tr><td>기고</td><td>서울경제신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시급하다” 외 18건</td><td>19건</td></tr>
<tr><td>방송출연</td><td>KBS 1라디오, “정부의 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외 16건</td><td>17건</td></tr>
<tr><td>인터뷰</td><td>동아일보 “수서발 KTX의 코레일 지분 늘려 민영화 의심 소지 아예 없애자” 외 74건</td><td>75건</td></tr>
<tr><td>연구결과</td><td>경향신문 “증세불가피…조세저항 덜한 부가세가 1순위' “외 617건</td><td>618건</td></tr>
<tr><td>기타</td><td>인사동정 등 기타</td><td>25건</td></tr>
<tr><td>보도자료</td><td>
<table>
<tr><td>1</td><td>1.28</td><td>제30회 공공정책포럼: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td></tr>
<tr><td>2</td><td>2.19</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1차 공동 정책세미나」: 국가부채와 재정준칙</td></tr>
<tr><td>3</td><td>3.5</td><td>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td></tr>
<tr><td>4</td><td>3.13</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2차 공동 정책세미나」: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td></tr>
<tr><td>5</td><td>3.27</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3차 공동 정책세미나」: 정부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화 과제</td></tr>
<tr><td>6</td><td>5.3</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4차 공동 정책세미나」: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td></tr>
<tr><td>7</td><td>5.14</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5차 공동 정책세미나」: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td></tr>
<tr><td>8</td><td>6.7</td><td>「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 제6차 공동 정책세미나」: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td></tr>
<tr><td>9</td><td>6.26</td><td>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td></tr>
<tr><td>10</td><td>7.23</td><td>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td></tr>
<tr><td>11</td><td>10.2</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 새 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 과제</td></tr>
<tr><td>12</td><td>10.29~30</td><td>201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td></tr>
<tr><td>13</td><td>11.5~11.8</td><td>2013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 국제컨퍼런스: Governance, Performance, and the Best Reform Practices</td></tr>
<tr><td>14</td><td>12.10</td><td>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td></tr>
</table>
</td><td>14건</td></tr>
<tr><td colspan="2">총 계</td><td>768 건</td></tr>
</table>

· Off-line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실적은 정책토론회,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세미나, 공공정책포럼 등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대상들을 체계화하여 연구성과를 확산

· 온라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2012년 8월),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확충작업을 진행하였고, 수요자 주도형 확산시스템(소셜미디어, RSS 등)은 콘텐츠 개선으로 접속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확산 노력


NIA

제 2013 - 1130호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기 관 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웹사이트 : 대표홈페이지(www.kipf.re.kr)
인증기간 : 2013. 10. 02 ~ 2014. 10. 01

위 사이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의 모든 심사기준을 통과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13년 10월 0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장 광

WAC-134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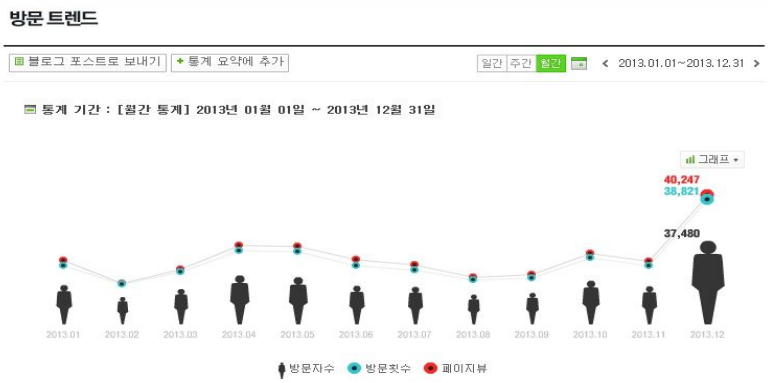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서

기 관 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이트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 이 트 : www.kipf.re.kr
인증기간 : 2013. 10. 23. ~ 2014. 10. 23.

위 사이트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WA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웹 접근성이 우수함을 인증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 표 양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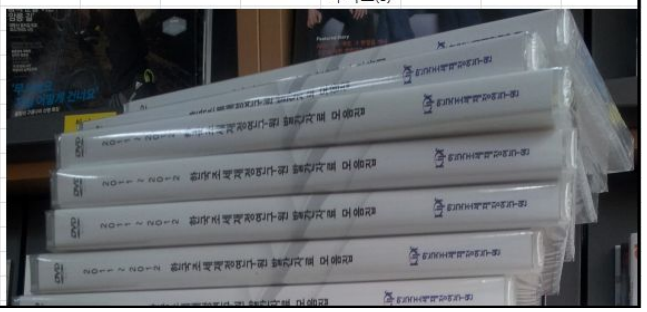
기간	방문자수	방문횟수	페이지뷰
2013.01	17,660	18,859	20,409
2013.02	12,382	13,029	13,490
2013.03	15,848	16,820	17,838
2013.04	21,965	23,414	24,972
2013.05	21,228	23,039	24,591
2013.06	17,367	18,807	20,627
2013.07	16,870	17,420	18,939
2013.08	13,443	14,376	15,292
2013.09	14,233	15,098	15,991
2013.10	19,680	21,081	22,584
2013.11	17,200	18,650	20,100
2013.12	37,480	38,821	40,247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성과확산을 위해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외에 영문페이스북을 개설하여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채널을 확보

□ (팟캐스트 운용)

□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용)

· 연구원 성과물의 적극적인 배포를 위해 2007년부터 발간물 DVD DB를 제작하여, 2013년에는 1,696개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홍보기능 강화

대분류	소분류	데이터수	재정포럼 (F)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p)	세법연구 관세연구 조세동향(T)	공공기관연구 공공기관연구자료(S)	조정장(I)	정책토론회 자료(D)	재정동향 (C)
정부부처	청와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청(지방청)								
	국세청(교육원)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교육원)								

- 정책연구과제의 이슈페이퍼 발간여부

· 조세, 재정,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슈를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재정포럼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원내 정책 전문지인 '재정포럼'의 현안분석에 게재하거나 조세·재정 브리프로 발간

-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연구원에서 수행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범위의 확장 및 응용을 통해 국제학술지 2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8건, 정책전문지(연구기관지) 27건 등 총 37건의 논문을 학술지 및 정책전문지에 게재
  · 가중치를 반영한 연구원 1인당 편수는 1.35편으로 우수한 수준임
  · 특히, 본원은 학술지 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성과급 산정시 국내와 국외, 해당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등 학술지 기고를 적극적으로 권장

2-1-1 리더십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 **추진배경**

-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안문제들에 대해 기관발전 중요성 및 경영 목표와의 부합성·연계성을 고려하여 3대 당면 현안문제 선정
- 전 임직원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함으로서 조직의 화합도모와 생산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최초 윤리경영 사례집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경영윤리 이행

o **추진내용 및 과정**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현안문제	노력과 성과
① 현안이슈의 선제적 대응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요현안이슈의 도출 및 대응 정책방향 설정 • 국문 "KEI포커스" 및 영문 "Research Briefs" 창간 발행으로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 제공 시스템 마련 • 고객지향 연구성과보고회 개최로 연구성과 정책반영 노력
② 연구지원 시스템 효율 향상	•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제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 환경평가검토 인력충원을 통한 사후환경영향 검토 등 업무 강화 • 연구사업확대에 따른 통합 연구통합관리 전담조직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구중심 스마트 행정지원체제 구축 및 정부3.0 지원 • 청사관리팀 신설을 통한 세종시 청사이전 준비 전담
③ 인력운영의 안정성 제고	• 우수한 고령인재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명예연구위원 제도 운용 • 비정규 우수인력 정규직 전환계획(안) 마련으로 세종시 이전 대비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개선 및 해당분야 전문성 제고

  · 과제 발굴·수행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환경이슈 지역 현장방문 실시, 원내 조직의 연구역량 증진 강화 노력 등을 통해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 대내·외적 소통 능력
  · 전 임직원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함으로서 조직의 화합도모와 생산적인 조직문화 구축

구 분	제도 및 내부시스템	내 용
① 기관운영 공식 제도	• 연구운영회의	연구운영위원, 노조지부장 참여·의견제시
	•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노동조합원과 보직자간 대화창구
	• 윤리경영협의회	전직원 대상 고충상담 및 처리

구 분	제도 및 내부시스템	내 용
	• 제안제도 운영	전직원 대상 각종 제도·운영 및 업무관련 의견 제안 및 처리
② 정보공유 활성화 시스템	• 직원전체회의	전직원 대상 "알려드립니다, 경영성과보고, 직원동정, 새식구인사" 등을 통한 대화창구 운영(매월 1회 실시)
	• 확대간부회의	각 부서별 보직자, 검사역, 노조지부장 참여 (매월 1회 실시)
	• 부서장 티타임 • 기조실·행정실 팀장 티타임	매주 부서장 티타임(목요일 오전)과 기조실·행정실 팀장 티타임(화요일 오전)을 별도 운영
	• 보직자 리더십 워크숍	보직자 대상 리더십 역량제고 및 윤리경영위한 워크숍 실시
	• 연구직 워크숍	연구직 대상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원 경영 개선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
	• 지원직 워크숍	기획조정실, 스마트행정실, 연구지원부서의 업무개선 토론 및 의견수렴
③ 밀착형 소통 채널	• 기관장과의 대화의 시간	각 부서별, 직급별 기관장과의 격의없는 대화 및 대면활동 실시
	• 독서토론회	전직원 대상 자율 참여하는 독서토론 실시(월 1회)
	• 외부초청 강연 프로그램	전직원 대상 소양강화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강연 실시
	• 전직원 연찬회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화합활동

· 국가정책에의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적인 활동

구분	내용	결과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효율 제고, 녹색 ODA 발전, Rio+20 정상회의 대응계획,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 녹색성장위원회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참여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포럼 논의 과정별 이슈개발 등 포럼 운영관련 주요 정책 결정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그린시티 선정 사업에 기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 개최 종합 계획 및 환경 분야 종합 자문
포럼	기후변화포럼	국회 기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운영 자문
	미래환경연구포럼	국내 환경관련 아젠다 토의
	환경리더스포럼	미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관련 주제 발표 및 토의
	탄소세 입법 공청회	주제발표 (국내 탄소세 도입방안 및 정책과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세계리더스보전 포럼	제주 환경수도 전략 관련 논의
간담회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환경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환경정책 아젠다 선도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녹색경영관련 자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동북아 환경협력관련 자문
세미나	고급관리자 과정 강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환경정책 강연
	창조경제종합토론회	창조경제 아젠다 선도

· 국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지역발전 연구원과의 정례적인 교류체계 운영, 국책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체계 심화, 학계·산업계·시민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기관장의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 윤리경영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성과

구분	'13년 주요 추진성과
내부운영 규정 및 제도	•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 • 연구윤리준수 자가체크 리스트 및 연구표절검사시스템 도입 •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시 직원행동지침 마련 • 내부 일상감사 금액 하향조정 규정 개정 • 전문가 활용지침 개정 • 직원신규채용규칙 개정 및 신규채용요령 마련 • 자율연구시행규칙 개정 • 직원평가 규칙 개정 •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 보직자 리더십 및 윤리경영 교육실시 • 전직원 대상 윤리경영 외부전문가 특강 실시 •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원 웹 홈페이지 및 내부게시판 구축 • 윤리경영 CoP 운영 • 전직원 성희롱예방 교육 2회 실시
내부시스템 구축	• 내부 포탈 실시간 일상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연구운영회의에 직종별/직급별 구성과 검사역/노조지부장 참여 •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항공마일리지 운용 •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규채용(인사)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 구성기준 마련·운용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및 실적

연구윤리규정 개정	• **이중 게재 추가·보완** : 연구자 본인의 과거 출판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중게재 행위를 포함 • **적용대상(직원→연구과제)** :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 • **사전예방의무 명시** :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연구과제 점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표절심사대상 구체화 및 세부지침 근거조항 마련** :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하며, 표절판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함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동등한 권리 명시** :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고,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함
연구발표 등에 있어서의 윤리 및 진실성 검토지침 제정	• 연구윤리규정 제8조의 2에 따른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조항 마련 •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 원칙,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이중게재·출간의 제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판정 • **연구데이터 및 연구자료의 관리** : 원칙, 연구데이터의 명확한기록, 연구자료의 보관 및 보안유지 • **연구윤리 교육 및 점검 등** :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인쇄본 보고서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등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 윤리경영 학습동아리(CoP) 개최(6회) – '13년도 연구윤리 교육 자료집 제작/배포 : 연구직 전직원 – 연구윤리 실무담당자 교육 실시(연구개발인력교육원)

	–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 시 지속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연구사업 관리 규정 개정 : 연구보고서 감수양식 변경(연구윤리 준수 세부 항목 명시)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및 연구표절검사시스템(copy killy) 도입
연구윤리 확보 또는 준수를 위한 교육 활동	• 보직자 리더십 및 연구윤리 교육 개최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설명회 2회 개최 – 연구윤리규정 개정 내용 및 연구발표 등에 있어서의 윤리 및 진실성 검토지침 제정 내용 설명 및 교육 • 연구윤리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임시직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지침 교육 실시 • '13년도 연구윤리 교육 세부 추진계획(안) 및 교육과정 마련
연구윤리 확보 또는 준수 활동과 실적 및 성과 등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기본연구과제 등) • 위탁기관 및 외부전문가 활용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수령 •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본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검토 실시 • 감수결과 총 12건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발견을 통하여 사전 예방 실시 • 자가체크리스트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 추진배경

- 새정부의 부처 조직개편, 일자리 중심 국정과제(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률 70%)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증대, 본원의 역할 강화 요구
- 부처간 장벽 제거, 협업 국정과제 추진으로 부처별 구획된 정책을 상호연계하는 종합적 연구 활동 수행 요구
- 국정과제 설정으로 세부 실행과제들의 구체화에 시간이 소요되어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본원의 전문적 지원 요구

o 추진내용 및 과정

- '2013년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2013년도 연구사업의 방향도 개편
  · 고용·자격제도 연계 촉진 연구 강화(능력중심사회 구현 관련 연구 강화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취·창업지원 연구 강화 필요성)
  · 평생 직업·진로교육 내실화(생애경로 전체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연구 필요성)
  · 취업중심 학습·고용·복지 지원 강화(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화 필요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경영목표(2012-2014년)"에 기초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되, 정책 환경, 전년도 기관평가 및 기관장리더십 평가 결과를 반영, 세부추진과제 신설 및 과제명 변경(방향, 내용 구체화) 등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

〈전년도 대비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 변경 내역〉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신설과제	–	1-2-3. NCS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제 구축
명칭변경 과제	3-1-1. 과제 발굴 및 생성	3-1-1. 과제 발굴·생성 체계화 및 정책수요 부합 제고
	3-1-2. 시스템적인 연구관리	3-1-2. 시스템적인 연구 관리 및 효율화 지속
	3-1-3. 연구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3-1-3.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3-3-1. 정부부처 협력기반 구축	3-3-1. 정부부처 협력기반 강화 및 적극 대응
	4-1-4. 지방이전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4-1-4. 지방이전 대비 종합대책 수립

· 기관당면 3대 현안문제(연구의 질 제고, 기관 내외부 연구협력 강화,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를 선정하여 당해연도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전체 평균 성과목표 달성도: 113%
- 2013년도 경영목표 중 추진과제별, 세부실천과제별 전략적 중요도, 시의성을 부서장들이 평가하여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3대 중점추진과제〉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제 구축(1-2-3) 2.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3-1-3) 3.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3-3-3)

· **(과제1)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제 구축:**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체계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개발 및 활용 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NCS 관련 정책 지원 활동 병행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 직업교육 개편, 정책 수립,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편 지원

· **(과제2)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학술모임, 학술지 지원 등의 지원제도 운영으로 연구역량 강화 유도, 첫 과제책임 수행자 및 신입연구자 관리·지원, 연구윤리 관련 법령 정비 및 조직 체계화, 연구윤리 준수 자체 점검 강화, 기본연구의 심의방식 개선 및 내실화, 우수보고서 및 연구자 포상제도 운영

⇨ 정책 고객의 연구 수요에 대한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위탁사업의 원활한 운영, 국정과제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본원의 위상 제고 도모

· **(과제3)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 국제공동학술행사, 국제기구·유관기관과 협력연구사업,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사례 확산, 해외통신원제도 확대 운영, 영문 자료 발간·배포

⇨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제도 소개 및 발전 노하우 공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발전, 베트남 자격법 수립 및 검정제도 구축,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여 연구동향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추진배경

-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설정과 정책현안 대응 및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연구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
- 또한, 에너지부문에서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융합 신산업 및 시장구조를 창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적 에너지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됨.
-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현안이슈 분석·서비스 체계 운영이 필요
- 조직가치 증대를 위해 내·외부 고객요구를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보강 필요
-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
- 정보보안 대응전략 고도화, 정보보호 대응기반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KEEI 정보보호 체계 및 역량 구축이 필요

ㅇ 추진내용 및 과정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 부원장 산하에 「창조경제연구실」을 신설하여 창조경제 관련 현안 분석 및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 강화
  · 직급, 보직, 부서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 및 현안이슈 대응의 신속성 제고
  · 에너지 현안 및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TF에 연구원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현안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TF’등 7개 TF에 주도적 참여·정책지원
  ·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찾아가는 세미나 운영을 통해 교육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정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전문연구분야에서 시너지효과 창출
    ※ 협동연구 48개, 집단에너지정책포럼 등 7개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
- 내·외부 고객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운영
  · 외부고객(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부처 등) 및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TF’, ‘경영컨설팅 TF’,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TF’ 운영을 통해 Fact-finding 및 제도개선
- 인력수급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유지

· 지방이전을 대비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10.4)하여 ’18년까지 전체 인력규모를 178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인력수급계획을 근거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연도별 채용계획 수립·시행
· 핵심가치 공유, 인재상 정립, 체계적 교육훈련, 관심직무 부여, 보상강화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13년 박사급 8명 채용)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합리성
· 대내외 환경 변화 및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역량강화 목표, 전략, 중점추진 과제, 교육체계, 운영체계 등을 수립·시행(5.8)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3無 Day, 맞춤형 복지제도, 출산기념품·상조용품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외연수, 국내외 취학연수, 자율연구 운영

- 구성원 역량강화 실효성 확보
·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역량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규직원은「차세대 에너지리더 과정」연수참여 등 특화된 교육 시행
·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 설문조사, 피훈련자 성과확산 활동, 이력관리 등을 통해 교육성과 환류
· 5개 분야 217건에 대해 211백만원(전년대비 13.4%↑)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연수 시행

- 제도적 보안 강화 부문
·「보안업무취급규칙」개정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위규자 처벌조항 신설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정비 및 정보보안 세부업무별 책임담당제 정착
· 정보보안 동향보고 정례화 시행(매월 기관장 보고)

- 관리적 보안 강화 부문
· 정보보안 취약그룹 집중관리 등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의 예방활동 강화
· 외부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점검·통제 시행,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승인 획득 조치 시행

- 인적 보안 강화 부문
· 정보보안 교육대상별(기존/신입직원, 분임담당관/담당자) 맞춤형 교육 시행
· 정보보안 외부 전문교육에 능동 참여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보안역량 강화

- 기술적 보안 강화 부문
· DLP, NAC, DDos,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정보보호 인프라 대폭 강화
· 연구원 대표 및 패밀리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 웹 취약점 진단 외부 전문컨설팅 수행(’13.11~12월, ㈜○○○소프트)
· ERP, KMS 등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복원 테스트 정례 시행(매월)

2-2-2 노사관계 선진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추진배경

- 노사간의 갈등요소에 대한 적극적 해소를 통한 조직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의사소통 활성화 및 프로그램 필요
- 노사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무 관련 정보에 대한 확산 필요

o 추진내용 및 과정

- 노사간의 적극적 소통 유도를 위한 상향식 소통프로그램 운영
  : 기관장의 일방적인 하향식 소통이 아닌 상향식 소통프로그램 병행 운영
  · 직원(5인이상 10인 이내)의 자율적인 오프라인 대화신청 방법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
  · 열린원장실 개설(내부시스템 운영) 운영으로 노사간 온라인을 통한 소통마련
- 노무관리 전문성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한 최신 노무 정보 제공
  · 자문 노무법인 및 노무교육기관을 통한 최신 노무정보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받아 직원 및 노조에게 공지하여 노무관리의 역량강화 및 중요성에 대한 확산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 또한 노사간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직급별 직원간담회, 노사협의회, 노사실무 협의회, 각종 의견수렴, 멘토링 제도운영, 워크숍 등)의 운영으로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 추진배경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예산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음

o 추진내용 및 과정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기본연구사업비 중 정부부처 제안과제 사업비 비율은 '13년도 30.9%, '14년도 45.8%로써, 적정 편성기준인 30% 이상을 충족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사업비 비율은 '13년도 30.0%, '14년도 24.8%로써, 적정 편성기준인 30% 이내를 충족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은 '13년도 10.1%, '14년도 10.1%로써, 적정 편성기준인 10~20% 범위 이내를 충족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이사회 승인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총 7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완료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 전액을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회의비 및 전문가활용비, 인쇄비 위주로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음.
-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 퇴직금 적립은 매분기별 적정하게 적립하였으며,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 분산되어 운영하였음.
- 총인건비 규모 준수 여부
  · 정규직 인력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으로 인건비를 적정집행(96.9%)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결원인건비 및 순수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권인건비 외 항목에서 지급한 인건비성 경비를 일체 발생하지 않았음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 전직원 '13년 인건비 인상율은 '12년 대비 2.67%로써 정부기준 임금인상율 2.8% 이내를 충족하였음.
- 결원인건비 준수 여부
  · 연중 결원인력(퇴직자 4명)에 대한 결원인건비 산정액(121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액 차년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이월편성하였음.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실 자체수입 초과분(100.0%, 138백만원) 중 1) 퇴직금부족분 적립(27.9%, 38백만원), 2) 연구개발적립금(39.1%, 54백만원), 3) 능률성과급(33.0%, 46백만원)으로 적정집행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하였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한국개발연구원

o 추진배경

- KDI는 1999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2010.6)'에 따라 선도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
- 2010년 6월 제도개선을 통해 연봉체계의 적정성을 보완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제105차 이사회, 2010.12.29)'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침을 준수함.

o 추진내용 및 과정

-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준수
  · 연구회의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전 2010년 6월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수당(중식비, 조사활동비 등)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기타수당으로 단순화
  · 호봉테이블 등 근속기간과 연동되어 성과연봉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총 연봉에서 성과연봉 비율이 50%를 넘어 지침에 상회하는 성과연봉제를 운영
  · 1년간 반기별로 시행하는 연구실적 및 정성평가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기본연봉 운영하고 있으며 차등률이 ±2%로서 지침을 준수
  · 기본연봉의 등급간 인원배분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최저 등급 각각 10% 이상, 특정등급이 50% 초과하지 않고 좌우 대칭분포를 이루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 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 이상 배분하지 않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차등지급율이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음.
  ·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 이상 배분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음.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 성과연봉의 차등율 설정시 직군별로 간부직과 비간부직으로 구분하고 간부직과 비간부직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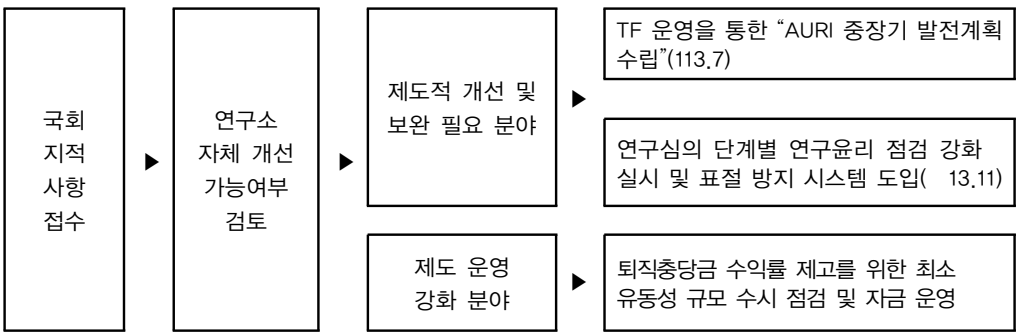
ㅇ 추진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연구 및 기관 경영분야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ㅇ 추진내용 및 과정

- 국회 지적사항
  · 국회(`12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공통지적사항(연구분야 2건, 경영분야 1건)
  · 연구과제 선정, 인력 배정 및 연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
  ·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과정



  · 국정감사 공통지적사항 중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AURI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13.4)하여 목표별(총8개) 중장기 발전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구사업 및 조직을 운영하고 정기적 연구윤리 점검 실시(표절방지시스템 Copy Killer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상품별 안정성과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 검토 후 최소 필요 유동성 규모를 월별 검토하여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13년도 퇴직충당금 적립총액의 12.5%를 이자수입으로 충당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전 직원 설명회 개최(지적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 기관 경영목표, 중장기 발정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안) 수립
  ·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통합 운영방안 등 논의(워크숍 개최, AHP분석)
  ·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및 계획(안)에 대한 논의 후 최종 확정

· 보직자 중심의 점검단을 구성하여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중간점검 실시
· 개선계획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 개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단계별 조치 사항
평가결과 전직원 전파	• 평가결과 지적사항 전직원 공유
분야별 개선계획 수립	• 평가 지적사항 분석 후 담당 부서별 개선계획 수립
전직원 워크숍(설문 실시)	• 부서별 개선계획 검토 / 범주화 후 순위확정
개선계획 점검 및 피드백	• 부서별 개선계획 점검 / 개선에 따른 문제점 갈등·조정

- 평가결과 개선실적과 연구 및 경영분야에의 활용 정도

지적·권고 사항		기관 운영 활용
연구분야	연구보고서의 실천전략 제시	○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보고서별 실천전략 제시 – 각 실천전략에 대한 공동실행 전략 제시
	거시적 포괄적 연구 필요	○ AURI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사업에 대한 연차별 기획 및 수행을 통해 거시적 포괄적 연구 수행
	연구윤리 제고	○ 연구윤리제고를 위한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표절방지 시스템 도입·운영(Copy Killer) – 각 사업별 최종보고서 평가 시 각 과제별 표절검사서 제출 – 표절 점검 후 연구책임자에게 점검 내용 통보 및 대응방안 제출
	연구평가 점수 편차 보정	○ 연심회(착수,중간,최종) 및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하일 경우, 위원간 점수차 30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 – 기존 평가위원 점수 최고, 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정하는 규정 보완
경영분야	학술지 논문 제개 지원	○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안 마련 및 올해의 논문상 포상
	정부역점시책 준수	○ 정부 역점시책 준수를 위한 실행 방안 수립 및 중감 점검 실시
	외부 고객 요구채널 확대·점검	○ 홈페이지 “고객소리함” 개설 및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점검회 정기 개최
고객만족도	정부고객	○ 부처 업무관련 회의, 세미나 등 참석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 부처 요청사항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체계 마련
	산·학·연 고객	○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 채널 강화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홈페이지 “고객소리함” 개설하여 대응 중요도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한국노동연구원

o 추진배경

- 고용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이를 조직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고용 노력, 효과적인 청년인턴제 운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함.

o 추진내용 및 과정

-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노력

· 2013년 2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여 의무고용률(2.5%) 준수

· 채용공고문에 장애인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각 단계별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수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연 1회)

- 청년인턴제 개선 노력

· 퇴직자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하여 배정인원 상시 유지

· 연초 청년인턴 4대 운영계획(목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1) 채용박람회 참가 독려 → 총 3회 박람회에 12명 참가

2) 연구원 내부 채용 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청년인턴운영지침(가산점 부여) 제정

3) 고충해결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 총 3회 인턴직원 간담회 개최

4) 청년인턴역량평가 확대 실시 → 월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우수자 포상

· 청년인턴제 주요 운영실적

구분	내용
근무관리	○ 매월 출근관리부, 시간외근무기록부 작성 ○ 월 1회 근무수행능력평가 실시하고 성적우수자에게 포상(2명) ○ 부서장과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남녀 각 1명(팀장급)의 고충해결담당관 지정하여 애로사항 수시 청취 및 해결 ○ 경영지원팀 주관 인턴직원 간담회 개최(2회) ○ 경영진 주관 인턴직원 간담회 개최(1회) ○ 동호회 활동 지원(6명, 600천원)

구분	내용
교육지원	○ 직무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연구과제 공동참여 기회 제공(연구인턴 9명) ○ 토론회, 세미나 지원 등 현장 참여형 교육 실시(7회) ○ 연구원 자체 교양교육 실시(집합 5회, 시청각 2회) ○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총 5명, 1,000천원)
취업활동지원	○ 계약만료자 전환 채용(계약직 1명) ○ 청년인턴 경험자를 대상으로 채용가산점 제도 마련 ○ 채용박람회 정보를 공지하고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취업활동 독려(3회, 12명) ○ 외부 채용시험이 발생할 경우, 특별휴가제공(11회)

- 국가유공자 고용 노력

· 채용공고문에 국가유공자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각 단계별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수시)

· 2013년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시행

·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를 만6세에서 만8세 이하(취학자녀는 초교 2년 이하)로 확대 시행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한국교육개발원

o 추진배경

-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필요성 대두
- 차별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여 동일한 기준, 자격에 따라 차별 없는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등을 실시함.

o 추진내용 및 과정

- 계약직원 이상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
  · 동일한 채용 전형 및 경력 평정을 거쳐 임용하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 계약
  · 연봉 이외 성과급 및 기타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연구사업별 단기 채용 위촉직원은 제외)
- 차별 없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 동일한 기준, 자격에 따라 교육, 복리후생적 현물, 금품, 편의시설, 휴가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 비정규직의 차별 요인 사전 방지
  · 정규직과 동일한 내부 규정 및 지침 적용
  · 비정규직의 인사관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 비교]

구분	정규직	계약직	위촉직
연봉	동일 기준	동일 기준	별도 기준
근무평정/성과급	동일 기준 실시, 동일 기준 지급	동일 기준 실시, 동일 기준 지급	실시하지 않음. 표준적용 지급
교육훈련, 연수	동일 기준	동일 기준	동일 기준 (연구연가, 해외연수 제외)
복리후생적 현물	동일 기준	동일 기준	동일 기준
금품 (복지포인트,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동일 기준	동일 기준	동일 기준
편의시설, 휴가 등	동일 기준	동일 기준	동일 기준

* 위촉직 : 연구사업별 단기채용 비정규직